

동아시아의 어제를 보고, 오늘을 느끼며, 내일을 바라본다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하영선 편



**EAI**  
동아시아연구원

미래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2013 년에 시작한 EAI 교육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 목차

답사일정표	4
나가사키 그 이후, 미국 핵전략의 기원 _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5 ① 태희준
혼란한 시대의 승부사, 스기타 겐파쿠: 근대적 내러티브를 넘어서 _ 데지마	43 ② 김예은
21 세기 패권경쟁의 에피소드를 담다 _ 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	68 ③ 이광민
임진왜란 이후 조일관계의 정상화 _ 한일교류박물관 · 나고야 성터	83 ④ 박지원
19 세기 동아시아 지진의 끝과 시작 _ 일청강화기념관	113 ⑤ 공도영
미국의 EDGE Initiative VS. 중국의 Belt and Road Initiative: 새로운 에너지 동맹의 미래 _ 규슈국립박물관	136 ⑥ 이수지
사진 및 참고자료(영문 보고서)	152

# 답사일정표

시간	1월 7일	1월 8일	1월 9일
08:00-09:00	9:30 후쿠오카 도착, 버스 탑승 약 2 시간 이동	호텔 조식 후 출발 약 30 분 이동	08:20 출발 1 시간 30 분 이동
09:00-10:00		9:30-10:30 해상자위대 사세보자료관 (海上自衛隊 佐世保 資料館)	일청강화기념관 (日清講和記念館)
10:00-11:00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長崎原爆資料館)	약 30 분 이동	
11:00-12:00		도잔신사(이삼평) (陶山神社)	16 분 이동
12:00-13:00	13 분 이동 후 나가사키 짬뽕 점심	약 10 분 이동 규슈 도자기 문화관 (九州陶磁文化館)	가와라소바 타카세(元祖瓦そば たかせ本館) 점심
13:00-14:00		갤러리 아리타 (ギャラリー有田) 점심	이데미즈미술관 (出光美術館)
14:00-15:00	약 15 분 이동	1 시간 10 분 이동	1 시간 20 분 이동
15:00-16:00	데지마 (出島)	15:00-16:30 나고야성 박물관 (일한교류박물관, 名護屋城博物館)	규슈 국립박물관 (九州国立博物館)
16:00-17:00	약 6 분 이동		약 30 분 이동
17:00-18:00	구라바엔 (グラバー園)	약 1 시간 30 분 이동	후쿠오카 공항 도착
18:00-19:00	약 1 시간 10 분 이동	우나기 도큐 (うなぎ徳)에서 식사	
19:00-20:00	호텔 오후쿠라 하우스템보스 도착 (ホテルオークラハウステンボス)	호텔 뉴 오타니 하카타 도착 (ホテルニューオータニ博多)	

# 나가사키 그 이후, 미국 핵전략의 기원

## \_나가사키 원폭자료관

태 희 준  
서울대학교

### 들어가며

1945년 8월 6일 인류 “최초의 핵전쟁“이 일어났습니다(Mandelbaum 1979, 41). 히로시마에 인류의 첫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이죠. 3일 뒤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폭격으로 20 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충격으로 비로소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두 사건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알림과 동시에 핵 혁명(nuclear revolution) 시대의 서막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Little Boy)는 64 킬로그램의 우라늄 236 핵물질로 TNT 13 킬로톤에 상응하는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나가사키에서 팻맨(Fat Man)은 불과 6.2 킬로그램의 플루토늄 239 핵물질로 TNT 22 킬로톤에 상응하는

폭발을 야기했습니다. 두 원자폭탄의 폭발 규모는 당시 재래식 무기로 환산하면 5000 대의 폭격기가 동원되어야 가능했을 수준이었습니다(E. Tashiro and J. Tashiro 1982, 32; Wilson 2013, 67).



사진 1.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입구

이처럼 “전례 없는 파괴력을 가진 신무기”(Truman, 1945)의 발견은 새로운 혁명 시대의 도약을 알림과 동시에 중요한 두 가지 교훈과 경고를 남겼습니다. 첫째, 인류는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고 강압외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절대무기’(Brodie, 1946; Mueller 2010, 18)의 위험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핵무기는 군(軍)과 민(民)의 피해자를 구별하지 않고, 인류 최대의 부도덕한 살상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Morris 1963, 85).

그로 인해 세계는 나가사키 이후 원자력의 남용 방지와 군축을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46년 1월에 국제연합원자력위원회(UNAEC)가 설립되었죠. 이는 국제사회에서 핵무기의 통제를 위해 소련·미국·영국이 오랜 합의과정을 통해 마련한 최초의 해결방안이었습시다. 그러나 원자력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로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추가적인 해결방안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Kissinger 1957, 177-178; Price and Tannenwald 1996, 137). 원자력의 제도적 관리에 대해서 미·소 양국이 대립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미국은 국제연합(UN)을 통해 소련의 동태를 감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반면에, 소련은 미국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결국 원자력의 사용과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어져 전후 세계정치에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을 필두로 양분되었습니다. 특히 유례없는 핵 군비 경쟁이 일어났고 이는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상에도 큰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핵무기의 존재는 미·소 간에 총력전(all-out war)과 전면전(general war)을 억제했습니다. 반면에 제한된 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제한전(limited war) 및 국지전(local war)의 발발을 예방하지는 못했습니다(Halperin 1963, 6, 12-13; Jervis 1984, 150-153). 이는 양국이 상대방 국가와의 전면전을 우려해서 일방이 관여되어 있는 분쟁에 개입하기를 피했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인류사에서 핵무기의 등장으로 국제사회가 양차대전 이후 지향했던 평화와 안보전략은 서로 상반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Mandelbaum 198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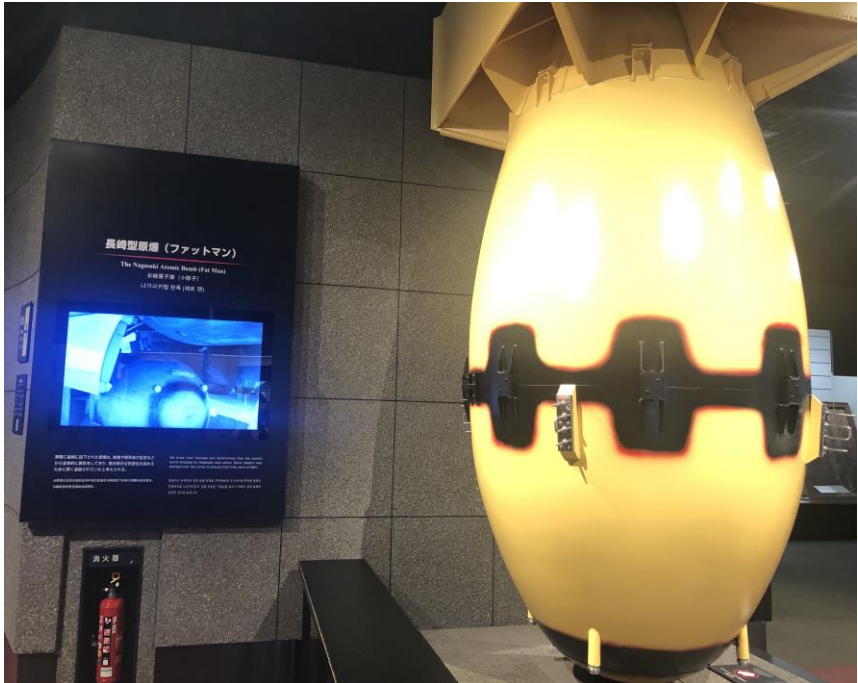


사진 2.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 팻맨(Fat Man)



## 핵전략의 기원 연구

핵전략의 기원(origins of nuclear strategy)이라는 주제는 기존문헌에서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입니다(Glaser 1990, 7). 기존의 핵 담론은 절대무기의 영향을 존재론적·목적론적·규범론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할 뿐, 핵전략이 기원한 배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죠. 무엇보다 담론 중심의 설명에서는 같은 개념이나 이론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저비스(Jervis, 1979)는 핵전략에 관한 이론을 세 가지 학파로 구분합니다. 첫째, 브로디(Brodie, 1946; 1959), 만델바움(Mandelbaum, 1979; 1981)과 왈츠(Waltz, 1981; 1990)를 중심으로 형성된 ‘핵혁명이론’(nuclear revolution theory)이고, 둘째, 스나이더(Snyder, 1965)의 ‘안정성-불안전성 역설’(stability-instability theory)에 근거해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 간의 ‘대치의 위험성 문제’(problem of risk)를 다루는 핵무기의 ‘위협조작·확산·제한전 이론’(nuclear risk manipulation, escalation, and limited war theory)입니다. 셸링(Schelling, 1960), 칸(Kahn, 1960; 1966)과 할페린(Halperin, 1963) 등이 이 학파를 대표하는 이론가들이죠. 끝으로, 저비스 본인을 포함한 핵전략의 세 번째 학파는 탄넨왈트(Tannenwald, 2007), 뮐러(Mueller, 2010), 윌슨(Wilson, 2013) 등 최근에 핵무기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핵무기의 ‘무관계성 이론’(nuclear irrelevance theory)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들 각 학파는 서로 상이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핵무기의 특성에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학파의 경우 핵무기의 파괴력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전쟁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분쟁에 관여하지 않게 한다고 주장하죠. 즉,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에는 대치나 위기의 위협이 적으며, 핵확산이 국가로 하여금 분쟁에 참여할 의지를 낮춤으로써 전쟁의 빈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Sagan and Waltz, 1995). 미국의 초기 핵전략도 핵무기의 이러한 특성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 두 번째 학파는 반대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 사이의 대치의 위험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핵무기의 특성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무기로 만들며, 그로 인해 핵전쟁 확산의 위협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핵무기 미보유국 및 상호 간에 핵 선제공격(preemptive-strike) 및 예방전쟁(preventive war) 위협과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위협을 제기하면서 분쟁을 격화시켜 전쟁의 위기를 조작한다고 봅니다. 이 학파의 주장은 결국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 간의 대치는 위기술이나 벼랑끝전술이 지배적인 형태가 되어 강압적 협상과 제한전 수준에서의 힘의 투사로 이어진다는 논지인 것이죠.

마지막인 세 번째 학파의 주장은 저의 연구와는 관련이 낮음으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요점은 미국 핵전략의 기원에 대한 연구가 거의 부재하고, 같은 역사자료와 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이 기존문헌에서 일관되게 발견된 수수께끼라는 점입니다.



사진 3.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기까지의 경과

한편, 핵전략의 발전사는 핵기술 및 핵무기의 발전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서술되어 왔습니다. 이례적으로 ‘핵전략의 기원’

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만델바움(1979) 역시 “전략은 기술을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미국의 핵전략이 1953 년에서 기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첫째, 미·소가 1953 년 이전까지는 충분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둘째, 핵무기의 생산에도 뚜렷한 전략적 의도가 보이지 않았으며, 셋째, 미·소의 군비경쟁이 1953 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죠. 무엇보다 1952 년 11 월과 53 년 8 월은 미국과 소련이 각각 수소폭탄을 실험한 시점이었습니다. 수소폭탄은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보다도 700 배의 위력을 가진 무기였다는 점에서 기존문헌은 수소폭탄의 개발을 “세계정세에 대변환을 일으킨”(Ibid) 혁명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전을 위해 생산된”(Ibid) 원자폭탄과 달리, 수소폭탄은 사용되어서는 안 될 무기로,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라는 전략적 목적을 처음으로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죠(Kahn 1960, 15).

나아가 기존문헌이 핵전략의 발전사에서 주목한 변곡점은 소련과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실험했던 1957 년과 58 년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새로운 무인 핵 투발수단의 개발로 세계는 즉각적인(instant) 핵공격의 위협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Brodie, 1959, 158-160). 탄도미사일은 핵공격 개시의 소요시간과 목표물 요격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핵공격에 대한 예측과 방어를 어렵게 했고, 세계 각지에 있는 목표물의 동시다발적 타격을 가능케 했습니다. 또한, 장거리 폭격기와 달리 탄도미사일은 은폐 및

보호가 용이한 전략무기였죠. 이러한 점에서 미·소의 핵·안보전략은 다시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수정되었고, 기존문헌은 수소폭탄과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핵전략의 발전사에서 서막이 되는 “판도라의 상자”로 평가해왔습니다(Schwartz 1995, 37; Lindley-French and Boyer 2012, 500).

그러나 핵전략의 역사를 핵무기 기술의 발전사와 결부시켜 설명하는 기존문헌의 방식은 역사를 특정한 기준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재구성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문헌은 ‘핵억제’(nuclear deterrence)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군사적·국제정치의 구조적 조건(Glaser 1990, 19-21)들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시점을 핵전략의 기원으로 삼았던 것이죠. 요컨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위력을 비교하고, 폭격기와 탄도미사일의 전략자산으로의 가치를 비교해서, 이들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들에 의미를 사후적으로 부여한 것이죠.

따라서 저는 기존문헌의 결과론적 설명방식이 아닌, 각 정책이 결정된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한해서 당시 정책결정자에게 보고되었던 정보 및 당시의 국제정세만을 참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면밀한 1차 사료조사를 통해 역사가 전개된 과정을 상세히 기술(detailed narrative)하고 시기적으로 발견되는 규칙성과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정추론(process-tracing)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즉, 핵전략의 기원을 목적론적으로 혹은

결과론적으로 설명해온 기존 방식과는 달리, 저는 핵전략의 발전을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핵전략이 발전하게 된 맥락을 파악해보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핵전략의 기원은 이미 수립된 전술과 정책에서 찾는 것이 아닌, 전략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상황에서 찾아야한다고 보았습니다.

## 트루먼 행정부의 퍼즐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핵전략의 발전사에서 기존문헌은 미·소가 수소폭탄을 실험한 1953-54 년과 탄도미사일을 실험한 1957-58 년 시기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공개된 자료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 생산량이 1951 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이할 점은 미국의 핵억제 전략을 핵무기의 개발사와 결부시켜 분석한 기존 방식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련이 첫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던 1949 년을 새로운 분기점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표 1과 표 2에서 살펴는 바와 같이, 1949 년과 1950 년에는 특이할만한 변화 없이 무난하게 유지되던 미국의 핵무기 생산 및 핵 예산 추이가 1951 년과 52 년에 급격한 전환을 보이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나가사키 이후부터 미국의 핵무기 생산 추이를 10 년간 추적해보면, 1949 년과 52 년에 생산량이 크게 급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의 경우 소련의 핵무기 개발 성공 시점과 연관시켜 설명해볼 여지가 있죠. 그러나 핵무기 기술의 발전사에서 1951 년의 두 번째 현상과는 결부시킬 만한 사건이 없습니다. 특히 1951 년의 전환은 1949 년보다도 변화의 폭이 큰 사건이었죠. 당시 미국은 핵무기 400 여 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듬해 400 기를 추가로 생산하여 전년대비 두 배에 가까운 보유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핵무기의 생산 증가율 자체는 1949 년에 더 높았는지 몰라도 한 해에 추가된 핵무기의 절대적인 증가량은 1952 년이 다른 해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미국 국방부 및 공군의 7 개년(1947-1954) 핵 예산 추이를 살펴는 표 11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요약컨대 두 기관의 1951 년도 핵무기 예산 및 예산의 증가율은 다른 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공군 예산: 452%, 국방부 예산: 261%) 나타났습니다.



사진 4.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서 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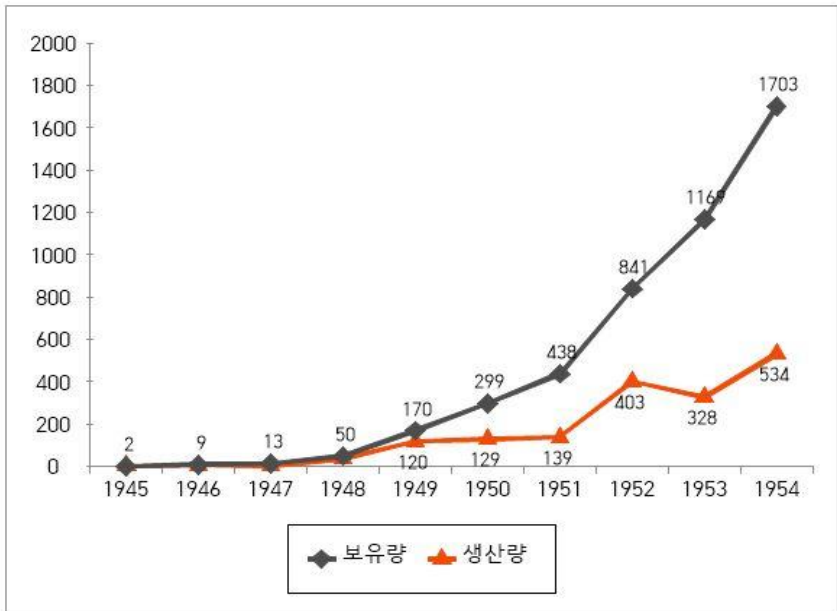
[표 11 미국 국방부 및 공군 핵 예산 연도별 추이, 1945-1954<sup>24)</sup>

년도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공군 핵 예산	5.04	5.76	20.37	16.97	76.72	74.04	83.32	69.79
증가율	-	14%	354%	-16%	452%	-3.5%	113%	-16%
국방부 핵 예산	34.84	26.38	45.49	39.22	102.2	115.1	-	-
증가율	-	-23%	172%	-14%	261%	126%		

(단위: 십억 달러)

[표 21 미국 핵무기 보유량(Nuclear Weapons Stockpiles) 추이, 1945-1954<sup>25)</sup>

년도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보유량	2	9	13	50	170	299	438	841	1,169	1,703
생산량	2	7	4	37	120	129	139	403	328	534



(단위: 기)

그래서 저는 재검토의 필요성이 발견된 새로운 연구시기에 미국의 핵무기 대량생산능력(mass production capacity)이라는 변수가 야기했을 수 있는 차이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즉, 1951년 이전과 이후에 미국에서 운영되었던 핵 생산시설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는 대량생산능력이 가능했던 시기와 불가능했던 시기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1942년부터 57년 사이에 운영된 미국의 주요 핵 생산시설은 이미 1952년 이전에 완공되어 가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논문 참고) 나아가 1952년에 추가된 시설의 경우 대개는 9월과 11월 이후의 시점에 완공되거나 운영되기 시작해서, 1952년의 미국의 핵무기 생산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생산능력(production capacity)의 차이에서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 발생한 대전환은 미국의 의지(willingness)가 만들어낸 변화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은 기존문헌에서는 간과되었던 점이고, 저의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퍼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미국 핵전략 문헌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트루먼(Truman) 행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해보았습니다. 핵기술의 발전사에 입각해서 서술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1950년부터 53년 사이의 급변시기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즉, 저는 특정 핵 담론에서 제기하는 핵전략의 성립 조건이 충족된 시기에서 핵전략의 기원을 찾지 않고, 가장 근본적으로

미국이 핵전략의 필요성을 직접 인식하게 된 시점, 혹은 그것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결국, 위에서 살핀 자료를 통해서는 오히려 미국이 최초로 핵무기의 대량생산을 결정하게 된 시점이 1950-51 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특히 해당 시기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가설이 도출됩니다. 즉, 핵전략의 기원이 되는 미국의 위협인식 변화에는 한국전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이 저의 가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핵 혁명 시대에 핵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 **핵전략의 초기 기원: 나가사키와 한국전쟁 사이**

2 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종전 이후 세계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옹호하는 국가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 전망하면서 전후의 국제사회를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940 년대 초중반의 시점까지만 해도 소련은 독일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과 적극 협력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스탈린은 공산주의 진영의 기반인 코민테른(Comintern)을 자발적으로 해체하려 했기 때문이죠. 이에 미국 지도자들의 소련에 대한 기대는 맹목적인 믿음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소련이 더 이상 세계혁명을 조장하는 데 나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45-1947, 8).

소련에 대한 당시 미국 행정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문서 중 하나는 1945년 12월 1일 국무부의 ‘미국 대외전략 발표문’입니다. 해당 문서는 소련과의 대외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소련을 모든 국제관계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묘사하고 있고, 나아가 소련과의 관계 개선은 여타 국가들보다도 특별히 더 많은 ‘성실함(diligence)과 인내심(patience)’을 요하는 일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45-1947, 37). 무엇보다 해당 보고서의 말미는 미·소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보여주는 확고하고 친구와도 같은 신뢰행위는 경우에 따라 친구 관계보다도 더 끈끈하게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능케 한다.”며 ‘소련의 동기에 대한 의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일방적인 공격행위조차 꺼려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Ibid.).

물론, 전후 미국이 소련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가사키와 한국전쟁 개전 사이의 기간 동안 미국은 소련과의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하기도 했죠. 1948년 4월 2일자 중앙정보국(CIA) ‘분석평가실보고서’(Office of Research and Estimate Report, ORE)에는 1948년 소련이 전쟁을 개시할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소련이 서유럽과 근동지역을 단기간 내 점령할 수 있는 군사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소련군의 기동성이 뛰어나고 육해공군 간 군사연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근거로 소련의 전면전 개시

가능성을 마냥 낮게만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죠. 그러나 소련이 국가 전반의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진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때까지는 전면전을 최대한 회피하려 들 것이라는 이유에서, 결국 미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개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결론짓습니다.

미국 지도부의 낙관적인 세계인식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됩니다. 1948년 9월 28일자 및 1950년 4월 6일자에 발간된 분석평가실보고서(ORE)에서도 미국은 소련의 핵무기 개발 시기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시기보다 늦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죠. 미국은 소련이 핵무기 제작을 위한 핵실험의 성공 시기를 1950-53년으로 추측했고, 1953년까지는 핵탄두 100기를 생산하고 1954-55년까지는 200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으나 그러한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미국이 소련이 핵폭탄 200기를 생산하는 시점에 기준을 두었던 이유는, 미국의 주요 전략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즉각적인 위협을 끼칠 수 있는 핵무기 최소 수량이 200기라고 스스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ORE 60-48: Threats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28 Sep. 1948; ORE 91-49: Estimate of the Effects of the Soviet Possession of the Atomic Bomb upon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upon the Probabilities of Direct Soviet Military Action, 6 Apr. 1950).

이러한 평가는 유사 시기 다른 국가기관 보고서에서도 발견됩니다. 1950년 4월 14일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보고서는 시기별 소련의 핵무기 개발 수량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1950년에는 10-20 기, 1952년에는 45-90 기, 1954-1955년에는 200 기가 될 것으로 재평가했죠(NSC 68: U.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 April 14, 1950).

트루먼 행정부의 이러한 여유는 1949년 국무부(DOS)의 ‘핵에너지에의 국제사회 통제에 관한 문제의 결론’(Conclusions on Problem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Control of Atomic Energy)이라는 제목의 메모에서도 나타납니다. 해당 문서는 다음과 같이 소련의 전면전 개시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죠: “소련의 전면전 개시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현 시점, 소련의 지도자로서 정점에 도달해 있는 스탈린이 영토 침탈과 국가 위협과 같은 무모한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다. 소련의 정치체제 자체가 변화를 겪지 않는 한 소련이 미국을 상대로 선불리 전면전을 걸어들 국내정치적 유인은 없다.” (Policy Planning Staff of the DoS: Memorandum Draft, Formosa, 7 Aug. 1950). 무엇보다 1950년 4월 25일 시점에도 미국은 여전히 중국과 소련의 공산진영에 대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즉 자유진영의 우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주소련 미국대사관의 합동정보위원회(Joint Intelligence Committee)의 보고서(Soviet Intentions)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 같은 확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는 첫째, 소련 군부가 1950년을 기점으로 전쟁부와 해군부로 분리됨으로써 종전 군에 대해 소련 지도부가 갖고 있던 절대적 영향력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는

점, 둘째, 소련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해에서의 군사작전 경험이 전무함으로 해군의 전략적 운용범위가 근해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 셋째, 일각에서는 소련의 공군력이 유럽 대륙을 단기간에 점령할 수 있을 만큼 발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보유하고 있는 전력자산(특히 원자폭탄 수량)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가능성이 낮은, 무엇보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없는, 희망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점이었습니다(FRUS Report: Enclosure 514 - Soviet Intentions, 25 Apr. 1950).



사진 5. 나가사키 평화기념상

결국 1940년대 미국의 안보전략 및 대소련 인식은 미국의 증대된 국제적 영향력과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다소 희망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유일한 핵보유국(nuclear monopoly)이었던 미국이 그려낼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죠.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미국의 이 같은 희망적 태도는 한국전쟁의 발발, 특히 중국이 참전하게 되는 1950년 10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변화합니다. 이는 미국 지도부가 종전 직후 수립했던 대소련 핵전략이 사실상 이상적인 낙관론에 불과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 **핵전략의 형성기: 38도선 붕괴 이후 위협인식의 변화**

앞선 1기의 시기, 즉 나가사키에의 원폭 투하 시점부터 한국전쟁의 발발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의 대(對)소련 위협 인식은 대체로 미국 스스로가 관리 및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어왔습니다. 군부도 나름대로는 유사시 소련과 소련의 위성국가들에 핵공격을 전개할 22곳의 요충지를 정해두고 있었죠(Epstein 1987, 14).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1950년 6월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특히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하는 시점부터 세계 공산진영에 대한 미국의 위협인식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난 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소련의 한국전쟁 개입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논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한국전쟁 발발 초기에 작성된 해당 보고서는 소련의 참전 가능성을 극히 낮다고 보았고, 소련은 미국이 한국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희망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사전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죠(NSC 73: Draft Estimate Possible Further Danger Points in the Light of the Korean Situation, 1 Jul. 1950).



사진 6.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앞

반면에 소련이 한반도 외의 지역, 예컨대 유럽을 침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7월 27일자 보고서는 만약 소련이 유럽을 침범할 경우 미국은 그 즉시 ‘ 전면전쟁계획’(General War Plan)을 수행할 것이며,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경우 주춤하지 않고 과감히 핵전력을 활용하여 적을 격퇴시킬 것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NSC 73: Draft. The Position and Actions of the U.S. with Respect to Possible Further Soviet Moves in the Light of the Korean Situation, July 27, 1950).

이러한 자신감으로 국무부 정책기획실(PPS)에서는 1950년 7월과 8월 세 건의 메모가 작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메모는 7월 10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소련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다면 소모전의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에서 소련과 세계전쟁을 시작할 필요는 없으므로 즉각 철수하고 대전쟁계획(General War Plan)에 따라 전쟁에 대비할 것을 피력했습니다(PPS: Memorandum - U.S. Courses of Action in the Event Soviet Forces Enter Korean Hostilities, 11 Jul. 1950). 이후 7월 24일자 메모에서는 소련과 불가피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이 전면전, 나아가 세계전쟁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8월 18일자의 메모에서는 러시아의 지도부가 결국에는 평화와 생존을 위해 타협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PPS: Memorandum - NSC 76-U.S.

Courses of Action in the Event Soviet Forces Enter Korean Hostilities 24 Jul. 1950).

이처럼 위의 시기까지만 해도 미국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소련과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이 우위를 점해 전쟁을 승리로 종결하거나, 전쟁이 전면전 나아가 세계전쟁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고 양국이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종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메모 가운데 소련의 핵무기와 소련이 그것을 전쟁에 사용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소련의 핵무기 전력과 운용능력 자체를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1950년 8월 8일 조지 케넌(George Kennan)이 국무부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죠. 그는 소련이 한국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소련에 비해 군사적 우위에 있으므로 중국의 참전 또한 50%의 가능성을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후 약 2개월의 시간이 흐른 9월 초까지도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만일의 사태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참전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회의를 표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오히려 국내정치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참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던 것이죠(NSC 81: U.S. Courses of Action with Respect to Korea, 1 Sep. 1950).

그러나 이처럼 소련, 그리고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미국의 입장은 1950년 9월 말을 기점으로 급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9월 21일 일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서에서 미국은 소련이 위성국가들 내 전략적 거점지에 비행장과 전쟁에 대비한 보급로를 구축하고 있음을 상세히 논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소련의 전쟁 개시 파급력을 한국전쟁의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인식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NSC 68/1: U.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 30 Sep. 1950). 이는 즉 미국의 소련에 대한 위협인식이 종전에 비해 더 높아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소련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이 1950년 이전 시기에서는 전면전이었던 것과 달리, 해당 보고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련 자체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NSC 68/1: U.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 21 Sep. 1950).

비슷한 위협인식은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1950년 10월 11일자 국무부 정책기획실(PPS)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군사력이 현 시점보다 증강되지 않는 한 소련과 협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소련과의 전면 대치가 미국에게도 버거울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후 11월에 발간된 두 차례의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중공군의 개입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나아가 미국의 소련 및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종전 시기보다도 더 고조되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 11 월 15 일자 보고서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미국은 해당 보고서에서 중공군과 소련 공군의 지원이 12 개월간 지속되고 소련과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공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매우 회의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보고서에서 미국은 소련이 세계전쟁까지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반도,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미국은 빠른 시일 내에 ‘명예롭게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다시금 적시하고 있습니다(NSC 81: Draft. U.S. Courses of Action with Respect to Korea, 4 Dec. 1950).



사진 7. 나가사키 원폭기념관 內

무엇보다 1951년 1월 16일에 작성된 국무부 정책기획실(PPS) 문서에는 나가사키에의 원폭 투하부터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이전 시점까지 미국이 보여주었던 이상적인 기대, 그리고 미국의 군사전력 우위에 대한 확신이 그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미국은 소련과의 전쟁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극단적인 상황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NATO를 위시한 서구사회가 소련(그리고 중국)에 대적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문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유진영이 소련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복 또는 힘의 상대적 우위에 따라 소련의 팽창 목표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소련뿐만 아니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전쟁을 시작하기 불리한 상황이다. 미래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겠지만 경쟁자와의 국력차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로 인해 점차 좁혀질 것이다. 만약 소련의 군사전력이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게 된다면 제 3 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둘째, ‘따라서 미국은 꼭 전쟁의 수단으로 소련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 즉, 소련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낡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무력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서구진영에서 진행해온 경제제재로는 소련과의 전쟁을 억제하기 부족하다’(PPS: Draft, Frustrating the Design, 16 Jan. 1951).

특기할 만한 점은 종전에 비해 미국이 소련의 핵 역량과 전쟁 개시 가능성 등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 기저에는 소련에 대적하는 상대편으로서 미국과 NATO 가 당시 상황으로는 소련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다른 사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1 년 2 월 1 일, 국무부 정책기획실(PPS)은 서유럽 국가들이 소련을 스스로의 힘으로 대적할 역량이 부족하며, 유고슬로비아와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해야만 소련의 세력이 서유럽과 북아프리카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주장에는 소련이 유고슬라비아를 2-3 년 이내 침공할 것을 우려하는 미국의

위협인식이 담겨있었습니다(PPS: Draft, Course of Action to Meet the Threat of Soviet Action in the Spring of 1951, 1 Feb. 1951).

이처럼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자신의 군사력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소련의 핵전략과 핵무기 운용능력은 종전에 비해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소련이 미국의 핵역량을 곧 따라잡을 것을 심각한 국가위협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 밖에도 상기한 것처럼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소련보다 월등한 군사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소련 외교노선을 논하는 국무부 정책기획실(PPS) 문서의 1951년 2월 2일자 메모 역시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독점이 깨지고, 1952년 중순이 되면 소련이 서구국가들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는 파괴할 만큼의 위협이 되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PPS: Memorandum - A National Strategy for the Soviet Union, 2 Feb. 1951).

또한, 4월 25일자에 작성된 또 다른 메모에는 소련이 자유진영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듯 보여도 사실 소련은 위협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국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소련의 전면전 도전에 대해 효과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자유진영의 군사력 증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양 진영 간 군사역량의 간극이므로 공산진영에 저항하는 자유진영의 군사력을 필사적으로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소련이 유럽대륙을 실질적으로 침공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것만이 나름의 효과적인 억제 기제가 됨을 설명합니다(PPS: Embassy Dispatch 626, Embassy Estimate of Soviet Intentions to the Department of State from Moscow, 25 Apr. 1951).

## 나가며: 미국 핵전략의 기원

트루먼 행정부 시기 핵무기의 대량생산 변이현상(1951-1953)에 대한 원인은 결국 미·소의 핵무기 개발사보다도 한반도의 역사에서 발견됩니다. 1949년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직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이는 미국에게 있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수였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변수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고전하게 되면서 한국전쟁이 소모전의 성격을 지니게 된 점입니다. 그러한 두 가지 변수에 직면해 미국의 대소련 위협인식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미국 스스로도 자신이 한반도에서 처한 상황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의 연구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소련에 대한 미국의 위협인식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다른 과정으로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즉, 소련이 원자폭탄 혹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던 시점보다도, 미국의 대소련 위협인식은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의 시점부터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기한 두 변수에 직면해, 기존에는 낙관적으로 평가했던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죠. 요컨대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4월까지도 소련을 실질적인 핵위협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련의 핵위협이 도래할 시기를 대략 1955년 즈음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ORE 91-49: Estimate of the Effects of the Soviet Possession of the Atomic Bomb upon the Probabilities of Direct Soviet Military Action, 6 Apr. 1950). 그러나 그러한 미국의 낙관적인 태도는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한 직후인 동년 11월에는 다시 찾아볼 수 없게 되죠. 당시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는 소련의 핵 보유량을 정확한 숫자로 보고할 뿐만 아니라, 조만간 소련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능력까지 확보하게 될 위협과 무엇보다 미·소가 2년 이내로 위태로운 대치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NIE-3: Soviet Capabilities and Intentions, 15 Nov. 1950).

때문에 미국은 자신이 핵전력에 있어 여전히 소련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많은 논의 끝에 기각 시키게 되죠. 예를 들어 합동참모본부(JCS)의 1953년 3월 24일자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사용이 가져올 긍정적 결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유엔군에게 야기되는 위협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핵 위협을 세계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미국의 핵공격 이후 소련이 중국에 대해 지원에 소홀하다면 이는 중·소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4월 15일자 국가안전보장회의 NCS-147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사용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들을 강조함으로써 군부의 의견과는 대치되는 결정을 합니다(Report by the 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to the JCS, 24 Mar. 1953). 그러한 결정의 근거로는 만약 핵무기의 사용이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오히려 핵무기의 억제 기능이 감소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유사시 세계안보전략 차원에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가 부족할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즉, 미국은 자신의 핵무기 보유고가 충분하지 못할 때, 소련과의 전면충돌을 피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NSC-147: Analysis of Possible Courses of Action in Korea, 15 Apr. 1953).

이처럼 트루먼 행정부 시기 미국이 핵무기의 대량생산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전쟁의 두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중·소 공산진영에 대한 미국의 위협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의 대량생산을 통해 자국 및 세계 자유진영의 안보를 꾀했던 것이죠. 따라서 트루먼 행정부의 핵무기 대량생산 정책결정은 미국 초기 핵전략의 전술적 목적에서 기원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가 미국 핵전략의 기원을 다시금 추적해보고자 했던 이유는 단순히 관련한 논의가 학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대한 연구가 핵전략을 다루고 있지만, 그 누구도 핵전략의 기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엇보다 핵의 개발사 측면에서의 접근법으로는 1951년의 변이현상을 설명할 수 없음에도, 아무도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핵전략의 기원에 대해 제가 제시하는 새로운 역사적 해석은 기존문헌의 한계를 새롭게 보완해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핵전략의 발전사에서 트루먼 행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해보았습니다.



사진 8. 나가사키 원폭기념관 출구

## 참고문헌

### 1. 1 차 문헌

- 국방군사연구소. (1997). 《한국전쟁 자료총서》. 제 1 권(Docu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Korea I(1948-1950)).
- \_\_\_\_\_. (1997). 《한국전쟁 자료총서》. 제 3 권(Docu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China & Japan(1948-1954)).
- \_\_\_\_\_. (1997). 《한국전쟁 자료총서》. 제 4 권(Records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of the Department of State, Country & Area Files Korea I(1947-1951)).
- \_\_\_\_\_. (1997). 《한국전쟁 자료총서》. 제 7 권(Records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of the Department of State, Country & Area Files Japan & USSR(1947-1954)).
- \_\_\_\_\_. (1997). 《한국전쟁 자료총서》. 제 8 권(Records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of the Department of State, PPS Members – Chronological Files(1947-1954)).
- \_\_\_\_\_. (1997). 《한국전쟁 자료총서》. 제 10 권(Records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of the Department of State, Working Papers II(1951)).
- \_\_\_\_\_. (1997). 《한국전쟁 자료총서》. 제 14 권(Intelligence Report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ORE Report(1947-1950), NIE Report(1950-1954), SCI Report(1949-1955)).

\_\_\_\_\_ . (1997). 《한국전쟁 자료총서》. 제 14 권(Intelligence Report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SE Report(1950-1953), NIS Report(1950-1954), SIT Report(1948-1954), Memoranda(1948-1954)).

Office of Joint History and Office of the Joint Chief of Staff. (1998).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1(1945-1947).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_\_\_\_\_. (1998).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2(1947-1949).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_\_\_\_\_. (1998).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3(1950-1951 The Korean War Part One).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_\_\_\_\_. (1998).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3(1951-1953 The Korean War Part Two).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_\_\_\_\_. (1998).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4(1950-1952).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

. (1998).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5(1953-1954).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 2. 단행본

### 가. 국문

김범철. (1990). 《한국전쟁과 미국》. (서울: 평민사.)

이중근. (2013). 《6 · 25 전쟁 1129 일》. (서울: 우정문고.)

정용식. (2012). 《핵의 세계사: 스탈린 대 트루먼, 박정희 대 김일성, 아인슈타인에서 김정은까지》. (서울: 아카이브 출판사.)

### 나. 번역본

Wilson, Ward. (2013). 《핵무기의 다섯 가지 신화(The Myths about Nuclear Weapons)》. 임윤갑 옮김. KODEF 안보총서 70. (서울: 플레닛미디어.)

### 다. 영문

Brodie, Bernard. (1959). *Strategy in the Missile 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Cantelon, Philip L., Richard G. Hewlett, and Robert C. Williams. (1984). *The American Atom: A Documentary History of Nuclear*

- Policies from the Discovery of Fission to the Present.* (Pennsylvania: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Ferrell, Robert H. (1996). *Harry S. Truman and the Bomb: A Documentary History.* (Wyoming: High Plains Publishing Company.)
- Glaser, Charles L.. (1990). *Analyzing Strategic Nuclear Polic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lperin, Morton H.. (1963). *Limited War in the Nuclear Ag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Hardin, Russell, Mearsheimer, John J., Dworkin, Gerald, and Goodin, Robert E.. (1985). *Nuclear Deterrence Ethics and Strate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 Jervis, Robert. (1984). *The Il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Jones, Matthew. (2010). *After Hiroshima: The United States, Race and Nuclear Weapons in Asia, 1945-196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hn, Herman. (1960). *On Thermonuclear Wa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tzenstein, Peter. (1996).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issinger, Henry A. (1957).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Norton & Company.)
- Lindley-French, Julian and Yves Boyer. (2012). *The Oxford Handbook of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ndelbaum, Michael. (1979). *The Nuclear Question: The United States and Nuclear Weapons, 1946-197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1). *The Nuclear Revolution: International Politics before and after Hiroshim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eller, John. (2010). *Atomic Obsession: Nuclear Alarmism from Hiroshima to Al-Qaed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is, Abraham and Robert P. Crease. (2007). *J. Robert Oppenheimer: A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wartz, Stephen I.. (1998). *Atomic Audit – The Cost and Consequences of U.S. Nuclear Weapons since 1940*.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Tannenwald, Nina. (2007). *The Nuclear Taboo: The United States and the Non-use of Nuclear Weapons Since 194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shiro, Elke and Tashiro, Jannes K.. (1982). *Hiroshima Menschen nach dem Atomkrieg – Zeugnisse, Berichte, Folgerungen.* (Nördling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Williams, Robert C. and Cantelon, Philip L.. (1984). *The American Atom: A Documentary History of Nuclear Policies from the Discovery of Fission to the Present, 1939-1984.*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3. 정기 간행물

Brodie, Bernard. 1946. “The Absolute Weapon: Atomic Power and World Order.” *Science Education*. Vol. 30(4). pp. 243-244.

Dingman, Roger. 1999. “Atomic Diplomacy during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3(3). pp. 50-91.

Geller, Daniel. 2012. “Nuclear Weapons and War.” in J. A. Vasquez (Ed.). *What Do We Know About War?*.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Group. pp. 139-164.

Haworth, Alida, Sagan, Scott and Valentino, Benjamin. 2019. “What do Americans really think about conflict with nuclear North Korea? The answer is both reassuring and disturbing.”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75(4). pp. 179-186.

- Herken. Gregg. 1980. "'A Most Deadly Illusion': The Atomic Secret and American Nuclear Weapons Policy, 1945-1950."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49(1). pp. 51-76.
- Lieber, Keir, Press, Daryl. 2009. "The Nukes We Need." *Foreign Affairs*. Vol. 88(6). pp. 1-28.
- Norris, Robert S., and Hans M. Kristensen. 2009. "Nuclear Notebook: U.S. Nuclear Warheads, 1945-2009."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65(4). pp. 72-81.
- 
- \_\_\_\_\_ . 2013. "Global nuclear weapons inventories, 1945–2013."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65(5). pp. 75-81.
- Press, Daryl, Sagan, Scott and Valentino, Benjamin. 2013. "Atomic Aversion: Experimental Evidence on Taboos, Traditions, and the Non-Use of Nuclear Weap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7(1). pp. 188-206.
- Rosenberg, David Alan. 1983. "The Origins of Overkill - Nuclear Weapons and American Strategy 1945-1960." *International Security*. Vol. 7(4). pp. 3-71.
- Schwartz, Stephen. (1995). "Four Trillion Dollars and Counting by the Nuclear Weapons Cost Study Project Committe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51(6).

Trachtenberg, Marc. 1989. "A "Wasting Asset": American Strategy and the Shifting Nuclear Balance, 1949-1954." *International Security*. Vol. 13(3). pp. 5-49.

Wilson, Ward. (2007). "The Winning Weapon?: Rethinking Nuclear Weapons in Light of Hiroshim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1(4). pp. 162-179.

# 혼란한 시대의 승부사, 스키타 겐파쿠 - 근대적 내러티브를 넘어서 \_ 데지마

김 예 은

고려대학교

## 들어가며

동아시아의 근대는 그야말로 굴곡진 시간이었습니다. 급격한 서구와의 접촉과 근대화, 제국주의, 그리고 전쟁.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는 현재, 위안부 문제, 북한 문제, 영토분쟁 등을 두고 씨름하는 한, 중, 일 삼국에는 여전히 근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동아시아의 근대를 질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근대화의 길로 들어선 일본의 사례를 들여다 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이 조그마한 인공 섬 데지마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사진 1. 다리에서 보는 데지마

유럽인이 처음으로 일본에 발을 디딘 것은 16 세기 중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교사들, 특히 중국과 교역하던 포르투갈 상인들은 처음엔 히라도, 이후에는 나가사키를 거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곳 데지마는 1636 년 이 포르투갈 무역상들을 위해 지어진 인공섬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외국인들에 대한 경계와

감시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는데, 급기야는 작은 반도에 운하를 파 다리 하나로만 연결해 놓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데지마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지요. 1637-8 년에 걸쳐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시마바라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의 주체는 세금 정책에 불만을 품은 낭인들과 카톨릭 교도 농민들이었지요. 그 결과 1639 년 당시 쇼군이던 도쿠가와 이에미츠는 모든 포르투갈인들을 추방합니다. 그리고 1641 년 히라도에 머물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상인들을 데지마로 강제 이주시킴과 동시에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꼭 필요한 인원 외 일본인의 데지마 출입은 금지되었고, 네덜란드 선원들 역시 데지마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2 년 혹은 4 년에 한 번 에도로 올라가 쇼군을 알현하는 것 이외에는요. 이 독특한 관계는 1855 년 일본과 네덜란드가 근대적 개항 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또 일본은 54 년 미일화친조약 전까지 중국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두 국가와만 교류를 했던 것이지요. 사고쿠(鎖國), 쇄국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1904 년 항만개량공사를 하면서 매립되어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나가사키 시 사업의 일환으로 20 년에 걸쳐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웠던 곳을 다시 파내어 부채꼴 모양을 다시 재현했다고 해요.

얼마나 중요한 곳이길래 그렇게 공을 들여 복원한 것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데지마로 상징되는 일-네덜란드 관계가 일본

근대사에 남긴 아주 특별한 족적, 란가쿠(蘭學), 난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사진 2. 복원된 데지마 입구

## 오란다의 공부, 난학

1690 년 나가사키를 통해 일본에 들어온 독일인 학자였던  
엔겔베르트 캠페르(Engelbert Kaempfer)는 2 년간 일본에 머무르며



일본의 사회, 경제, 식생 등 다양한 기록을 남깁니다. 쇼군을 알현하기 위해 에도에 다녀오며 거친 여러 도시들에 대한 감상 역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나가사키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짧게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융성한 일본의 가장 먼 구석에 위치해 있는 이 곳은, 지역의 곡창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제는 외국인들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거나 얻기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 도시는 상인, 여관이나 가게 주인, 공예가, 지주나 부자들이 거의 없는 반면, 일반 시민들이나 몸으로 일을 해 생계를 유지하는 낱품팔이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산세가 험하고 에도, 교토 등 일본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나가사키는 쇄국 이후 경제적으로 크게 쇠퇴합니다. 당시 에도 일본의 주변부였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중에서도 데지마는 특히 비좁고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 세기와 19 세기에 걸쳐 데지마와 나가사키는 배움의 성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난학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의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학문이 융성하면서였습니다. 19 세기 양학(洋學)에 대체되기 전까지 난학의 발전은 일본이 서구로부터 배우고 또 그들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려 했던 독특한 발자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 마에노 료타쿠(前野良沢), 나카가와 준안(中川淳庵)의 《해체신서(解体新書)》 발간입니다.

## 경험적 지식의 시작, 해체신서

각각 나카쓰 번, 오바마 번의 번의이자 친구였던 마에노 료타쿠, 스기타 겐파쿠는 모두 네덜란드에 관심이 있었으며 그 영향을 받은 ‘오란다류 의학’을 행해 오던 의사들이었습니다. 이 둘은 각자 다른 경로로 독일인 의대 교수 요한 아담 쿨무스(Johan Adam Kulmus)가 쓴 《타펠 아나토미아》라는 해부서를 입수했는데요, 그 이후 1771년 스기타는 형장에서 사형수의 사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후와케(腑分) (해부)에 참관을 초대받습니다. 스기타가 급하게 연락을 전한 끝에 만나게 된 마에노와 스기타는 서로 같은 책을 가지고 왔음을 알게 되고 ‘손을 맞잡고 감격했다’고 합니다. 실제 해부된 신체의 모습을 보니 기존 한방 이론과는 전혀 달랐고, 그들이 가진 책과는 놀랍도록 일치했지요. 형장에 널린 뼈를 주위 확인해보니 그마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기타는 그의 회고록에서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형장에서 돌아오던 길, 스기타와 마에노, 나카가와 세 사람은 “의술로서 … 그 바탕이 되는 몸의 진짜 구조를 모른 채 지금까지 하루하루, 이 업을 해왔다는 것은 면목이 없는 일이다”며 한숨을 쉽니다. 대략적이라도 인체 구조를 판별하면서 의료를 해야 할 것이라며, 《타펠 아나토미아》 만이라도 직접 번역해내고 싶다는 스기타의 말에 마에노는 적극 동의합니다. 본인이 나가사키에 유학한

적이 있으며 네덜란드어도 조금 알고 있으니 함께 읽어 보자고 제안한 것이죠.



사진 3. 데지마에서 발제

마에노 외에 네덜란드어 지식이 전혀 없었던 세 사람은 바로 다음 날부터 마에노의 집에 모여 《타펠 아나토미아》의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리를 맞대도 문장 하나조차 풀 수 없는 날이 많았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예를 들어 ‘코는

후루헛헛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해석할 때, 마에노가 구해 온 소책자에서 ‘나뭇가지를 쌓아 놓으면 후루헛헛도’ ‘먼지가 쌓이면 후루헛헛도’ 라는 문장으로부터 그 의미를 유추하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실로 악전고투였지만, 한 문장을 해석해냈을 때의 기쁨을 스기타는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놀랍게도 3 년이 지난 1774 년, 이 지리한 싸움의 결실이 ‘해체신서’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덜란드어를 깊이 공부하고자 했고 완벽한 번역에 힘을 쓰던 마에노와는 달리, 스기타는 본인이 “뭐든지 대충하는 성격”이라고 우스개소리하듯 빨리 책을 출간하는 데 목표를 뒀다고 합니다. 그의 목표가 네덜란드어에 정통하는 것이 아닌, “인체 구조라는 아주 중요한 것이 중국 의서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대강의 사실”을 알리고 실제 치료와 의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학자로서의 성향이 강했던 마에노는 《해체신서》의 저자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 차례 그를 설득해도 통하지 않자, 스기타는 모임에 참여했던 이들 중 고위층에 속했던 이시카와 겐조(石川玄常)와 가쓰라가와 호슈(桂川甫周)를 저자 이름에 올립니다. 당시 스기타는 6 년 전 네덜란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실은 흥모반이라는 책이 서양 알파벳이 실렸다는 이유로 발금 처리를 당한 것을 염두에 두어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고위층의 자제들을 저자로 참여시킨 것은 예상되는 반발로부터 어느 정도의 완충을 마련하려고 했던 시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체신서》 발간 약 일 년 전 《해체약도(解體略圖)》라는 제목으로 일부 해부도를 떼내어 광고지 형식으로 먼저 출간한 것, 본격적 출판 전에 쇼군에게 먼저 책을 진상한 것도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시작은 해부 의학서의 번역이었지만, 난학의 외연은 의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난학은 당대의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으로, 네덜란드와 관련된 학문을 총칭했습니다. 서구의 제국주의가 팽창하면서 난학은 그 본래 뿌리인 의학 외에 국제정치적 성향을 띠기 시작합니다. 1792년 러시아 사절 렉스만이 홋카이도에 내려와 통상을 요구하고 돌아간 이후, 막부는 이를 ‘북변 문제’라고 부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유일한 외부로의 창구인 네덜란드어 문서를 이용해 러시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마에노 료타쿠를 비롯한 난학자들에게 러시아 관련 문서를 번역하게 합니다. 난학이 의사들이나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지사의 일부로 여겨지게 된 것이지요. 1808년 네덜란드 선박을 쫓아온 프랑스의 파에톤(Phaeton) 함이 나가사키항에 포격을 하면서 외세에 대한 대응이라는 과제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해군 전술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데지마로 사람이 몰려들면서 스기타 등이 꽃피운 난학은 이른바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사진 4. '경험적 지식'의 시작

## 사상적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이 짧은 이야기는 실로 놀랍습니다. 언어 지식이 전무하거나 초보적인 사람 셋이 모여, 실증과 실리에 대한 열정만으로 문명 간의 대화를 성취해 낸 이 이야기는 곧 일본 근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로 서구를 알려 하고, 또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일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의 일본이 스기타와 난학을 높게 평가하는 데에는 후키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영향이 큼니다. 그는 야시장에서 우연히 스기타의 잘 알려지지 않은 회고록 《난학사시(蘭學事始)》를 발견하고 다시 펴냈다고 하는데, 그 서문에 다음과 같이 실었습니다. “우리들은 선배들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보는 듯했고, 그 강단과 용기에 놀랐으며, 그 성심성의에 감동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근대화의 내러티브에 희생당해야 했던 식민지 조선의 역사를 떠올린다면, 후쿠자와의 열광적인 감격으로부터는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난학이란 학문 또는 네트워크가 피어나게 된 그 토양은 무엇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를 위해 난학의 출발점이 된 스기타 겐파쿠, 그의 목소리를 통해 당시의 일본 사회를 이해해보려 합니다.

한방의학학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해체신서》의 내용에 반발한 한방의들은 스기타를 강하게 비난합니다. 이에 대응해 그는 책을 펴낸 이듬해, 대화 형식으로 쓴 《광의지언(狂醫之言)》을 펴냅니다. 그 곳에서 그는 자신을 “의사들의 역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지나(당시 중국의 다른 표현)의 성인들이 화이(華夷)를 분명히 구분해 백성을 가르친 것은 중화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경멸하기 위함이 아닌, 자기 나라의 습속이 약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에서 나타난 스기타와 그에 대한 기존 한방의들의 인식 격차의 크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진 5. 테지마에서 발제 2

“본디 중화는 성인, 현자의 나라입니다. 하 · 은 · 주의 선왕들이  
예약을 세우고 문물을 밝히고 가르침을 세계에 펼치니 사방의  
오랑캐도 그것을 신봉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의학에 대해 말하자면  
… 그 법이 이미 분명하여 수천 년에 걸쳐 민중의 질병을 고쳐  
왔습니다. 그러니 이 의학의 길에는 이제 뭐 하나 결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기타라는 소인이 이상한 것을 좋아하여



성현의 글을 의심하고 서양 오랑캐의 글을 믿어 지금까지 우리 사이에 전해져 온 귀중한 법을 새삼스럽게 어지럽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진정 우리 의사들의 역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선이나 오키나와라면 중화에서 떨어져 있다고 해도 크게 멀지 않고 그곳의 책도 중화와 같은 글로, 때로는 고대 성인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키타가 배우고 있는 것은 세계 서북 끝에 있는 나라 것으로, 중화로부터 구만리나 떨어진 그야말로 언어가 안 통하는 나라 것입니다. 태어나서 성인의 도를 들어 본 적도 없는 야만국 중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나라로, 그 풍속도 우리와는 크게 다릅니다. 그 의술도 어느 정도인지 뻔합니다.”

“대개 세상의 썩은 유학자, 돌팔이 의사 등은 이 천지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동양의 두세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지나를 만국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얼마 안 되는 그 서적들을 읽고 막연히 오랑캐는 원래 그 습속 중에 예악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디 예악 문물은 그로써 존귀한 것과 비천한 것을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법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존비의 구별이 없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예악이 없겠습니까? 공자는 ‘오랑캐에게도 군주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주나라 시대의 의관이 좋다 하여 이를 예컨대 적도 아래의 보르네오나 수마트라 등에서 행한다면 백성은 그 더위에 참을 수

없어서 아마도 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 반드시 지나의 것이  
좋다고 하지 말고 각각의 풍토에 적절한 것을 좋다고 해야  
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지나의 성인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천지에 본래 갖추어져 있던 것이 도입입니다. … 하물며  
일본의 썩은 유학자, 돌팔이 의사들은 지나 서적이 말하는 대로  
중국을 중토(中土)라고 말합니다. 원래 대지란 하나의 큰 원으로,  
만국이 그 위에 기거하고 있으니 각각의 나라가 있는 곳은 모두  
중심입니다. … 지나 또한 동해 한 구석의 소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기타의 상대방으로 설정된, 당시 스기타 본인이 받았을  
비판들은 당시 일본을 소중화(小中華)로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  
주자학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지요. 반면 더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해 스기타가 얼마나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입니다. ‘지나’ 와 ‘중화’ 라는 용어  
차이에서부터 극명히 드러나듯 그의 인식은 완전히 중화의 그것에서  
벗어나 있지요.

일본에도 주자학이 일찍부터 소개되었습시다만, 일본 사회는  
선종 불교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주자학은 에도 시대,  
그 중에서도 16세기 중후반에 들어서야 막부의 지배층에 유학자들이  
들어서며 통치 철학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합니다. 물론 불교와의 긴장  
상태는 유지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막부를 섬기며 유학자 시대의

시작을 알린 하야시 라잔(林羅山) 역시 삭발을 해야 했죠. 그러나 일본에서 통치 철학으로서의 주자학은 완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양명학, 고문학 등의 강력한 분파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국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17 세기 말부터 18-19 세기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광의지언에서 볼 수 있듯 한방의들은 한문으로 공부를 하는 지식인, 즉 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의료를 행하며 경험적 현실을 접하는 프랙티셔너이기도 했지요. 이런 점은 ‘의학은 실질을 중시한다’는 스기타의 인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바로 이 의학이라는 영역에서 스기타와 같은 난방의들과 한방의들의 엄청난 격차가 생겼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합니다.

17 세기 초 포르투갈과 스페인 선교사들에 의해 다양한 의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쇄국 이후 남아 내려오는 의학 기술을 남만의학, 이후 들어온 네덜란드 인들이 전한 의술을 오란다류 의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스기타 역시 이 흐름의 일부였지요. 그의 스승을 가르친 사람은 쇄국 당시 개종 및 개명을 당한 포르투갈 의사이자 선교사였습니다. 이 의료 행위는 대중적으로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유학의 발전과 맞물려 기독교에 대한 의심과 감시가 심해지기 전인 16 세기 말에는, 다이묘가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례가 있을 만큼 외세에 대한 경계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에도와 교토에 병원이 세워져 많은 수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쇄국 이후에도 서양의 의료만큼은 존재했습니다. 스기타는 남만류와

오란다류를 같이 행하던 니시가 매우 인기가 좋아 후일 막부 전속 의사로 기용될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만학과 오란다 의학은 ‘학’이었지만 ‘학문’은 아니었습니다. 스기타가 적고 있듯 초기 네덜란드와의 교류를 맡은 통사들은 카타카나로 소리를 외워 의사소통을 하는 데 그쳤고, 오란다와 남방 의학은 모두 이 통역의 영역에 속했습니다. 쇄국 이후 기독교를 극도로 경계한 막부가 일본 안에서 외국의 문자를 읽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수교한 지 약 백년이 지난 시점에 요시무네 막부가 이 금서령을 완화하면서 네덜란드 서책이 점차 유입됩니다.

스기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로부터 들어온 서양 물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반면 문자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세상만사는 언젠가는 때가 오는 법인지라” 나가사키 통사들의 서책 수입에 대한 요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홍모반》의 사례처럼 여전히 서양의 서책에 대한 경계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스기타는 이렇게 느슨한 사회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서양의 일에 특별히 능통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서양의 일을 꺼려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오란다 책 등을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끔씩 나타나는 세상으로 바뀌어 갔다.” 네덜란드 책을 직접 번역하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던 차에

《타펠 아나토미아》를 손에 넣게 되었고, 바로 그 해 시체 해부에 참관하게 된 우연을 가리켜서는 “묘하다고 해야 할까? 어쨌든 해부서를 입수한 것은 난학이 퍼져 나가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고 적었습니다. 결국 함께 해부에 참관한 마에노도 같은 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번역을 결의하게 되는 것을 보면 때가 무르익었던 것이라는 스기타의 판단이 단순한 겉손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해부 자체는 아주 흔한 일은 아니었으나 완전히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마와키 도요(山脇東洋)가 수 차례 시신을 해부해 《장지(藏志)》라는 책을 발간한 것이 십수 년 전인 1759년의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외에도 막부 소속 관의들이 수 차례 해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광의지언》에서 살폈듯 모든 일본의 의사들이 해부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부에 반대하는 《비장지(非藏志)》라는 책이 발간되기도, 죽은 뒤의 내장은 살아있는 사람의 치료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해부무용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해부무용론은 스기타 이후 난학의 주요 라이벌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스기타와 동료들이 그 이전의 선배들과 달랐던 점은 바로 비교였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한방의 이론과는 전혀 달랐고, 가지고 갔던 《타펠 아나토미아》와는 똑같았던 것이지요. 서양 책이 일본인의 신체구조와 들어맞았으니, 선배들이 가졌던 ‘중국인은 서양인과 인체 구조가 다른가’와 같은 의문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스기타는 해부 참관에 초대받은 뒤

“(중국과 오란다의 이론 중)어느 쪽이 정말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 아주 드문 행운이라고 생각했다고 적었습니다. 실증으로써 ‘중국의 것’ 과 ‘서양의 것’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게 된 것이지요.



사진 6. 데지마에서 하영선 선생님과 아이들

## 시대의 승부사 겐파쿠

겐파쿠와 《해체신서》를 따라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은, 겐파쿠가 살았던 18~19 세기 일본이 사상적으로 매우 혼란했다는 점입니다. 16-17 세기에 막부 권력의 핵심에 진출한 주자학이 나라 곳곳에 완전히 자리잡기 전, 양명학, 고증학 등의 경쟁 분파가 힘을 얻었을 뿐 아니라 서학이 유입되고, 국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생겨나는 등 당대의 일본은 물질적 번영과 대도시의 발달이라는 배경 아래 사상의 각축전이 펼쳐지던 장이었습니다.

스기타는 《해체신서》의 출간 당시의 일본 사회를 회상하며, 사람들이 점차 네덜란드의 기술적 발전을 인식하고 있었고, 의사들이 에도에 머무는 네덜란드 상관장을 찾아가는 일이 더욱 잦아지고 있었다고 적습니다. 스기타가 속한 오란다류 의학 역시 발전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해체신서》 작업 동료 중 네덜란드어에 가장 조예가 깊었던 마에노가 저자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만큼, 스기타는 불완전한 번역이라도 빠르게 세상에 선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런 그의 조급함의 배경에는 이토록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최신의 이론을 제시해 명성을 얻는, 현대의 학자와 같은 야심이 자리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해체신서》 출간 이후에 모든 경쟁 이론이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후의 난학은 기존 한학의들과의 경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다만 19 세기를 전후해 이러한 이론들, 그리고 각 이론이 대표하는 사상들의 각축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92 년 홋카이도로 찾아와 통상을



요구한 이후 계속되는 러시아의 남하, 그리고 1808 년 네덜란드 선박을 쫓아온 파에톤 호의 포격을 겪으며 일본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일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길은 유일하게 교류를 계속해오던 네덜란드를 통해서 외에는 없었지요. 막부는 1792 년 통상요구 사건 이후 난학자들에게 러시아 관련 문서를 번역할 것을 명령합니다. 마에노 료타쿠가 이 명을 받은 학자 중 한 명이었지요. 그런가 하면 스기타의 사숙은 문하생들로 넘치고, 그는 일본사에 전례없는, 대중적인 인기의 유행의(流行醫)로서 명성을 떨칩니다. 그의 수입은 600 량 가까이 될 때도 있었는데, 이는 당대 최고의 대중 작가였던 쿠크테이 바킨(曲亭馬琴)의 전성기 수입이었던 40 량의 열 배가 넘는 수치였다고 해요. 쇼군을 직접 알현하는 영광을 안기도 합니다. 단순히 의학 저술뿐 아니라 일본과 세계의 상황에 대해 비평하는 글들을 다수 남겼는데요, 예를 들어 1807 년에 적은 《야수독어(野隻獨話)》에서는 러시아의 역사와 그의 위협에 대해, 그리고 일본의 쇠퇴한 막부 체제를 낡은 집에 비유하며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낡은 것은 버려야만 할 때가 있다고 적습니다.

이렇듯 스기타는 의학자보다는 시사평론가, 혹은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있는, 지금의 인플루언서와 같은 인물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기타는 추가적인 번역 작업은 하지 않았고, 난학의 정신을 다룬 《화란의사문답(和蘭醫事問答)》이나 《형영야화(形影夜話)》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연구 활동들은

대부분 그의 아들들과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해체신서》 작업의 맹주이자 가장 큰 기여를 한 마에노 료타쿠는 실제로 겐파쿠에 비하면 큰 명예나 명성 없이 쓸쓸하게 생을 마무리하지요. 따라서 스기타의 성공은 대중의 교육 수준 향상, 대중서의 보급 등과 맞물린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그 성공의 중요한 방아쇠에는 러시아의 남하를 비롯한 국제정치 현실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겐파쿠가 시작한 난학의 성공은, 따라서 단순한 학문적 성공일 뿐만은 아닙니다. 때문에 그를 일본인에 특별히 내재되어 있던 르네상스적 인간형으로 그려내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지배적인 서구 근대적 내러티브를 소급해 적용하는 목적론적 사고방식에 다름아닐 것입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만으로 끊임없이 정진하는, 근대적 학자상에 걸맞는 마에노 료타쿠는 오히려 역사의 그늘진 곳에 남겨졌으니까요.

## 나가며 - 선형의 근대를 지나다

모든 사회가 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그 생각에 맞추어 재발견하게 만듭니다. 또 이 생각은 지식 역시 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요. 스기타와 동료들의 《해체신서》 이전에도 비슷한 노력과 발견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접하시면서, 쿤(Thomas Kuhn)이 이야기한 비선형적 지식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이제는 고루하게까지 들리는 카의 전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탈근대라는 이름으로 근대의 모든 것에 물음을 던져온 지금 이 시점에서, 스키타 겐파쿠를 위시한 난학의 등장과 발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려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겐파쿠의 이야기가 동아시아를 얼룩지게 했던 일본의 근대의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일본의 난학이라는 과거와의 대화로부터 어떤 역사를 써 낼 수 있을까? 시간과 역량의 부족으로 동시대 조선과의 비교를 포함한 중요한 것들을 녹여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여기까지가 이 질문에 대해 제 짧은 고민의 결과입니다.



사진 7. 테지마 출구

## 참고문헌

### 1. 1 차 문헌

#### 가. 국문

스기타 겐파쿠 외. (2014). 《해체신서》. 김성수 역. (파주: 한길사.)

이예안. (2016).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 광의지언(狂醫之言)”.

〈개념과 소통〉. 제 17 호. 223-243.

이종각. (2013). 《일본 난학의 개척자 스기타 겐파쿠》. (서울: 서해문집.)

## 나. 영문

Kaempfer, Engelbert, Beatrice, M. Bodart-Bailey. (1999). *Kaempfer's Japan: Tokugawa Culture Observe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Olga V. Klimova. (2016). “A Monologue about Foreign Ships by Sugita Genpaku” *Basic Research Program Working Papers*.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HSE) St-Petersburg, Centre for Asian and African Studies.

## 2. 단행본

Masao, Maruyama. (1974). *Studies in Intellectual History of Tokugawa Japan*.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Jansen, Marius B. (2002). *Making of Modern Japan*. (Cambridge : University of Harvard Press.)

## 3. 정기 간행물

### 가. 국문

김성수. 2018. “일본의 해부학 초기의 특성: 『해체신서(解體新書)』와 『중정해체신서(重訂解體新書)』에 나타난 세계와 인체”. <연세의사학>. 제 21 권. 제 2 호. 53-76.

여인석, 황상인. 1994. “일본의 해부학 도입과 정착 과정”. <의사학>  
제 3 권 제 2 호. 218-229.

이근상. 2018. 마에노 료타쿠(前野良沢)와 오쓰키  
겐타쿠(大槻玄沢)의 네덜란드어 인식과 학습

寫本 『和蘭譯文略草稿』와 刊本 『蘭學階梯』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 49 집. 43-60.

이근상. 2016. “난학계제를 통해 본 학습과 번역”. <일본연구>  
제 42 집. 121-138.

## 21 세기 패권경쟁의 에피소드를 담다 \_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

이 광 민

서강대학교

### 들어가며 - 시작점에서 끝을 그리다

사랑방 13 기 둘째 날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사세보 해상자위대 기지였습니다. 하우스텐보스 호텔에서 힐링 되는 온천수와 기분 좋은 조식을 뒤로하고 느낌 있는 보슬비를 맞으며 버스는 해군기지 인근으로 향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날 방문하였던 네덜란드 패권을 상징하는 데지마, 영국 패권을 상징하는 글로버 파크에 이어 미국 패권의 역사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는 사세보 해군기지에 도달하였습니다. 높은 하늘 덕분인지 구름 사이로 은은하게 세어 나오는 몇 가지의 빛 줄기 덕분인지 정박하고 있는 전함으로 가득한 사세보에 대한 첫 인상은 ‘웅장함’ 이었습니다. 기지 내부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사세보 자료관에서 통해 우리가

방문한 장소가 지닌 의미를, 그리고 21 세기의 내일을  
생각해보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사진 1. 근사했던 하우스텐보스 숙소

요코스카 해군기지와 더불어, 사세보 해군기지는 일본 본토  
내에서 미 해군이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시설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의 7 함대 함정이 배치되었고,



주로 병참, 보급, 급유 등의 보조시설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미해군 부서 중 상륙전대와 기뢰대응전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잠수함전(Anti-Submarine Warfare)’과 ‘상륙작전(Amphibious Operation)’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015 년에 투입된 그린베이 상륙함을 포함한 대략 8 척의 상륙함과 기뢰함이 주둔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세보 해군기지는 아시아에 배치된 미 해군 전력의 일부가 주둔하고 있는 장소 중 하나로, 미-중 사이의 패권경쟁 에피소드 중 군사력 경쟁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중국해와 인접하고 있으며, 중국이 설정한 ‘제 1, 제 2 열도선(First and Second Island Chain)’ 내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Anti-Access and Area Denial; A2/AD)’을 침투하는 단서임과 동시에, 중국으로서는 견제 대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충돌하고 있는 두 강대국의 대결 중 최후방 에피소드인 군사력 경쟁에 대해서,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해군력 대결구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두 국가 해군력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고 어느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진 2. 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 7층. 날씨 흐림

## 그들의 과거는 어떠하였을까?

중국의 양극 한 극성으로의 부상은 소련과 유사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 또한 많았습니다. 총을 택한 소련과 달리 총보다는 버터를 우선시했다는 점, 그리고 국가의 규제 하 시장을 제한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였고, 현재는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왔다는 점에서 소련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방력에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했다는 점에 있어 미국에 우위를 내주게 되는데, 이를 1995-1996 년 타이완 위기(Ross 2000)에서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타이완 해협 내부로 미 해군의 자유로운 입장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할 방도 또한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중국은 총과 버터를 모두 선택하는 경로를 택하게 되는데,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접근에 대항하여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강하였고, 그 중 해군력에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의 목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응하여, 자국의 지리적 이점 및 억지 능력과 비교적 간접적인 방어전략을 통해 미국의 전쟁수행 비용을 높이는데 있기에 기술력과 규모의 우세를 앞세운 전면적인 전투를 선호하는 미국을 적절히 겨냥하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RAND, 2007).

## 오늘날의 21 세기: 단기적 형상을 들춰보다

그렇다면 현재 미·중 간의 군사적 다이내믹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상황이 과거와는 많이 바뀌었고, 총 규모 또한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더 이상 미해군의 중국 A2/AD 시스템 내부로의 자유로운 출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 핵잠수함, 구축함 등 전략무기 개수의 지속적 증강만이 아니라, 기술력 또한 미국에 ‘match’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대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위해, 보다 견고한 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 시스템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DIA, 2019). 하지만, 중국이 한보 더 전진한 상태로 게임이 끝나버리는 경직적인 엔딩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21 세기 동아시아에서의 군사 다이내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의 방안 모색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A2/AD 에 대응하여 2012 년 ‘합동 작전성 접근 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과 더불어 ‘Air-Sea Battle’의 육해공 합동 작전을 이용한 접근법을 제시하였습니다(DOD, 2012). 이는 중국의 비교적 간접적 방어 전략에 대해 오히려 섬세하지만 강력한 형태의 직접적인 접근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총 군함 수는 중국이 더 많지만, 주력함의 수와 기술력 측면에서 미국이 현재로서는 압도하는 상황이므로, 비록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들 미해군은 중국이 설치한 ‘장애물’을 마주한 상황일 뿐, 강력한 힘과 섬세함을 통해 이를 제거하거나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해군은 합동접근전략과 동시에 무인기술을 이용한 유령함대 구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RAND, 2019). 현재, 미해군이 중해군의 간접전략 중 특히 유의해야하는 해상지뢰제거 및 대잠수함전과 같은 ‘3D(Dull-Dirty-Dangerous)’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는 초대형 무인 전함과 대형 무인 잠수함 또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 년까지 약 190 척의 무인 유령 전함과 잠수함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람을 수용하지 않기에 비교적 안전하고 저렴한 무인함을 대량으로 이용하여 ‘Dragon’s Lair’을 침투하는 “Swarming”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 역시 등장하고 있습니다(Gorrell, Macphail, Rice, 2016). 이는 주력함을 앞서위 섬세함과 협동을 통한 비교적 직접적인 침투를 목표로 하는 JOAC 과 달리 중국의 간접적 대응에 맞서 동일하게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경주는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해군전력에서의 투자를 이어갈 것이고, 미국은 더욱 효과적인 침투방법을, 중국은 이른 시일 내에 직면할 유령함대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즉, 이러한 ‘action’과 ‘counter-action’의 반복은 오늘날의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현 시점에서는 양측 모두 위기를 확대시키는 옵션을 선택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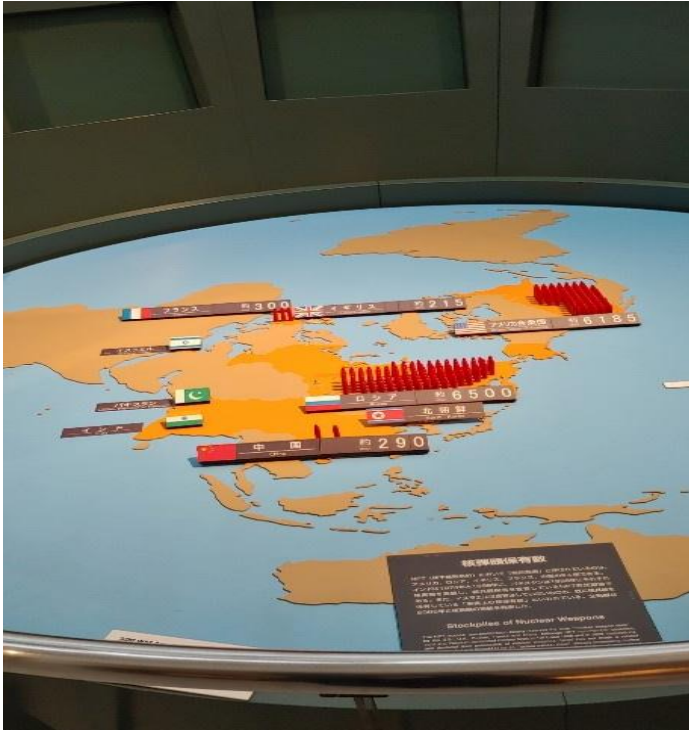


사진 3. 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 3층, 세계 핵무기 지도

## 오늘의 양극은 안정된 양극일까?

21 세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양극은 과연 왈츠가 주장한 ‘안정된 양극’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아시아에서 타이완을

포함한 중국에 인접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미국의 동맹국임과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국가들을 사이에 두고,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미국은 그 공간 속에 있는 국가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공격적인 정치적 목표를 위해 방어를 위한 국방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를 국방백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방어적인, 즉,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는 중국이 구축한 공간 내부로의 침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공격적인 국방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그리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목표는 서로 다른 형태의 군사력 균형을 초래하였으며, 각자의 목표를 위해 군사적 에피소드에서 만든 ‘위기확대(Crisis Escalation)’ 옵션을 택하게 됨으로써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구간을 점점 좁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누어질 수 없는 정치적 목표가 위기관리 및 상황 안정에 있어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기타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군사분야에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을 동시에 발전시켰을 지는 몰라도, 동시에 국가들의 행동을 공격적으로,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높아진 기술력은 정교함과 투명성을 통해 더 이상 완벽한 선제공격이 불가능한 세계는 존재하지 않게 하였으며, 이러한 기술력은 효과적이지만 공격에 취약한 통합적인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낳게 하였습니다. 즉, 완벽한 선제공격의 대상을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또한 서로의

첫 공격의 대상을 C4ISR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의 눈을 멀게 하는 공격을 첫 공격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되는 정치적 목표와 더불어 기술의 발전이라는 외부적인 요소가, 두 국가의 ‘위기관리’의 가능성을 더욱 좁혔고, 두 국가가 ‘넘어질 경우’, 위기 확대는 꺾잡을 수 없을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단기적인 군사적 다이내믹 에피소드의 경우, 왈츠가 이야기한 안정된 양극은, 오늘날의 21 세기를 통해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좁아지는 위기관리의 범위 내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현존하는 한, 미-중 양극은 단기에서 오히려 ‘불안정’에 가까울 것입니다.

## 내일의 21 세기: 장기적 형상을 들춰보다

그렇다면 21 세기의 양극은 ‘위기’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경제학에서의 단기와 장기의 균형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듯, 현재의 21 세기만 보고 미-중 양극의 불안정을 결론짓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21 세기의 내일은 어떠할지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선을 분석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수많은 변동 속에서 회귀선은 그 변동들 사이를 지나는



하나의 ‘smooth’한 선으로 표현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았던 21 세기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가까운 내일의 상황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오늘의 21 세기는 그 수많은 변동 중 일부에 불과할 것이고, 이를 통해 아주 가까운 다음 기는 예측할 수 있지만 전체의 상황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과 소련 양극의 과거 흐름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된 양극‘이었음’을 오늘 날에 배우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과 유사한 맥락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따라 단기에서의 미-중 군사 다이내믹을 통해 내일의 21 세기, 즉, 장기에서의 미-중을 예측하자면, ‘위기를 수반한 균형’을 예상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전과 달리 ‘군사력 불균형이 존재하는 양극’의 군사적 대결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정치적 목표와 상황을 동결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가 없어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균형, 즉, ‘불안정한 균형’ 혹은 ‘비대칭적 균형(Asymmetric Balance)’의 균형상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Asymmetric Balance’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Balance of Power under Asymmetric Balance of Military Power’, 즉, 군사력의 비대칭 하에서의 힘의 균형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Asymmetric Stability’ 대신 ‘Asymmetric Balance’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군사력에서의 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는 하에서,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 하에서는 함부로 ‘stability’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며, 오히려 군사적 다이내믹에 있어서는 ‘instability’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군사적 역학이 불안정하다고 단정할지라도 먼 미래의 한 시점, 예를 들어 21 세기의 끝자락에서 보았을 경우 미국이 군사력에서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불안정 속에서 힘의 균형이 유지될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Balance under Instability and Asymmetric Balance of Military Power’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균형 상태는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미·중 군사 역학과 더불어 설명하면, 우선적으로 인위적인 위기관리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할 시, 미국이 공격적인 정치적 목표를 지닌 중국에 대해 군사력에서의 우위를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비록 ‘action’ 과 그에 대한 ‘counter-action’ 이 축적될수록, 또한 양측 모두 서로의 눈을 가리는 선제공격을 선호할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 중국 본토에 대한 ‘선제 무력 파쇄 공격(Preemptive Counterforce Attack)’을 염두해두고 있을 시(RAND, 2019), 위기관리의 구간은 줄어들겠지만 방어적인 정치적 목표를 가진 미국이 군사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불안정하지만 균형상태에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과거와 달리 21 세기의 군사력 대결은 ‘넘어질 확률(Chance to Fall Down)’이 높다는 것이고 ‘action-to-counteraction’이 지속될 시 더욱 높아질 것이며, 넘어질 경우의 위기확대는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부분은, 과거와 달리 소통이 부재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21 세기의 오늘과 내일은, 비록 21 세기의 끝자락에 선 시점에서 바라본 21 세기 군사 패권경쟁의 전말처럼 세밀하거나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위협을 지속적으로 동반하고 군사력의 격차가 존재하는 군사력의 불균형이 오히려 전체적인 현상을 유지하는 균형을 형성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가며 - 문을 열어 문으로**

19 세기, 20 세기를 걸쳐 현재 해상자위대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과정을 지나 자료관을 나서니 비는 그쳤고 구름도 걷히고 있었습니다. 21 세기의 오늘은 어떠하고 내일은 어떠할지에 대해 어느정도 윤곽을 그려보고 마주하는 알 수 없는 상쾌함이 반가웠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먼 내일의 문을 지나온 기분이었습니다.

많은 숙제가 풀린 듯하였으나, 세번째 문을 열고 나오니 더 큰 숙제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군비경쟁과 확장이 21 세기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고, 특히 두 국가의 해군력의

전지구적 팽창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또한 미국의 ‘counteraction’에 대응할 중국의 ‘counter-counteraction’은 무엇일 것이며, 우주 영역을 포함한 다영역에서의 작전(Multi-Domain Operation)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해군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이처럼 끊임없는 질문을 남기며,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숙제를 마치며 자료관의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사진 4.

사세보

해상자위대자료관 문을 열어 출구

## 참고문헌

### 1. 정기 간행물

Defense Intelligence Agency. 2019. “China Military Power.”

Department of Defense. 2012.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 1.0.”

RAND. 2007. “Entering the Dragon’s Lair.”

\_\_\_\_\_. 2019. “Navy Large Unmanned Surface and Undersea Vehicle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_\_\_\_\_. 2019. “Mainland Strikes and US Military Strategy Towards China.”

Richard Gorrell, Alexander MacPhail, Joseph Rice. 2016. “Countering A2/AD with Swarming.” Air Command and Staff College Air University.

Robert S. Ross. 2000. “The 1995-96 Taiwan Strait Confront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2. 87-123.

## 임진왜란 이후 조일관계의 정상화 \_한일교류박물관·나고야 성터

박 지원

건국대학교

### 들어가며

지난밤 선생님께서 건네주신 진심어린 조언들을 되새기며 사랑방 13 기는 둘째 날 여정을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사세보에서의 발제를 통해 미·중의 군사력 현황을 확인하고, 과거 일본의 군사력 성장을 부러워하다가 도잔신사와 규슈 도자기 박물관을 방문하여 이삼평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피곤했던 탓인지, 전날 발제 준비로 밤을 지새웠던 탓인지 둘째 날 마지막 일정이었던 나고야성 박물관(한일교류 박물관)으로 달리는 1 시간 반은 길고 길었습니다. 나고야성 박물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수길)가 임진왜란의 출병거점지로 삼았던 나고야 성의 터 근처에 자리했습니다. 이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오랜 역사를 이어온 한일관계를

단절시켰다는 인식 하에 과거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해 반성하고, 한일교류 및 우호의 증진거점이 되고 싶었던 사가현의 뜻이 담긴 일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나고야성 박물관에 ‘한일교류 박물관’이라는 별칭을 붙여 주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사가현의 의도 하에 박물관 전체의 전시 키워드는 ‘한일 교류’이며 한일 교류의 흔적이 시기별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1. 한일교류박물관의 외관

요즈음같이 한일관계가 시끄러울 때면 ‘사상 최악’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맴돕니다. ‘한일교류 박물관’을 답사보고서 주제로 선택한



후에는 정말로 역사상 한일관계가 최악이었을 때는 언제였는지  
꼭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가 떠올랐고,  
한일 관계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암울했을 이 두 시기 이후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 첫 공식 외교사절인 1607년 ‘회담겸쇄환사’와  
일제강점기 이후 한일관계 재개의 출발점이 되었던 1965년  
‘한일기본협약’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  
임진왜란 이후의 조일관계가 사상 최악이었을 것이라는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1607년 ‘회담겸쇄환사’에 대해 더 궁금해졌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수천명의 사상자를 보았을 뿐 아니라  
수만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고, 이후 일본에 첫  
공식사절을 보낸 1607년까지도 국방과 민심이 불안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고려했을 때 당연하게도 임진왜란 이후 조일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상최악의 조일관계가 1607년에  
정상화된 계기와 과정은 무엇이였을까요? 국교의 정상화에 따라  
조일 두 국가의 서로에 대한 심상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이  
역사적인 정상화의 경험이 오늘날의 한일관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선조실록》과 《해행총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 조일 강화에 대한 조선의 뜨거운 논의

1606년 5월 12일, 조선의 신하들은 조일 강화에 대해 열렬히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강화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선조실록 v.40, 1989, 15-37).

첫째, 국방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선이 더 이상 임진왜란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는 기점이 되는 날은 노량해전 이후 수길의 죽음으로 왜적이 도망간 1598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선조실록 v.25, 1988, 180). 그러나 조선은 1598년 임진왜란의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국의 국방에 대한 불안을 느껴왔습니다(선조실록 v.40, 1989, 25). 끈질겼던 7년간의 전쟁이 갑작스럽게 종결되면서 일본의 재침략설이 횡행했고, 남방에서의 왜적의 위협은 시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방에서는 오랑캐들이 활보했고, 당시 조선의 국방 시스템이었던 훈련도감은 남·북방으로 불안한 동아시아 정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선조실록 v.41, 1989, 47). 따라서 다수의 신하들은 일본과의 강화로 남쪽의 국방을 안정시키면 서북쪽의 방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이로우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선조실록 v.40, 1989, 32).

더불어 임진왜란 직후부터 제기되었던 일본 정탐에 대한 필요성 역시 조선의 국방 강화를 위한 일본과의 강화 찬성 논의를 뒷받침했습니다(선조실록 v. 25, 1988, 245). 남방의 일본 내부사정을 살펴보면, 임진왜란을 일으킨 수길과 왜란 당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가강이 집권한 것으로 보입니다(선조실록 v.40, 1989, 28). 일본 내부사정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후에 경섭이 회답겸쇄환사로 일본에

방문했을 때 알 수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가강이 집권한 후 가강과 함께 수길에게 후사를 부탁 받았던 휘원에게 권력이 돌아가지 않자, 휘원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가강이 이를 진압하였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해년(1599년)에 수길이 죽을 적에, 휘원과 가강이 후사를 부탁하는 맹세를 함께 받았는데, 가강이 집권하자 휘원이 그를 미워하였다. 휘원이 한번은 가강에게 조선을 쳐부순 공을 요구하니, 가강이 말하기를, “조선이 예의의 나라로, 다만 문교만 숭상하고 무를 드날리거나 군대를 뽑내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까닭없이 군대를 일으켰으니, 비록 전쟁에 이겼다 하더라도 무가 될 것이 없는데, 무슨 공이 있겠소.”하고, 드디어 상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혐오와 원망이 날로 깊어졌다.

경자년에 휘원이 가강을 제거하려고 비밀히 능동주 태수 경승을 시켜 일부러 군대를 일으켜 반란하게 하고는, … 서병(휘원의 군사)이 크게 패하여 복건성으로 후퇴하여 달아났다. 가강이 복건성까지 뒤쫓아가서 휘원과 언약하되, 만일 처자를 온전히 돌려주면 죽이지 않겠다 하니, 휘원이 언약대로 군사를 풀고 자기 봉읍으로 돌아갔다. … 휘원의 식읍 11주를 빼앗고 …

(국역 해행총재 II, 1974, 282-283)

이처럼 임진왜란 이후 지속적인 국방 불안 때문인지 선조는 후에 임진왜란 이후 첫 공식 사절인 1607년 회담겸쇄환사 경섭 일행에게 조총 수입을 중심 임무로 전교합니다.

둘째, 포로쇄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포로 쇄환에 대한 논의 역시 임진왜란의 종결 직후인 1598년 12월 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1606년 논의 당시, 임진왜란으로 일본에 끌려갔던 조선인 포로는 수만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포로 쇄환은 조일 강화의 필요성을 한층 더 심화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1606년 11월 9일 기록에 따르면 선조는 포로쇄환에 상당한 중요성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상께서 ‘포로로 잡혀가 일본에 있는 우리 나라 백성이 몇 천 몇 만 명인지 모른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 이를 어찌 묵과할 수 있겠는가. 회답사로 하여금 잘 말하도록 하거나 또는 예조로 하여금 일본의 집정관에게 서장을 보내게 하거나 다른 대책을 세워서 남김없이 쇄환시키도록 하라. …’하셨는데, 상께서 전념하시고 빠짐없이 쇄환코자 하시니 이는 실로 백성의 부모된 마음이십니다.

(선조실록 v. 41, 1989, 99-100)

또한 1607년 1월 4일 선조는 아래와 같이 백성에 대한 중요성,

즉 포로 쇄환에 대한 중요성을 논하면서 1607년 사절의 이름을 회답사에서 회답쇄환사로 변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비변사의 건의로 1607년 사절은 ‘회답겸쇄환사’로 명명됩니다.) 동시에 선조는 회답겸쇄환사 경심 일행에게 포로쇄환과 조총 수입을 임진왜란 이후 첫 공식사절의 2가지 핵심 임무로 명합니다.

“군주는 백성에게 부모의 도리가 있다. 백성들이 오랑캐에게 잡혀가 예의지방의 백성들로서 장차 오랑캐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었으니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날 회답사에게 그곳에 이르러서 쇄환에 관한 일을 스스로 주선했어 보도록 계하했었으나, 이 말은 허술한 듯하여 그가 능히 쇄환해 올 것인지를 기필하지 못하겠다. … 이제 위에서 보내거나 혹 예조에게 글을 보내게 하여 곧장 의리에 의거, 우리 나라의 포로를 모두 쇄환시켜 두 나라의 우호를 다지게 하라고 하여 한번 그들의 뜻을 떠보는 것이 마땅하다. 사신의 칭호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쇄환하는 것으로 명분을 삼을 경우 그 호칭을 회답쇄환사라고 하는 것도 한 계책일 것이다. … 그들이 스스로 전 시대의 잘못을 모두 고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미 전의 잘못을 고치겠다 하였으면 전 시대에 포로로 잡아간 백성을 모두 쇄환시켜 그 잘못을 고치고 다시 새롭게 우호를 맺어야 하는 것으로 소위 신의란 것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일을 의논해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또 적을 막는 병기로는 왜의 조총만한 것이 없다. … 만일 이번 회답사의 사행에 해조에게 물건값을 헤아려 주게 하여 조총을 편리한 대로 다수 사들여 오게 한다면 적국의 병기를 배에 가득히 싣고 돌아온다 해도 참으로 방애스러울 것이 없을 것이다. 이 또한 한 가지 이로운 일이니 아울러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v.41, 1989, 173)

셋째는 조선의 국체(나라의 체면)와 관련하여 임진왜란 중 왕릉을 범한 왜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선 비변사의 입장에서 일본은 임진왜란 당시 ‘까닭없이 군사를 일으켜 우리(조선)의 삼도를 함락시키고, 우리(조선) 백성들을 살육하였으며, 우리(조선)의 종묘 사직을 허물고, 우리의 능침을 파헤쳤’습니다(선조실록 v.40, 1976, 14). 선조를 비롯하여 조선의 신하들은 특히 왜적이 능을 범했다는 사실에 대해 만고에 통분해 합니다. 따라서 대마도가 조일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할 때 조선은 이에 응하기 위한 2가지 핵심 전제 조건으로 일본에 1) 능을 파헤친 적을 잡아 2) 서계와 함께 보내기를 요구했습니다(선조실록 v.40, 1989, 145-146). 후에 조선의 요구에 응한 일본 측은 능을 범한 도적이라며 2명의 왜인을 보내옵니다. 그러나 조선인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일본인에 대해 ‘간교하고 교활’하다는 심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진범 여부에 대한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 논쟁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선조의 전교를

보면 조선이 능을 범한 왜적에 대해 얼마나 통분해 하는지 잘 나타냅니다.

“참으로 능을 범한 도둑이라면 군신 상하가 종묘에 고하고  
손수 죽여야 할 것인데, 어찌 현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심할 것이 없다. …”

(선조실록 v.41, 1989, 61)

“능침을 범한 죄물에 어찌 괴수와 추종자의 구별이 있겠는가.  
…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의 무덤을 남에게  
도굴당했다면 수천 명의 도적 모두는 응당 그 아들이 손수  
베어 살을 저며야 할 자들이다. 그러나 그 수천 명을 다 잡을  
수 없게 되었고 다행히 한두 명을 잡았다면, 아들된 자는  
실성하여 미친 듯 뛰면서 부모의 묘에 가서 통곡하고 손수  
죽여서 원수를 갚겠는가, 아니면 가만히 서서 냉소하면서  
‘이는 묘를 도굴한 괴수가 아니라 수종한 적일 뿐이니  
이들에 대해 노할 것이 없다.’고 하겠는가? 그렇게 하고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의요 불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선조실록 v.41, 1989, 113)

이후 일본에서 능을 범한 왜적이라고 보내온 일본국 대마도의

왜인 마고사구와 마다화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은 조선의 왕릉을 파헤친 적이 없으며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선조실록 v.41, 1989, 115). 이에 따라 마고사구와 마다화지의 사형여부에 대한 논의는 더 활발해졌고, 결국 선조는 ‘그들의 목을 자르는 일 이외에는 다시 다른 계책이 없다.’며 이 두 왜인을 살려 두는 것을 국체의 손상으로 여기고 사형을 전교합니다(선조실록 v.41, 1989, 153). 능을 범한 왜적에 대한 선조의 통분과 분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계에 관한 문제 역시-조일 강화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니었지만, 1606년 논의에서 국체에 관한 문제로 중심 화제로 다뤄졌으니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의 사신들은 조일강화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일본이 서계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일본에 사신을 보내는 일에 대해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다만 두 나라가 서로 우호하는 것은 사체가 매우 중한데도 내부에서는 일찍이 한 장의 글도 보내지 않고 대마도의 왜만이 왕래하면서 말을 전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비망기로 이르기를, “적이 화친을 요청하는 것은 모두 대마도가 중간에서 한 일이어서 그들이 가강을 칭탁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말이다. 만일 가강이 진실로 속히 화친하려는 뜻이 있다면 유정이 돌아올 때에는 어찌 한 장의 글도 부치지



않고 장황한 사실과 흉악한 위협으로 공갈했겠는가.”

(선조실록 v.40, 1989, 14-15)

이 외에도 많은 신하들이 서계에 대한 문제를 중요시하여 1606년 논의 후 조선은 대마도를 통해 일본에게 서계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조일 강화에 응하는 조선의 협상 조건은 1) 일본의 서계와 2) 조선의 능을 범한 도적의 압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1606년 7월 4일에 서계를 먼저 보내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이 서계의 내용입니다. 1606년 8월 17일 일본 사정을 탐지하기 위해 대마도에 방문한 전 계신 일행은 대마도가 일본으로부터 온 서계라고 소개한 글을 본 후 ‘그 글을 펴보았더니 간혹 불손하고 또 도둑을 포박하여 보낸다는 말도 없었습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조선이 이 서계를 달갑게 여기지만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선조실록 v.41, 1989, 24).

이처럼 대마도가 일본이 보내온 서계라고 소개한 글을 보여주긴 했지만, 선조는 서계가 오기 전부터 ‘가강의 서신과 능을 도굴한 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거짓일 뿐, 필경 속임을 당할 것이다.’라며 이 서계의 진위 여부를 의심합니다(선조실록 v.40, 1989, 143).

앞서 말한 것처럼 조선이 가지고 있던 일본인에 대한 심상은 임진왜란 전부터 ‘간교하고, 교활함’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1607년 회답겸쇄환사를 보낼 때까지도 일본을 쉽사리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서계의 진위 문제는 회답겸쇄환사를 보내는 일에 관해 관건이 되는 화제였습니다(선조실록 v.41, 1989, 163).

실제로 1607년 회답겸쇄환사 경점은 일본 방문 당시에 대마도가 일본이 먼저 보내온 서계라고 소개한 글이 위서임을 거의 확신합니다. 대마도가 보여준 글에는 인으로 ‘일본국왕’이 쓰여 있던 반면에, 새로운 관백이 된 가강의 아들 원 수충은 회답 국서에 인으로 ‘원수충인’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포함한 네 글자를 새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점이 가강에게 사용하는 인신이 있냐고 물었을 때, 가강의 환노가 “전에는 있었으나, 어떤 사람이 그것을 위조하다가 드러나자, … 곧 녹여버리고 지금은 없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경점은 이 대답을 듣고 대마도가 보여준 일본의 서계가 위서임을 확신합니다(국역 해행총재 Ⅱ, 1974, 302-305). 그러나 서계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조선이 제시한 조일 강화를 위한 2가지 요건 중 하나인 일본의 서계가 먼저 왔다는 점은 1607년 회답겸쇄환사의 방문이 이루어지기까지 비중 있는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요건인 능을 범한 왜적 2명의 압송이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회답겸쇄환사의 방문을 촉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 1598년부터 7-8년간 지속되어 왔던 대마도의 조일강화 간청도 강화 찬성에 대한 비중 있는 이유였습니다. 대마도의 조일강화 간청은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인 1598년 6월 3일에 시작됩니다. 본래 대마도 사람인 요시라가 조선에 강화를 요청하며, 당시 조선에 머물던 중국 장수인 경리도감과 타협을 보려 합니다.

‘관백은 이 일을 알지 못하고, 행장이 강화를 하고자 하여 보내서 왔다’는 요시라의 언급 때문에 강화 요청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기는 하지만(선조실록 v.24, 1988, 166-167), 이렇게 1598년에 시작된 대마도의 조일강화 간청은 1607년 임진왜란 이후 첫 공식 사절인 회담겸쇄환사를 보내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1601년 6월 대마도의 조선인 250여명 쇄환에서 시작해서 주기적인 조선인 포로 쇄환을 통해 조선이 일본과 강화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김문자 2019, 48-49).

1606년 논의에서 조선의 신하들은 6-7년간 미뤄온 대마도의 조일강화 간청에 대한 결정을 더 지연시킬 경우, 더이상 참지 못한 대마도의 후환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본적으로 조선의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에 대마도의 후환이 두려웠고, 즉 앞서 첫째로 언급한 국방 요소와 함께 대마도가 여러 차례 조선인 포로를 쇄환해 온 바, 즉 둘째로 언급한 포로 쇄환이라는 필요성이 모두 작용하여 네 번째 강화 찬성 이유인 ‘대마도의 지속적 간청’이 설득력 있는 강화 찬성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강화찬성 이유는 각자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며 조일 국교재개의 필요성을 강화했습니다.

유영경의 의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근래에 조정의 의논이 모두 ‘평수길이 이미 죽고 가강이 당국하여 스스로 모든 일을 수길의 소위와 반대되게 한다고

하는데, 대마도의 왜가 이 말을 가지고 화호를 요구하면서 독촉이 급하니, 이 때에 만약 한결같이 굳게 거절하면 무서운 독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렵다. 위협을 당한 후에 허락하느니보다 먼저 잘 도모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이 역시 백성을 위한 계책이니 …. 그러므로 신이 전일 비변사에서 여러 당상과 회의할 때 예조에서 서계를 만들어 사람을 차출하여 일본에 들여보내어 한편으로는 대마도의 노여움을 풀어주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정세를 정탐하여 후일 처치하는 바탕을 삼아야 한다고 정했던 것입니다.”

(선조실록 v.40, 1989, 24)

심희수의 의논은 다음과 같다.

“강토를 회복한 지 이미 8~9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사방을 둘러보면 정벌할 준비는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게을리 시간만 허송하는 것이 신묘년 이전보다 더욱 심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마도 적이 우리나라에 방비가 없음을 엿보아 알고는 더욱 함부로 능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당연합니다. 사세가 이에 이르러 조절하는 권한이 저들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니 …대체로 굴지정이 뜻대로 되지 않아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 지 오래인데, 또다시 미루어서 낙심하고 돌아가게 하면 혹 노여움을 격발시켜 기꺼이 가강에게 가서 서계를 받아가지고

오지 않을 듯하니”

(선조실록 v.40, 1989, 25-26)

성영의 의논은 다음과 같다.

“이 일은 여러 해 미루다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 더는 미룰 수가 없으니 … 다만 ‘근래에 대마도가 귀국의 뜻을 받들어 강화를 요청하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해마다 두세 번씩 간청하였고, 우리 나라의 포로를 전후로 계속 쇄환하고 있으니, 그 성의가 가상하다. 다만 이것이 오로지 대마도의 생각으로 한 일인가, 아니면 귀국의 분부를 듣고서 이처럼 간절하게 하는 것인가? 해로가 멀어 자세히 알 수 없어 감히 모관을 차출하여 보낸다.’고 말하여야 합니다.”

(선조실록 v.40, 1989, 30)

이후, 1606년 8월 17일, 일본 사정을 탐지하기 위해 조선의 부사과 전 계신, 역관 사역원 판관 이 언서, 부사정 박 대근이 대마도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굴지정은 이 세 사람에게 ‘일을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며 이번 탐지는 반드시 일본을 노하게 할 것’이라며 ‘조선이 일본을 믿지 않는다.’고 격노하고, 광언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굴지정은 ‘내부(일본)에서 조선사람들을 대마도로 쇄환하였는데 이들을 조선에 송환한 후 조일 국교재개가 성사되지 않으면 대마도가 죽은 목숨이니 한 번에 많은 수를 보내어

큰 일을 성사하고자 한다.’며 조일강화를 위해 포로 쇠회환을 조선 유인책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선조실록 v.41, 1989, 21-28) 후에 대마도는 일본에 이 세 사람이 대마도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데 일본은 이 보고를 듣고 성을 냅니다. 이처럼 대마도가 절박함과 조급함을 보이고, 일본이 성을 내자 일이 궁하게 될 것을 염려한 조선은 대마도의 사신을 접대할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후에 논의를 거쳐 조선이 일본에 회답겸쇄환사를 보내기로 결정한 후, 역관 이 언서의 ‘사신을 보내기로 허락하였는데 세전(설을 세기 전)에 꼭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말에 굴왜(굴지정)가 노기를 띠며 ‘만일 세후(설을 세 후)로 연기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장정이 반드시 이 기회를 틈타 (대마)도주를 죄에 빠뜨릴 것이다.’라고 조선의 사신 행차를 재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선조실록 v.41, 1989, 140). 뿐만 아니라 굴지정은 이후에 <해사록>을 통해 살펴볼 1607년 회답겸쇄환사 경섭 일행의 일본 방문 전 과정에서 가이드 역할을 하며 조선과 일본 사이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한편, 일부 신하들은 조일강화에 주춤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쓰인 것처럼 대마도의 뜻만 분명하게 보일 뿐, 일본의 관백이라고 판단되는 가강의 서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일본의 의도와 내부사정을 정확히 모르니 사신을 보내 정탐하는 것이 알맞다고 간청합니다(선조실록 v.40, 1989, 15,17-19).

이처럼 1606년 5월 중순쯤 조선에서의 조일강화에 대한 토론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록하고 있던 사관은 ‘조정의 여러

재상들이 임시 구제책에만 급급하여 사신을 보내자는 논의를 힘써 주장하면서 종사와 생명을 위한 계책이라고 칭탁하니, 그 말이 매우 구차하지 않은가. 종사와 생명을 위한 계책은 자강하는 한 가지 일 이외에는 없는데, 애석하게도 건백한 신하가 하나도 없었다.’라며 정작 조선과 백성을 지키는 기본이 되는 국방에는 신경 쓰지 않고, 사신을 보내는 문제에만 집중했던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선조실록 v.40, 1989, 36).



사진 2. 나고야 성터, 하영선 선생님과 사랑방 13 기의 뒷모습

## 10년만의 첫 공식 사절, 경섬의 <해사록>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조선은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절을 보내게 되고, 이에 대한 기록이 경섬의 <해사록>입니다. 1607년 1월 12일, 칠송 경섬, 정사 여우길, 종사관 정호관은 회답검쇄환사의 사명을 받고 예궐하여 하직합니다(국역 해행총재 Ⅱ, 1974, 237). 앞서 선조실록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포로 쇄환은 회답검쇄환사의 2가지 핵심 임무 중 하나였고, 결과적으로 1천 4백 18명을 쇄환하는 성과를 이룹니다(국역 해행총재 Ⅱ, 1974, 325). 또한 1607년 회답검쇄환사 방문이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국교 재개의 출발점이 되었던 만큼, 경섬 일행에게 보냈던 선조와 예조참판 오억령의 서계를 보면 국교 재개 과정에서의 조선의 고민이 요약적으로 드러납니다.

조선국왕 성휘는 일본국왕 전하에게 답서를 올립니다. 이웃 나라와의 교제는 예로부터 그랬던 것입니다. 2백 년 동안 전쟁이 없어 바다가 조용해진 것은 모두 중국 조정의 덕택이지만, 우리 나라인들 또한 어찌 귀국을 저버렸겠습니까? 임진년의 변란은, <귀국> 까닭없이 군대를 일으켜 극히 참혹한 화란을 만들고 심지어 선왕의 능묘에까지 욕이 미쳤으므로, 우리 나라 군신의 마음이 아프고 뼈가 저리어, 의리에 귀국과는 한 하늘 밑에 살지 못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6~7년동안 대마도가 비록 강화할



것을 청해오기는 하였으나, 실로 우리 나라가 수치스럽게 여겼던 바입니다. 이제 귀국이 옛일을 혁신하여 위문 편지를 먼저 보내와 ‘전대의 잘못을 고쳤다’하여 성의를 보이니, 참으로 이 말과 같다면, 어찌 두 나라 생령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국역 해행총재 Ⅱ, 1974, 237)

조선국 예조 참판 오억령은 삼가 우리 국왕의 명을 받들어 일본의 집정 각하에게 글을 보냅니다. 임진년의 변란은 실로 우리 나라의 잊을 수 없는 아픔이요, 또한 귀국의 씻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웃 나라와 교제하는 도리는 신의가 중한 것인데, 까닭없이 침범한 것은 또한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이는 천지 귀신이 함께 분히 여길 일이었습니다. 이제 귀국이 먼저 짧은 편지를 보내와서 ‘전대의 잘못을 고쳤다’하니, 참으로 이 말과 같다면 어찌 양국 생령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생각하건대, 이미 ‘전대의 잘못을 고쳤다’하였으면, … 억류된 우리 나라 몇 만 명의 생령이 억류된 지가 대범 몇 해인 지 압니까? 6~7년 대마도가 쇠환하기에 힘을 쓰는 듯하였으나 전후에 보내온 것은 아홉 마리 소의 터럭 하나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각하께서 여기에 관해 생각이나 또한 하여 보았습니까? 대개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는 것은 백성이 있기 때문인데, 더구나 우리 나라의 백성은 실로 중국 조정의

백성이 아납니까? 이제 두 나라가 새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이 때에, 사로잡힌 남녀들을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귀국이 ‘전대의 잘못을 고쳤다’ 할지라도 그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습니까? 이야말로 각하가 주선하여 힘쓸 시기입니다. 만일 속히 영을 내려 즉시 쇠환하되, 한 사람의 남녀도 그대로 남겨 두지 않게 하여, 피차의 민생들로 하여금 각자 안정하게 살도록 한다면, 두 나라의 교제가 만세토록 길이 힘입게 될 것이니, … 각하께서 힘써 도모하기 바랍니다.

(국역 해행총재 Ⅱ, 1974, 238)

이제 《선조실록》과 <해사록>에서 볼 수 있었던 1) 조선의 대일 심상, 일본의 대조선 심상, 경섬의 대일 심상을 정리하고, 2)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조선과 일본의 차이, 그리고 3) 포로 쇠환과 조총 수입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실록》에서 조선의 대일 심상을 엿볼 수 있었다면 경섬의 <해사록>에서는 일본의 대조선 심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굴 지정이 ‘조선 사람은 의심이 많아 모든 경한 일이나 중한 일, 큰일이나 작은 일에 있어 논의가 분분하고, 때로는 이미 결정하였던 것도 도로 그만두는 사례가 있음을 익히 보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국역 해행총재 Ⅱ, 1974, 255). 《선조실록》에서도 1606년 8월 17일 전계신 일행이 탐문차 대마도를 방문했을 때 굴지정이 조선이 일본을 믿지 못한다며

격노하기도 했던 기록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일본의, 특히 굴지정의 대조선 심상은 ‘의심이 많고, 신중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선조실록 v.41, 1989, 26).

한편, 경섬은 일본 방문 중 일본 국속으로 단오에 사람을 죽이는 놀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섬은 <해사록>에 ‘이 날에 살인을 많이 하는 자는 비록 시정의 천한 사람일지라도 성가가 곧 배로 오르고, 두려워서 회피하는 자는 비록 권귀의 자제일지라도 온 나라가 버려서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못한다.’고 기록하며 ‘그 삶을 가벼이 여기고 죽이기를 즐겨하는 풍속이 이와 같다.’라고 평하였습니다(국역 해행총재 Ⅱ, 1974, 298-299). 이 밖에도 일본이 회담겸쇄환사 일행을 후하게 대접한 뒤 사신 행차 이전에는 일절 언급이 없었던 일본의 중국 진공 요청에 대한 조선의 도움을 요구하자 ‘귀홀스런 말을 끄집어내어, 뒷날 농간질하려고 계획한 것이니 밍살스럽다.’고 표현합니다(국역 해행총재 Ⅱ, 1974, 319). 이처럼 조선은 ‘일본인은 간교하고, 교활하다’는 대일 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조선인은 의심이 많고, 신중하다’는 대조선 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섬의 <해사록>은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조선과 일본의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선조실록》을 보면 조선은 자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생각한다는 증거가 지속적으로 눈에 띕니다. 이와 달리 아래와 같이 <해사록>에서 일본은 자국이 중국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편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현소는 만력(명 신종의 연호) 연호를 쓰려 하고, 승태는 일본 연호를 쓰려 하여 관백에 여쭙었더니, 관백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가 대명(명 나라의 존칭)을 섬기지 않았으니 그 연호를 쓸 수 없고, 만약 일본 연호를 쓴다면 사신이 반드시 오편치 못한 뜻이 있을 것이니, 둘 다 쓰지 않는 것만 못하다.”

(국역 해행총재 Ⅱ, 1974, 302-303)

중론이 천조(중국 조정)에 진공하는 한 조목을 가지고 회서 안에 적어 넣으려 하였고, 관백도 그럴 뜻이 있었다. 그런데, 승태가 관백에게 말하기를, “일본에는 천황이 있고, 대명에는 천자가 있으니, 이는 서로 동등한 나라입니다. 전일 관백들이 통화하려고 신이라 칭하면서 진공한 것은 매우 불가하였습니다. 어찌 서로 동등한 나라로서 스스로 낮추어 신이라 일컬을 이치가 있습니까?”하니, 관백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적어 넣지 않았던 것이다.

(국역 해행총재 Ⅱ, 1974, 312)

마지막으로 선조가 1607년 회담겸쇄환사 경섬 일행에게 주었던 2가지 핵심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사록>에 대한 논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회담겸쇄환사에게 주어진 2가지 핵심 임무는 포로쇄환과 조총 수입이었습니다. 특히 포로쇄환에 관하여 선조는

회답겸쇄환사를 보내기 전에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예조 참판 오억령이 일본에 보내는 서계에서도 그 중요성이 엿보입니다. 따라서 경섬 일행 역시 일본 측에게 포로 쇠환에 대해 ‘모름지기 마음을 다하여 일을 성취시켜 양국의 화호를 이루게 하기 바라오.’라며 특별한 뜻을 전합니다. 이후 일본의 좌도수는 예조 참판 오억령에게 회답 서계로 다음과 같이 포로 쇠환에 대한 답을 전합니다.

생금되어온 귀국의 남녀들이 각 군국에 흩어져 산지 20년이 됩니다. 나라 안의 선비들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줌으로써, 혹 시집이나 장가간 자도 있고 어린 아이를 둔 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귀국할 생각이 없으면 각각 생각대로 해 주고, 고향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자는 속히 돌아갈 준비를 해주라는 것이 국왕의 엄명입니다. 우리 임금도 먼 데 사랑을 사랑함이 더욱 심후하옵니다. 비록 우리 전에서 양육한 선비일지라도 돌아갈 마음이 간절하다면 허락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정이 아니면 그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국역 해행총재 Ⅱ, 1974, 311)

원풍이 준하에서 뒤따라 와서 말하기를, “가강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포로들을 일체 쇠환하게 하고, 만약 돌아가기를 원하는데도 억류하는 주인 있으면 죄를 주리라 … 하였습니다.”

(국역 해행총재 Ⅱ, 1974, 313)

이처럼 회담겸쇄환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던 포로  
쇄환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섬 일행은 곧  
일본이 포로 쇠환까지 응하며 조일강화에 적극적이었던 속뜻을 알게  
됩니다.

경직이 또 말하기를, “...전일 손 문욱이 말하기를, ‘강화하는  
일이 만일 이루어지면 진공하는 일도 절로 차례대로 허락할  
것이다’하였는데 어떻소.”

(국역 해행총재 Ⅱ, 1974, 312)

“다시 모름지기 (포로쇄환에) 십분 힘써서 화호하는 실증을  
보여 주요”하니, 원풍이,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사신이 떠나가신 뒷일지라도 연달아 쇠환하겠습니다. 또  
통화하는 한 가지 일은 오로지 천조에 진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했다.

우리가 말하기를 “일본이 천조에 진공하는 것이 조선에 무슨  
상관이기에 우리들에게 말하오. 꼭 입공하고 싶다면 옛길이  
있으니, 일본이 스스로 주청할 것이지, 더욱 우리 나라가 알  
바가 아니오.”하니,

원풍은, “조선은 중국과 한 몸과 같은 나라입니다. 조선으로 인하여 진공할 뜻을 아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군이 사신을 접대할 때에 말을 꺼내려 하였고 혹은 서계 안에 말을 만들어 보내려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일로 국왕에게 번거롭게 할 수 없고, 또 사신에게 범연히 말할 수도 없으므로, 다만 마도로 하여금 조선의 집정에게 통하도록 해야겠다’ 하였습니다.

(국역 해행총재 Ⅱ, 1974, 316-317)



사진 3. 나고야 성터에서 내려다 본 풍경

위의 사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이 조일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조선을 통해 중국에 다시 진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일본이 중국에 진공하려 하였다가 태도를 급변해 ‘조명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책사를 옥보이고 구박하여 내쫓기까지 한’ 전례가 있음을 아는 경섬 일행은 일본의 중국 진공 도움 요구를 극구 반대합니다. 경섬 일행의 확실한 반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에 대마도를 통해 조선의 집정에게 일본의 중국 입공 과정에서 조선의 도움을 요구하겠다고 고집합니다(국역 해행총재 Ⅱ, 1974, 317-319). 종합하여 보면, 일본이 조선의 사신 행차 2가지 요건, 즉 1) 일본 측 서계와 2) 능을 범한 도적 보내기뿐만 아니라 회답겸쇄환사의 2가지 핵심 임무였던 포로쇄환과 조총 수입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유는 중국에 다시 진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다시 회답겸쇄환사의 포로쇄환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조선인 포로들이 잘 모이지 않다가 경섬이 포로쇄환을 위해 예정에 없던 일정을 늘리자 포로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강이 포로 자신이 본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억류하는 주인이 있다면 죄를 주리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인들은 조선인 포로를 억류했습니다. 경섬 일행이 더 많은 포로 쇄환을 위해 한집한집 방문했을 때도 주인들이 포로를 숨겨 애석하게도 많은 포로를



쇄환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조선인 포로의 경우 남편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국역 해행총재 II, 1974, 316, 320-326). 이러한 이유로 - 경섬 일행이 1천 4백 18명의 포로를 쇄환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 경섬은 ‘포로인으로 일본 내지에 흩어져 있는 자가 몇 만이나 되는지 모른다. … 지금 쇄환해 오는 수는 아홉 마리 소 가운데 털 한 개 뽑은 정도로 못되니, 통탄함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며 애석해했습니다(국역 해행총재 II, 1974, 325-326).

한편, 회답검쇄환사의 나머지 중요한 임무였던 조총 수입은 가강의 ‘싸움을 당하면 싸울 것이지, 어찌 병기 없는 나라와 그 승부를 겨뤄서야 되겠느냐? 하물며 이웃나라가 사고자 한다면 어떻게 금지하겠는가?’라는 대답에 따라 포로 쇄환과 달리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조총 5백자루를 수입해 올 수 있었습니다(국역 해행총재 II, 1974, 319).

## 마치며

임진왜란 이후 10년간 단절되었던 국교가 재개되었던 요인은 결국 조선과 일본 모두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1) 국방과 2) 포로 쇄환 3) 국제 회복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북방 지역의 국방이 불안했고, 자국의 국방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과 국교를 재개해 남방 지역의 국방이라도 안정화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왕 혹은 신하로서 이웃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자국의 백성들을 쇄환하는 것은 도리라 여겼습니다. 이에 따라 1) 국방을 위한 조총 수입과 2) 포로 쇄환은 1607년 회담결쇄환사 경섭 일행에게 2가지 핵심 과제로 주어집니다. 또한 국교재개의 조건으로 일본으로부터 능을 범한 도적 2명과 서계를 받아 임진왜란으로 실추된 3) 국체를 어느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중국에 진공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조일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이 사신 행차를 위해 제시한 2가지 전제 조건인 1) 서계와 2) 능을 범한 적을 보내왔습니다. -비록 서계는 경섭에 따르면 위서로 추정되고, 능을 범한 적들도 그들의 자백에 따르면 거짓일 가능성이 높지만, 피상적으로라도- 일본이 조선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사실은 조선으로 하여금 조일강화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했습니다.

한편, 조선의 대일 심상은 '간교하고, 교활함'이었고, 일본의 대조선 심상은 '의심이 많고, 신중함'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10년만에 양국관계가 재개되었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심상이 긍정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심상이 위와 같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국교 재개는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각국이 조일강화에 대해 체감하는 필요성이 양국에 대한 부정적 심상을 뛰어넘었기에 1607년

회담겸쇄환사의 일본 방문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처럼 한일 관계가 시끄러울 때, 생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이런 생각에 잠기며 그렇게 우리는 나고야성 터를 나섰습니다.



사진 4. 나고야 성터를 내려오며, 정든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 참고문헌

### 1. 1 차 문헌

민족문화추진회. (1598-1607) 《선조소경대왕실록》. v.24-26, 30-31, 41-42.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경섭. (1974). 《해사록》. 고전 국역 총서 해행총재 Ⅱ.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2. 단행본

### 가. 국문

김문자. (2019). 《임진왜란 이후 朝·日간의 국내사정과 통신사 파견》. (부산: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한명기. 2010. 《東아시아 國際關係에서 본 壬辰倭亂: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서울: 경인문화사.)

### 나. 번역본

후마 스스무. (2008). 《연행사와 통신사》. (서울: 서신원.)

## 3. 기타 자료

이용희. 1970. “한일관계의 정신사적 문제-변경문화 의식의 갈등에 대하여”. <신동아>. 8월호



## 19 세기 동아시아 지진의 끝과 시작 \_일청강화기념관

공도영

이화여자대학교

### 들어가며

답사 마지막 날 오전, 후쿠오카 시내에서 약 한 시간 반 가량 차를 타고 시모노세키(下関)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125년 전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와 청나라의 이홍장이 청일전쟁의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마침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 곳입니다. 일청강화기념관은 탁 트인 드넓은 바다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동아시아 질서가 뒤바뀌던 생생한 역사의 중심지라고 하기에는, 일청강화기념관은 매우 소박한 모습으로 시모노세키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 동아시아의 오랜 패주였던 중국이 마침내 패배를 인정하고, 조선, 대만 등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근대 일본이 부상하게 됩니다.



사진 1. 일청강화기념관 앞 바다

청일(淸日)전쟁은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힘의 균형에 지진같은 변화를 촉발하고, 유교 세계 내에서 수세기 동안 지속된 국제 화합을 깨뜨렸으며, 아시아 국가가 유럽으로부터 강대국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Paine 2003, 3). 뿐만 아니라 청일전쟁은 1세기가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동아시아의 영토 및 정치적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Greve and Levy 2018, 149). 청일전쟁의 유산과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현대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생각할 때, 그리고 청일의 무력 충돌이 한반도 땅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제정치를 위해 청일전쟁을 되돌아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일전쟁은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한 조선 땅에 대한 청과 일본의 파병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1894년 제 1차 동학농민군이 봉기하고, 4월 27일 동학농민군이 마침내 전주성을 함락하면서 조선정부는 4월 29일 긴급 대신 회의를 열어 청병(淸兵)의 차병(借兵)을 결정하고, 5월 1일 북양대신 이홍장은 군함과 정예부대 등을 조선에 파견하며 텐진조약에 따라 일본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의 일이 많이 위급하여 영사(領事) 및 상민(商民)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청에 알리지 않은 채 일본군을 조선에 파병했습니다. 이홍장은 지속적으로 양국의 철병을 주장하며 무력충돌을 최대한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결국 조선 땅에서는 양국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근대적인 군사 시스템을 도입한 일본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고 맙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청일전쟁의 원인을 동아시아 지역 질서 내 일본의 부상과 경제적, 위상적 목표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더하여, 전쟁이 1894년 8월 1일 청과 일본 양측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는 점에서, 청국은 지역 내 힘의 추가 일본으로 기울고 있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청의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왜 개전을 결정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청일전쟁 발발 직전 청나라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주전론(主戰論)과 주화론(主和論)



논쟁과, 이들이 조선 문제와 국제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문정식과 이홍장의 목소리를 통해 각각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사진 2. 청일전쟁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랑방 13기

## 청일전쟁 발발 전 청국 내 주전, 주화 대립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학으로 인해 고부군의 동학도들과 농민들이 무장 봉기하게 되고, 이들은 3월 말 정부가 진압을 위해 파견한 관군을 4월 8일 고부 근처 황토현에서 무찔렀으며, 4월 27일 전주를 점령하게 됩니다. 조선 정부는 4월 27일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조선은 결국 공식적으로 청에 파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파병 요청을 받은 조선 주재 총리교섭통상대신 원세개(袁世凱)는 이홍장에게 출병을 의뢰했고, 이홍장은 섭지초와 섭사성에게 북양 육군의 정예 7명을 이끌고 조선으로 건너갈 것을 명령했고, 또한 북양 해군 제독 정여창(鄭汝昌)에게 순양함 제원과 양위를 인천에 파견하여 거류민 보호와 수송선 호위를 맡을 것을 명령했습니다(후지무라 미치오 1997, 75-81). 동시에 이홍장은 텐진조약에 의거하여, ‘조선의 요청에 의해 파병하였으나 난이 진압되면 곧 철수할 것’을 일본 측에 알리게 되지만, 일본은 상인의 보호를 명분으로 5월 3일 300명의 병사를 파견하였으며, 5월 8일-9일이 되자 14척의 배를 파견하여 2000여 명을 추가 파병하였습니다. 이홍장은 일본의 철병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차일피일 철병을 미루며 청일 양국의 조선 내정개혁을 단행할 것을 요구하며 조선 땅에서의 긴장감을 증폭시킵니다.

일본이 특별한 명분 없이 조선에 파병하여 철병하지 않고 오히려 병사의 수를 증원하자, 청나라 내부에서는 조선에 추가 파병을 하고 일본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주전론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주전론과 주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말 청나라 내부의

정치 구조와 동학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청나라는 크게 양무파(洋務派)와 청류파(清流派)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양무파들은 서양 과학 기술의 도입을 통한 부국강병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서구 열강들과 가능한 한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기를 희망한 반면, 청류파는 서양 세력의 침략을 중화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서양의 침략에 대항해 중국을 지킬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 대외강경책을 주장했습니다(안철수 2011, 368-386).

청의 광서제(光緒帝, 1871~1908)는 1887년 친정을 시작했으나, 중요 국무에는 서태후가 관여했고, 예친왕(睿親王)이 중심인 군기처(황제 최고 자문기관)와 경친왕(慶親王)이 중심인 총리아문(외교)이 국정과 외교를 담당했습니다. 즉, 군사외교의 실권은 서태후의 신임을 받고 있던 북양대신 이홍장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총리아문도 이홍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황제파는 그것에 불만을 품고 광서제의 친정의 확립을 목표로 이홍장의 외교 정책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후지무라 미치오 1997, 123). 이러한 서태후와 광서제의 정치적 대립 구조에 따라 양무파와 청류파는 각각 서태후를 지지하는 후당(后黨)과 광서제를 지지하는 제당(帝黨)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때 양무파의 대표주자는 이홍장이었으며, 청류파는 광서제의 스승이었던 호부상서 옹동화(翁同龢)와 시독학사(侍讀學士) 문정식(文廷式), 예부시랑 장지예(張志銳), 그리고 남통재자(南通才子) 장건(張謇)이 그

중심인물이었습니다(안철수 2011, 368-386). 이 글에서는 청일전쟁을 실질적으로 이끌던 이홍장의 문집과, 청류파의 인물들 중에서도 이홍장을 탄핵하는 상소를 수 차례 올리며 이홍장과 직접적으로 대립했던 한림원 시독학사 문정식의 글을 바탕으로 주화론과 주전론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오히려 증병을 하자, 문정식을 비롯한 주전론자들은 일본에 적극적으로 맞설 것을 주장합니다. 전쟁 발발 직전 개전에 대한 문정식과 이홍장의 의견 차이는 청군의 군사력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식은 지속적으로 상소문을 올려 이홍장 등 주화론자들이 ‘화해를 주장하며 당장의 안정만을 도모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해군력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며, 일본과 전쟁이 발생하면 여전히 청이 이길 수 있다는 인식을 보입니다.

중국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해군을 건설해 왔으며, 천만원 넘는 비용을 쏟아 부었는데 북양해군이 정녕 일본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인가? 정여창은 원래 범인으로서 청불 전쟁 때는 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울면서 눈물까지 흘린 자라고 한다. 이런 자에게 제독(북양함대)이라는 중임을 맡긴 것은 실로 경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石泉 1997, 68)

中国练海军已近十年，糜费至千余万，责以一战，亦复何辞？然臣不能谅创始之难也。顾臣所不解者：倭人之练海军，亦不过二十年，何以此次出兵，北洋即不敢与之较？臣闻丁汝昌本一庸才，法越之役，避敌畏惧，至于流涕。畀以提督重任，实属轻于择人。

실제로 열강의 아편전쟁, 애로 호 사건과 태평천국의 난 등 국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청나라는 19세기 후반 군사 중심 근대화 운동인 양무운동(洋務運動)을 실시하였는데, 대표적인 군수산업시설로는 강남제조총국과 북주선정국이 있었으며, 또한 북양해군, 남양해군, 복건해군, 광동해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던 것은 이홍장이 이끌던 북양해군 뿐이었습니다(김지훈 2012, 212).

또한 이후 청일전쟁에 동원된 전체 해군력을 살펴보면, 일본의 연합함대는 모두 27척, 청의 북양함대는 21척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의 해군함정들은 1000톤 이상 7000여 톤 급의 배가 12척이고, 나머지 9척은 수백 톤 급의 작은 배들이었던 반면, 일본 해군의 네 척이 4천 톤을 웃도는 최대 함정이었고, 그 아래로 천 톤~3천톤 급 등의 중, 대형 함정들이 고루 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청 해군의 7천 톤 급 거함들의 속도가 14노트, 가장 빠른 18노트 속도의 두 척은 2300톤 급이었던 반면 일본의 4천톤 급 요시노는 23노트였으며,

대부분의 함정들은 거함인 동시에 쾌속선이었습니다. 또한 청군의 최대 함정 ‘팅위엔’만이 구경 30센티 거포 4문을 장착했고, 구경 10~26 센티 이상의 함포는 모두 합해 30여 문 정도가 장착되었을 뿐 나머지는 기관포 등이었습니다. 일본은 구경 32센티 포 4문을 필두로 10~26센티 급이 모두 200문 이상 장착되어 있었습니다(박영재 2002, 52-53).

북양해군을 총괄하고 있었던 이홍장은 상대적 열세인 청의 군사력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해안방어시설을 설치하는 데 찬성하는 1875년의 상소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홍장의 불안감과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양인의 증기선과 전보의 속도는 순식간에 천 리 밖까지 다다를 정도로 빠르고, 그들의 신식 무기는 우리 것에 비해 100 배는 더 강합니다... 오랑캐 침입으로 인한 변화가 이같이 빠른데도 중국은 여전히 낡은 방법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방식은 절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량치차오 2013, 162)

이러한 이유로, 이홍장은 청일 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 주재 왕성(汪星) 청 공사는 5월 14일, ‘일본이 대적(大敵)을 준비하는 듯하기 때문에, 마땅히 두터이

병력을 모아 은밀히 그 모략하는 바를 깨 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동학혁명기념재단 2017, 163), 이홍장은 전함이 지나치게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군대 증원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戚其章 第2冊 1989, 583) 그리고 청나라의 추가 파병을 미루고, 원세개에게 일본과 비밀리에 협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청이 군사를 파병하여 일본과 무력충돌하는 것은, 일본의 모략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싸움이 상책이 아니라고 총리아문에 알립니다.

총리아문에 보냄, 1894년 5월 15일:

일본인의 성격은 흔들리고 불안정하니, 만약 우리가 다시 병사를 추가해 넉넉하게 집합시키면 일본인의 교활한 모략을 열게 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의심 때문에 반드시 싸우게 되는 것은 특히 모략을 깨부수는 상책이 아닙니다.

(동학혁명기념재단 2017, 166)

원세개와 왕성에게 보내는 전보에서, 이홍장은 일본이 철병하지 않는다는 최악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군사를 동원하겠다는 의중을 보이지만, 이홍장은 이러한 추가 파병이 일본의 의심을 쌓아 ‘대국을 그르칠까 우려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동학혁명기념재단 2017, 167-170). 또한 왕성에게 무쓰 무네미쓰 및 이토 히로부미와 ‘절실하게 협상할 것’을 당부합니다(동학혁명기념재단 2017, 175).

하지만 군사력의 차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정식과 이홍장은 조선의 속방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정식은 ‘중국의 변속 국가 중 조선보다 중요한 나라는 없으며(文廷式 1993, 7)’, 20여년 동안의 조공은 부족함이 없으니 신하의 예를 지키고 있고, 조선에서 내란이 일어나면 중국이 군대를 파견하고 그 난을 평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도리에 마땅한 일이라고(文廷式 1967, 29-31)’ 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사대자소의 질서 내에서 조선과 청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도 같은 관계였으며, 특히 청의 조공 질서 내에서 조선은 가장 중심 국가였기에, 조선에 대한 종주권이 무너지는 것은 곧 동아시아 내 청이 구축해 온 구 질서가 무너짐을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정식은 ‘무릇 조선은 우리 조정을 신하로서 모시는 나라로, 동삼성(東三省)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文廷式 1967, 29-31)’ ‘일본이 우리의 무방비를 틈타서 군대를 잠입시켜 우리를 기습하게 되는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文廷式 1993, 5-6)’고 기록하였습니다. 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조선이 일본을 포함한 열강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되면 청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해석하였기에, 문정식은 일본이 조선의 요충지를 점령하면서 중국의 변방을 노리고 있으니 군대를 증강시켜 남북양 해안을 순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文廷式 1967, 29-31).

조선에 대한 종주권에 대해서는 이홍장 역시 비슷한 인식을 보입니다. 북양대신이었던 이홍장은 북양 육해군을 통괄하고



재외공관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한 동시에, 1881년 이래 조선 사무를 관할하였고 1885년 이후 한성 주재 원세개를 통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해 왔으므로,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홍장은, 일본이 철병을 차일피일 미루던 5월 말이 되자, 조선이 일본의 압력에 못 이겨 중국의 속방이 아님을 인정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군대를 일으켜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동학혁명기념재단 2017, 226).

하지만 일본의 조선 파병은 이미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약의 제 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임을 천명하였으나, 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1894년 조선에 대한 청의 파병에 대해 청이 일본에 보낸 공문에서 ‘속방(屬邦)’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은 이를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홍장은 ‘속방을 보호하는 구레를 어지럽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일본의 인정여부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답하며 일본과의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동학혁명기념재단 2017, 121).

무쓰 무네미쓰는 5월 중순이 되자 일본의 철병을 미루며 양국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 정부 및 세무(稅務)를 정리하고 개혁하며, 조선 군대를 가르쳐서 스스로 반란을 진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홍장은 조선의 반란이 이미 평정되었으며, 일본은

더더욱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네미쓰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동학혁명기념재단 2017, 164). 또한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7월 19일, 일본과의 긴장이 극에 달했을 때도 이홍장은 청일 양국군의 조선 출병이나 이권 협상, 내정개혁 등 조선의 국가적 행사에서의 청일 평등 대우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

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속방으로서의 조선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시각을 공유했던 문정식과 이홍장은, 외교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서로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정식은 영국과 독일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형세이기 때문에, 청나라가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영국과 독일은 자연스럽게 청나라를 도울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이 러시아와 결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청나라 역시 영국과 연합하여 일본과 러시아를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후지무라 미치오 1997, 124). 영국과 독일은 항상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주목하고 있었으므로, 청나라가 일본과 러시아를 저지할 경우 영국과 독일이 청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반면 이홍장은 원세개를 통해 일본과의 협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러시아에게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홍장은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게 조선에 개입하는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곧, 러시아와 영국이 일본을 견제하되 조선에 야욕을 품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월 17일 이홍장이 총리아문에 보낸 글에 의하면, 일본이 러시아를 두려워하는 형세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개입한다면

일본이 바로 통제될 것이라는 그의 굳은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동학혁명기념재단 2017, 181).

하지만 러시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무네미쓰는 청국 정부가 조선이 내정개혁을 완결할 때까지 일척 양국이 조선의 내정개혁이 완료될 것을 기다리거나, 일본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선의 내정개혁을 실행함에 청국 정부가 방해하지 않는 쪽을 보증한 후에만 철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무쓰 무네미쓰 2013, 83-84). 또한 러시아 정부는 이미 일본이 막대한 수량의 병력을 파견하였고, 조선의 자주 독립 외에는 일본의 별다른 야심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청을 도울 경우 영국이 적대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잃게 됩니다(吳相湘 1959, 194).

1894년 6월 오오토리는 조선정부가 신속하게 청군이 철수하도록 요구하게 하고, 중국과 조선 사이의 세 건의 통상 장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선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6월 21일 일본은 병력을 파견하여 경복궁을 포위 점령하였으며, 7월 25일 대원군은 일본의 위협 하에 조선의 자주를 선포하고, 청군의 철병권을 일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같은 날 새벽 일본군은 아산만에서 중국 해군에게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결국 전쟁이 시작되고 맙니다.

결국 조선이라는 좁혀질 수 없는 문제를 둘러싼 채, 구 종주국이었던 청과, 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일본의 대립은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일찍이 일본군의 위력을 깨닫고 이홍장은 최대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자 했으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은 그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결국 일본과의 협상은 결렬되고 만 것입니다. 7월 24일 일본은 청과의 관계단절을 의미하는 2차 절교서를 발송하였고, 어쩔 수 없이 이홍장도 군사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李鴻章 1985, 775). 이를 통해 이홍장은 결국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 청일전쟁 발발 이후 문정식과 이홍장의 대립

7월 25일 전쟁이 시작되고 난 후에도 이홍장은 외교적인 중재에 기대를 걸게 됩니다. 7월 27일 이홍장은 선전포고문에서 일본의 선제 도발 및 조청, 종번(宗藩)관계를 명시하여 종전 후 조선 문제에 대한 외교적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총리아문은 이에 따라 주중 각국 공사에게 전쟁은 일본이 도발한 것이며 조선과 청의 종번 관계는 각국이 이미 조선과 조약을 체결할 때 인정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李鴻章 1985, 817). 이는 기존에 이홍장이 ‘만국공법’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믿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국공법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일본이 만국공법을  
어기면서 중국을 침략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중국은

주화로써 대응해야 한다. 만국공법의 규정에 의하면 먼저 전쟁을 일으킨 쪽이 도리에 어긋난다.

(李鴻章 1965, 26)

전쟁이 발생했음에도, 이홍장은 일본이 선제공격했음을 다른 국가들이 인지하면 종전 협상에서 외교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9월 9일이 되자 문정식은 주전론자 37인을 규합하여 상소를 올리며, 영국 및 독일과의 연합을 통해 일본에 대항하자는 주장을 다시 꺼내 듭니다.

聯銜密陳敵情酌測宜出奇計以弭兵釁摺, 1894년 9월 9일:

이때 왜인이 뜻을 모으면 영국에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인들과 그 군사적 계책을 독일 역시 깊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자못 이 나라들과 왜의 싸움을 벌이려는 의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병선 50여 호는 이미 남양에 집결하였습니다. 독일인들도 특히 우리에게 후하여, 모든 병력이 중국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신 등의 우매한 의견은 현재를 기회로 삼아, 측근 중신을 보내어 그것을 의논하게 하고, 비용을 들여 왜인을 벌채하게 해야 합니다. 영국과 독일 사신은 이미 그 뜻을 내비치고 있으며, 호광독신(湖廣督臣) 장지동(張之洞)이 비밀리에 상의를 거쳐 대략 2000 만금 내외로 뜻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인이 프랑스, 러시아와 비밀리에 연계하였고, 어찌 우리가 비밀리에 영국 및 독일과 연계하는 것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文廷式, 汪叔子編 下冊 1993, 26)

此時倭人得志，勢將不利於英；法人與其兵謀，德國亦所深忌。故聞英人頗有籍端與倭開釁之志，兵船五十餘號已盡集南洋。德人亦特厚於我，凡將弁之效力於中國者，其主皆特賞寶星；又任中國購買軍火，籍資馭敵。此非偏有所厚也，衛我即所以自衛也。臣等愚見，以為宜及此時，特派親信重臣與之商議，資其兵費，使伐倭人。聞英、德使臣皆已微示其意，湖廣督臣張之洞亦經密與商謀，大約不過二千萬金上下，便可遵辦。倭人既暗約法、俄，何能禁我之密連英德？且與其議和而用為賠費，何如戰勝而出以犒師？得失甚明，可無疑義。雖他日或有特功之意，如回紇之需索於唐，然兩禍相權，其輕於受侮於倭則已多矣。

하지만 이미 9 월 15-16 일의 평양 전투에서 청의 사상자가 일본 사상자의 10 배에 달하는 등 청이 패하고, 특히 17 일 황해 해전에서 북양 함대가 일본에 패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패전으로 인해 9 월 19 일, 이홍장은 마침내 북양해군의 전투력으로 일본을 대적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실토하게 됩니다(李鴻章 1985, 1008-1009). 10 월 10 일과 12 일 두 차례에 걸쳐 이홍장과 총리아문은 영국 공사 오코너와 러시아 공사 카시니에게 종주권을 포기하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일본과 평화협상을 할 수 있도록 거중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約瑟夫 1959, 52-54). 또한 11 월 초 일본이 요동반도까지 진출하고, 1895 년 일본이 산둥반도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여 수도 베이징이 공격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이홍장은 서둘러 강화 협상에 들어갑니다.

한편 12 월 26 일, 문정식은 중국의 강약 형세가 각국의 형세와 밀접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익을 전부 일본에게 주고 조약을 맺는다면 각국이 주시하다가 일본이 얻은 바를 균점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절대 화해해서는 안 됨을 다시 주장하였습니다.

문정식은 강화 협상에도 부정이었습니다. 1895 년 3 월, 대만을 할양한다면 사방에서 중국을 해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만 순무와 함께 대만을 보전할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3 월 28 일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이 베이징에 전달되자, 문정식은 상소문을 작성하여 강남성과 강서성에서 각각 54 인, 120 인으로 구성된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는 수도를 서안으로 천도하고, 다시 병력을 모아 일본에 대항할 것을 주장했습니다(정재경 2000, 148). 하지만 결국 1895 년 3 월 19 일부터 시모노세키에서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 간에 협의된 강화 조약은, 4 월 17 일에 체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선의 자주 독립국 확인, 요동반도와 대만섬 및 펑후 제도의

일본 할양, 일본에 대한 배상금 지불, 청나라 내 충칭, 쑤저우, 항저우 등의 개항과 무역의 자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청은 ‘백년국치’를 맞이하게 되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부상이 시작되며, 아시아는 격동의 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 나가며

이 곳 일청강화기념관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중국의 아시아 지배권이 막을 내리고 전쟁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19세기 동아시아 지진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끝이 곧 아시아 내 힘의 변동과 일본 제국주의의 서막이었다는 점에서 19세기 동아시아 지진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종결되고, 그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끝난 시점에서 이를 되돌아보며 선대의 결정을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는 일은 아주 쉬우며, 우리는 자주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청일전쟁 전후 주전론과 주화론을 대표하는 문정식과 이홍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러한 대립과 논쟁이 단순히 정치적 파벌 싸움이 아닌, 치열한 고민의 결과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청강화기념관을 방문한 당일엔 날이 맑고 안개가 없어 바다 건너 저 멀리 도시와 산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부터 125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어떤 국제정세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을까요? 우리 앞에 얽혀 있는 문제들을, 어떠한 식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렇게 시모노세키를 떠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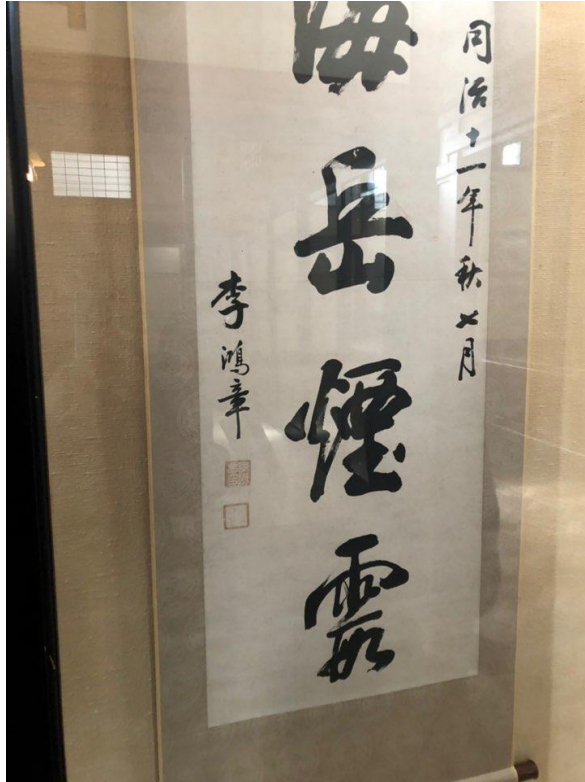


사진 3. 시모노세키에 이홍장이 남긴 글씨

## 참고문헌

### 1. 1 차 문헌

- 김기효. (2017). 《근대동아시아 외교문서 해제 14, 중국편(1894~1903년)》. (서울: 선인.)
- 동학혁명기념재단. (2017).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9》. (서울: 삼도.)
- 李鴻章. (2007). 顧廷龍, 戴逸 編. 《李鴻章全集》. 安徽: 安徽教育出版社.
- 李鴻章. (1985). 顧廷龍, 戴逸 編. 《李鴻章全集 電稿 二》.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石泉. (1997). 《甲午戰爭前後晚清政局》.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 文廷式. (1993). 《文廷式集》. 北京: 中華書局.
- 文廷式 外著. (1967). 《中日甲午戰爭》. 臺北: 廣文書局
- 戚其章 主編. (1989). 《中日戰爭》. 北京: 中華書局.
- 吳相湘. (1959). “第一次中日戰爭.” 《中國近代史論叢》. 南京: 正中書局.
- 菲利南·約瑟夫. (1959). 《列強對華外交》. 北京: 商務印書館.
- 張曉生. (1993). 《中國近代戰策輯要》.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 2. 단행본

가. 국문

- 박영재. (2002). 《청일전쟁》. 신편 한국사 40 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최희재. 1989. 《중화제국질서의 동요》. 강좌 중국사. (서울: 지식산업사.)

나. 번역본

- 후지무라 미치오. (1997). 《청일전쟁》. 허남린 역. (서울: 소화.)
- 량치차오. (2013). 《리홍장 평전》. 박희성, 문세나 역. (서울: 프리스마.)
- 무쓰 무네미쓰. (1994). 《건건록》. 김승일 역. (서울: 범우사.)

다. 영문

- Paine, S. C. (2005).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perceptions, power, and prim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정기 간행물

가. 국문

- 안철수. 2011. “청말 양무파의 대외정책과 청류파의 대응.”  
〈중국인문과학〉 47. 367-388.
- 정재경. 2000. “청말 후기청류파 문정식의 개혁운동과 변법사상.”  
〈근대 중국연구 1〉 4. 139-165.

나. 영문

Greve, A. Q. and Levy, J. S. 2018. “Power Transitions, Status  
Dissatisfaction, and War: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Security Studies*. 27(1). 148-178.

# 미국의 EDGE Initiative VS. 중국의 Belt and Road Initiative: 새로운 에너지 동맹의 미래

## \_규슈국립박물관

이수지

연세대학교

### 들어가며

사랑방 13 기의 일본 답사 셋째 날인 2020 년 1 월 9 일, 마지막 일정으로 규슈국립박물관을 갔습니다. 규슈국립박물관에서 일본의 역사를 엿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국제정치가 무엇인지, 한국인에게 국제정치학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비는 계속 왔는데 한국 보다는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규슈국립박물관은 꽤나 넓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시장으로 입장했을 때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 마냥 모든 곳이 시간, 역사 순으로 고대 시기의 도구나 유물들이

맏았습니다. 유물을 보존 하기 위해 조명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자세히 살피려 유물과 더 가까이 기대지는 제 몸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살피며 한국과의 친밀하고 의존했던 과거를 보니 신기했습니다. 사실 19 세기 이후부터는 한국이 일본 보다 소위 “후진국”이고, 20 세기 들어서는 본격 일본이 더 선진화 된 곳이라고 배웠던 저희. 사실 19 세기 이전에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한국에 더 의존하고 뒤따라 온 흔적을 보니 역시 국제 패권의 유동성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규슈박물관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구간도 마련해주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체험형 구간도 있어서 오감이 즐거웠습니다. 나의 생각과 몸이 모두 자극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를 살피면 바로 이 규슈 지역이 예전에 일본에서 첫 무역이 일어났던 곳이죠. 가장 서쪽 지역이라 해양 무역은 여기서 시작했고 이를 통해 어찌면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양과 외교가 활성화 되고 선진국이 되는 것에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외교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국과 일본은 아직 독도와 위안부 관련 분쟁이 미해결의 상태고, 중국은 지역적 패권을 너머 미국과의 패권전쟁을 선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이긴 하지만 북한문제에도 그렇고, 일본과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미들 파워 이상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얼토당토하고 안타까운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와 관련한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주변국끼리만 논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파워가 그다지 크지 않은 이와중에, 다수의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IT 업계, 경제, 에너지 등)은 한국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치학도로 고민하는 것은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진 1. 규슈국립박물관에 입장

## 고대 규슈와 한국의 역사

규슈박물관은 규슈의 역사, 특히 중국, 한국을 비롯한 외교 역사와 문화 교류 등을 다루는 박물관입니다. 규슈는 일본의 가장 남쪽 지역임으로 세계와 첫 무역을 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포르투갈과 1540 년대에 “난반무역”을 시작하였고, 1600 년대에는 더치와 교류가 이뤄졌던 곳이 규슈 지역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 다리 역할을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규슈와 첫 교류는 100-300 년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서일본은 사절을 한국으로 꾸준히 보내오며 의존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가야가 특히 일본이랑 가까웠는데요, 바로 쇠, 철을 수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제는 화가와 학자들을 통해 중국 문화를 수출했습니다. 가야와 백제를 통해 도자기, 유교, 법정, 논 농사, 중국어, 불교, 건축 공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규슈와 한국은 신라 통합 이후 더 활발해졌습니다. 846 년에는 장보고가 규슈에 무역소를 설치하였고, 통역사들도 배치했습니다. 규슈 대체부 무역소를 통해 신라 무역사와 관리들이 무역을 했습니다. 일종의 행정관청 같은 곳이었죠. 바로 규슈의 이곳을 중심으로 장보고 선원들은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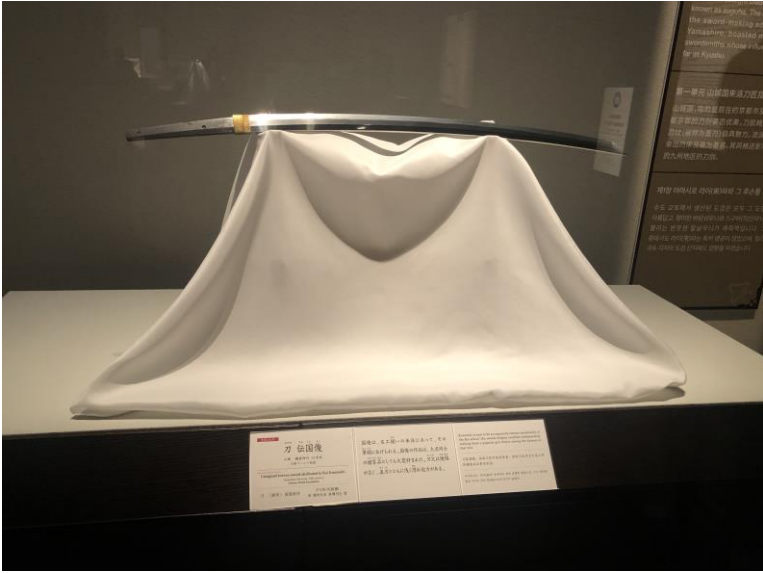


사진 2. 규슈국립박물관에 있는 일본도

## 20 세기 이후 배경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처음으로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라는 정책을 공개했고, 그 이후 그 정책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입니다. 동아시아 국가중에서는 역사적으로 미국은 일본과 가장 많은 교류를 해왔습니다. 1983년도 레이건 대통령의 Nakasone Joint Statement, 1987년 US Nuclear Cooperation 등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에너지 합의가 40년 가까이 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1 년 지진 후 에너지 원조를 제공했고, 중국과는 US China Clean Energy Research 설립, Energy Action Plan 의 추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는 에너지가 외교 논의에서 많이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거시적 정책의 일부로 다뤄진 것은 오바마의 Pivot to Asia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때부터 외교 정책의 포커스를 중동, 유럽에서 아시아로 변경한 정책이 Pivot to Asia 였습니다. 이 Pivot to Asia 의 일부분으로 Asia Pacific Comprehensive Energy Partnership(ACEP) 를 발표했고 비로서 에너지 논의가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심 외교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나 자신만의 새로운 접근,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라는 정책을 발표했고, ACEP 또한 EDGE Initiative 라는 에너지 정책을 탄생시켰습니다.



사진 3. 규슈국립박물관에 있는 모형

## 미국 EDGE Initiative 의 현황분석 및 이해 - 미국, 일본, 한국의 동맹 형성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Free and Open Indo Pacific 이라는 용어를 베트남 APEC CEO 서밋에서 사용함으로써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선포 했고, 특히 EDGE Initiative 를 통해 에너지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EDGE 는 오바마의 ACEP 와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ACEP 는 재생에너지, 협력 에너지 시장, 천연가스 활용,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같은 환경적 문제들에 집중을 했다면 트럼프의 EDGE 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동맹, 개방된 에너지 시장, 에너지 무역 관계 개선, 에너지 접근성 과 같은 외교적, 무역적 성격을 띠니다.

2018 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Free and Open Indo Pacific 의 의미를 풀이해줬습니다. Free Indo Pacific 이란 모든 국가가 타국의 강압으로부터 자국의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자유라 함은 굿 거버넌스 그리고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구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Open, 혹은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이란, 모든 국가에 해로와 항공로가 개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영토와 해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원한다고 밝히고 각국이 자국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제 관점에서의 개방은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개방적인 투자 환경, 국가간의 투명한 협정, 지역 내 유대를 견인하는 연결성의 강화 등을 뜻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설 끝 앞으로 디지털 경제, 에너지, 인프라 등에 1 억 1300 만 달러를 투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구상은 EDGE 를 통해 발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DGE 는 에너지를 통한 개발 및 성장 제고의 약자로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에 투자하여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수출, 생산, 이전, 저장, 구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 역량에는 방대한 천연 자원, 세계를 선도하는 민간 기업, 정교한 개발금융 수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 전문성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이러한 역량을 총동원해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에너지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EDGE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외교와 아시아의 에너지에 집중하는 이유는 결국 중국입니다. 중국을 의식하기 때문에 Indo Pacific 라는 더 방대한 지역을 칭하며 일본, 인도, 호주까지 포함시키는 속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반되는 한가지 변수 추가는 미국의 shale gas 입니다. 미국에서는 shale gas 를 통해 에너지에 대한 태도가 더 적극적으로 됐고, 에너지가 중요한 외교 도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제 에너지 동맹의 윤곽은 더 뚜렷해집니다. 미국, 일본, 한국이 한편, 중국, 러시아 한편 - 마치 냉전과 비슷한 구도로 에너지 동맹은 꾸러질 전망입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강한 에너지 동맹은 일본입니다. 왜냐면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에너지 빈민국입니다. 일본은 석유 한방울이 안 나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에 의존해야 합니다. 더불어 미국은 한국의 참여 또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적극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동맹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아직 두루뭉실합니다.

한국은 미국과는 안보동맹이지만 중국과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복잡합니다. 게다가 아직 한국은 에너지에 대한

투자나 연구가 덜 된 상태입니다. 미국 Atlantic Council 싱크탱크의 오미연 박사에 의하면 한국은 앞으로 “balancing act”을 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전적으로 미국만을 지지한다고 하기엔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러시아와도 인프라 협력(항만, 철도, 천연가스)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미국과는 EDGE Initiative 와 Energy Security Dialogue 등을 통해 참여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이 너무 적극적인 미국의 에너지 동맹으로 부상한다면 다자 협력 보다는 양자 협력 위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국 Belt and Road Initiative 의 현황분석 및 이해 - 중국, 러시아 동맹 형성**

미국, 일본, 한국이 하나의 에너지 동맹이라면 그 반대편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10년간 굉장히 돈독해진 가운데, 에너지가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했습니다. 2012 년도에는 China-Russia Energy Cooperation Committee 가 개설 되었고 2019 년 3 월에는 Russian Chinese Energy Forum 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는 에너지 동맹에 있어 상징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중국과의 협력 강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기 협력의 목적이 다르면서도 서로

잘 맞습니다. 러시아는 경제와 business interest 때문에, 중국은 Belt and Road Initiative 때문에, 서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2016 년 이후 러시아는 중국의 원유 최대 공급자로 부상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우디에게서 원유를 수입했지만 최근엔 이 역할을 러시아에게 줄 만큼 서로 에너지 협력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파이프를 중국에게 허용하며 둘의 경제적, 에너지 의존도는 높아졌습니다.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하는 “시베리아의 힘” 천연가스관 1 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며 2019 년 12 월부터 이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러시아 가즈프롬과 중국 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이 지난 2014 년 가스 공급에 합의를 이루며 본격 추진 됐습니다. 가스관은 동부 시베리아에서 극동 하비롭스크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며 총길이는 4000km 에 달합니다.

양국은 2014 년 9 월 착공해 5 년만에 1 단계 사업을 마치게 됐으며 2023 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천연가스관 건설이 마무리되면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가스 수입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서부 가스관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중국 서부 지역에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동부에 이어 서부에도 가스관 사업을 진행하며 중국은 러시아와 에너지 동맹을 강화 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Polar Silk Road”라고 칭했고 이 또한 둘의 에너지 동맹의 강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양국은 에너지, 식량, 북극 항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했습니다.

## 나가며 - 전망 및 결론

현재 에너지 동맹이란 중국과 러시아가 더 빨리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스 파이프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시작한 단계이며, 시작한 이상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의 Belt Road Initiative 가 트럼프의 EDGE Initiative 를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또한 동맹 아키텍처를 꾸려 앞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동맹에 합류한 아시아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 밖에 의존할 수 없는 에너지 빈민국이며 미국과 대규모 shale gas 도입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은 조만간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일본 보다 더 복잡합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또한 필요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면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특히 “에너지 전략 2035”를 통해 한국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미국만을 지지한다고 하기엔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러시아와도 인프라 협력(항만, 철도, 자연 가스)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미국과는 EDGE Initiative 와 Energy Security Dialogue 등을 통해 참여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이 너무 적극적인 미국의 에너지 동맹으로 부상한다면 다자 협력 보다는 양자 협력 위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4. 규슈국립박물관 출구 앞에서

## 참고문헌

### 1. 인터넷 자료

”Asia EDGE – Enhancing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Energy.”

US Department of State. (검색일 2019.11.11)

“Enhancing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Energy.”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검색일 2019.11.01)

“President Donald J. Trump’s Administration is Advanc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White House Factsheets. (검색일 2019.11.10)

“Indo-Pacific Strategy Repor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검색일 2019.12.01)

“The United States, India, and Future of the Indo-Pacific Strategy.”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검색일 2019.12.01)

Armitage, Richard L., Joseph S. Nye. 2012. “The U.S Japan Allianc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검색일 2019.12.20)

CNBC. Shao, Grace. (Dec 3 2019). “Russia opens Siberian pipeline to

China as Beijing expands its influence in the Arctic.”

(검색일 2019.12.20)

CNBC. Ellyatt, Holly. (Nov 29, 2018). “Business leaders hail Russia’s

booming energy ties with China.” (검색일 2019.12.20)

The Diplomat. 2019. “The 2019 US Indo-Pacific Strategy: Who’s It

For?” (검색일 2019.12.20)

- Harding, Brian. 2019. “The Trump Administration’s Free and Open Indo-Pacific Approach.” Southeast Asian Affairs. (검색일 2019.12.20)
- Japan Times. 2019. “What does the 'Indo-Pacific strategy' mean?” (검색일 2019.12.20)
- Kashin, Vasily, Ma Bin, Yuki Tatsumi, and Zhang Jian. 2019. “Sino-Russian Relations Perspectives from Russia, China, and Japan.”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검색일 2019.12.20)
- Martin, William F. 2014. “Japan Energy Security Post-Fukushim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검색일 2019.12.20)
- The New York Times. (2013.07.10) "China and Russia, in a Display of Unity, Hold Naval Exercises". (검색일 2019.12.20)
- Oh, Miyeon. 2018. “How Energy Infrastructure is shaping geopolitics in East Asia.” World Economic Forum. (검색일 2019.12.20)
- South China Morning Post. 2019. “A US Indo-Pacific strategy that isolates China is small-minded and dangerous.” (검색일 2019.12.20)
- Sutter, Robert. 2018. “China-Russia Relations Strategic Implications and U.S Policy Options.”.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검색일 2019.12.20)
- World Energy Council. 2019. “World Energy Trilemma Index.” (검색일 2019.12.20)

## 2. 정기 간행물

- Hughes, Christopher W. 2007. "Not quite the 'Great Britain of the Far East': Japan's security,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war on terror' in East Asia". *Warwick Research Archive Portal(WRAP)*. 325–338.
- Iriye, Akira. 1993. "Pearl Harbor: A Fifty-Year Perspective." *Amerikastudien*. Vol. 38 No. 1. 13-24.

## 사진 및 참고자료



DAY 1. 후쿠오카 공항 도착



DAY 1. 나가사키 구라바엔 1



DAY 1. 나가사키 구라바엔 2



DAY 1. 나가사키 구라바엔 3



DAY 2. 아리타 도자기 마을



DAY 2. 규슈 도자기박물관





DAY 3. 귀국 전 카페에서

## 참고자료 1: 이광민 보고서(영문)

#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Short-Term Episode, Regional Naval Confrontation in Indo Pacific

## : Balance or Escalation?

Lee Kwang Min

### 1. Introduction

#### 1.1 Background of Analysis and Methodology

The rise of China and declination of US, along with various expected outcomes of, and also the process of power transition has long been asserted and debated. From John J. Mearsheimer's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and to "Destined for War" by Graham Allison, the long-term understanding of US-China dynamic of power transition has been the most interested topic recently and relatively well-known, dealing with the dynamic with the keywords of "preventive war or power transition", "Thucydides Trap and Kindleberger Trap". However, merely depending on theoretical and long-term understanding of the

dynamic cannot explain the flip side of the coin, could result in prediction error. Thus, in order to focus on short-term and more dynamic analysis of the logic, it would be necessary to view military power, dynamic and geopolitical situation between US and China in East Asi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noted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n 2013, clearly shows the need of different bipolar relationship from the Cold War bipolarity, emphasizing less competitiveness but more interac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US-China<sup>1</sup>. In fact, in the aspect of intensity of bipolarity, Cold War exhibited more competitiveness and less direct interaction, while US-China in present world exhibits comparatively less competition and more direct interaction, reaching the first phase deal in economic sector through negotiation in December of 2019<sup>2</sup>. Likewise, relatively loose and more interactive bipolarity can be found than the past, along with improbability to expect the ‘destined war’ in present world between two great powers in twenty-first century with mere outcome of past analysis, as economy and technology became critical factor in the aspect of intensity.

---

<sup>1</sup> The Asan Forum. (2013.10.04). “Modeling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A Chinese Viewpoint” (<http://www.theasanforum.org/modeling-a-new-type-of-great-power-relations-a-chinese-viewpoint/>) (검색일: 2019.12.27)

<sup>2</sup> The Diplomat. (2019.12.14). “The U.S. and Chinese announcements on the “phase one” deal are optimistic in tone, but their differences hint at lingering frictions.” (<https://thediplomat.com/2019/12/the-us-china-trade-deal-is-finally-here/>) (검색일: 2019.12.27)

On the other hand, at the same time, technological development enabled accurate counterforce attacks and perfect preemptive attacks upon adversary, generating the world with no MAD<sup>3</sup>. Transparency Revolution, moreover, brought about the effect of ‘lifting the fog of war’ in battlefield for accurate attacks and damage limitation, and simultaneously, created effective but vulnerable assets regarding C4ISR, becoming effective first attack target for ‘blinding the enemy’s eyes’ and a factor for escalating crisis<sup>4</sup>. Thus, US-China relationship, from the long-term viewpoint of Thucydides Trap, may form a balance, however, from the short-term perspective of military dynamics and regional confrontation state in East Asia, the expected outcome cannot be optimistic.

Since the Taiwan Crisis in 1996 when US could access free entrance in Taiwan Strait and China had no capability to respond<sup>5</sup>, investment on military continuously increased. A2/AD (Anti-Access and Area Denial) capability were developed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keep US out of the first-sec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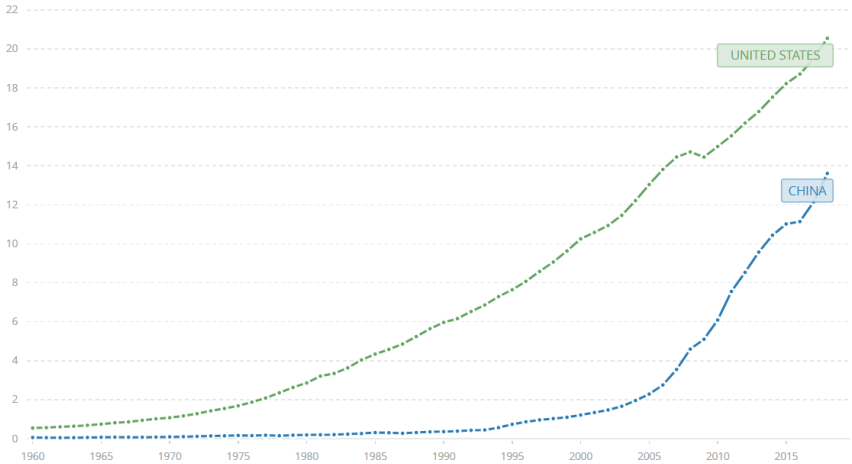
---

<sup>3</sup> Keir A. Lieber and Daryl G. Press. (2017). “The New Era of Counterfor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1. No.4. pp. 9-49.

<sup>4</sup> James M. Acton. (2018). “Escalation Through Entangle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43. No. 1. pp. 56-99.

<sup>5</sup> Robert S. Ross. (2000). “The 1995-96 Taiwan Strait Confront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2. pp. 87-123.

island chains and secure a space for its influence in East Asia<sup>6</sup>. Also, to see from the graph below, since then, the GDP gap between US-China shrunk dramatically, rising as G2,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in 1996.



<US-China GDP change 1960-2019>

Source: World Bank, “GDP data”, <https://www.worldbank.org/> (검색일: 2019.12.27)

However, the situation is more complicated than the Cold War era in that China’s military aim for reunification of Taiwan remains static, along with territorial disputes with other neighboring states, including Philippines (Spratly Islands), Japan (Senkaku), Vietnam etc. Though may regard as limited

---

<sup>6</sup> Si-Fu Ou. (2014). “China’s A2AD and Its Geographic Perspective.” 亞太研究論壇第 60 期.

nationalistic political aim, from the viewpoint of outside, postures are perceived as revisionist and expansionist. Hence, the regional confrontation in East Asia takes places: China with offensive political aim and defensive military balance<sup>7</sup>, and US with defensive political aim to protect allies but with offensive military balance to penetrate through the chain.

US, in 2012, as a counter-response against A2/AD, introduced the notion of “JOAC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along with the notion of “Air-Sea Battle”, to penetrate A2/AD<sup>8</sup>. As a result, two counter-strategies form regional confrontation in East Asia with mismatch of different political aims and military balances. Ergo, to analyze the dynamic, firstly require understanding the scale of US-China naval power in current confrontation state, as a fundamental power for operation if battle takes place in the area. Secondly, dynamic analysis of two strategies is required for predicting the outcome of confrontation: crisis escalation or de-escalation, and balance or imbalance.

In short, focusing on military dynamic in Indo-Pacific, in second part, numerical and overall comparison between two naval power (mainly on fleet power) for current situation will be made through mathematical way, in order to gain significant comparison. By using ‘weighted average’, will indirectly include technological factors in comparison, and show relatively accurate

---

<sup>7</sup> Defense Intelligence Agency. (2019). “China Military Power.”

<sup>8</sup> Department of Defense. (2012).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

outcome. It would be significant to take a look at naval power, since two great powers are allocating most budget on navy. In third part, dynamic of two strategical approaches will be analyzed mainly on naval power, focusing on the roles of navy in overall strategy and other supporting powers of fleet power. And lastly, will bring out an expected outcome of the short-term dynamic in East Asia regarding the navy and in total.

## 2. Comparing the Naval Power

In this section, based on the total number data set of both US-China, by applying different weight upon the types of fleet, depending on the importance in operation. Although no previous analysis upon the ‘importance’ of each type of fleet, the budget for build-up and versatility of the fleet would function as criteria for deciding the weight. However, the weight, though not precise, could still offer significant intuition of navy power difference reflecting other factors than mere number if multiplied by same weight for both US and China.

According to the US Navy budget in 2019, the navy’s budget was \$194.1 billion in total, increased by seven percent from last year. Among the budget, almost \$22 billion were spent for ship building and aircraft carrier overwhelmed all other ships with expenditure of more than \$2 billion for design and continuous construction. Secondly, three DDG51 destroyers costed total of \$5.6 billion with average of approximately \$1.7 billion each for total build-up. Thirdly, continuously funding for Columbia class submarine, navy

increased the fund to almost \$10 billion, with average of \$3~4 billion for each submarine. Lastly, amphibious ships and littoral combat ships each took up under one billion dollars.<sup>9</sup>

By following the cost and versatility as criteria, aircraft carrier should take the most weight, followed by submarine, cruiser, destroyer, combat ships and amphibious ships in order. From 2.1, by using weight average method, will draw out a numerical index, representing US navy ship power, and by applying the same weight on PLAN in 2.2, will also draw out a representative index.

## 2.1 US Navy

2018 US National Defense Strategy White Paper emphasizes the situation in Indo-Pacific and East Asia, and need of Joint Operation, setting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as states to be attentive of<sup>10</sup>. The importance of navy for Joint Operation is essential, which, US, not only the number, but also invests more on the weapon system and quality of fleets, to make suitable for Joint Operations and more flexible responses<sup>11</sup>. At the same time, US Navy, with the most budget, continuously increased the number of ships until 2018, and plans

---

<sup>9</sup> Department of the Navy. (2019). "The Department of the Navy FY2019 Budget."

<sup>10</sup> Department of Defens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up>11</sup> Department of the Navy. (2015). "The National Fleet Plan."

to maintain the increase until 2023<sup>12</sup>. Though the chart suggested by Congress Research Service shows numerical inferior in the number of fleets currently<sup>13</sup>, the research also points out the insignificance of comparing in numbers, as technology, size, capability, weapon system and others, including proficiency, are different, and in most of the aspects, Chinese fleets are rather inferior<sup>14</sup>. The article “Why China isn’t ahead of the US Navy, even with more ships” also points out the meaninglessness of numerical comparison<sup>15</sup>. Thus, to get significant data for comparison, rendering more weight depending on the importance of fleet is required.

<Chart A> shows the US current possession of fleet power. US manages total 11 aircraft carriers, including the recent Gerald R. Ford and with one under construction. With current total of 108 surface combatant, 79 submarines and 33 amphibious ships, more destroyer, combat ship, submarines and amphibious ships are under construction, expecting 289 in total.

---

<sup>12</sup> Department of the Navy. (2019). “The Department of the Navy FY2019 Budget.”

<sup>13</sup> Congress Research Service. (2019).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sup>14</sup> Defense Intelligence Agency. (2019). “China Military Power.”

<sup>15</sup> Brookings. (2019.09.10). “Why China isn’t ahead of the US Navy, even with more ships.”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8/09/10/why-china-isnt-ahead-of-the-us-navy-even-with-more-ships/>) (검색일: 2019.12.29)



<b>AIRCRAFT CARRIER (TOTAL 40%)</b>	11 (1 under construction)
<b>SURFACE COMBATANT (20%)</b>	Current Total: 108
<b>CRUISER (8.5%)</b>	22
<b>DESTROYER (8.5%)</b>	67
	(9 under construction, 12 under contract)
<b>LITTORAL COMBAT SHIP (3%)</b>	19
	(14 under construction and pre-production, 1 under trial)
<b>SUBMARINE (TOTAL 30%)</b>	Current Total: 79
<b>BALLISTIC MISSILE SUBMARINE (15%)</b>	14
<b>ATTACK SUBMARINE (5%)</b>	57 (christened included)
	(9 under construction)
<b>GUIDED MISSILE SUBMARINE (10%)</b>	18
<b>AMPHIBIOUS SHIP (TOTAL 10%)</b>	Current Total: 33
<b>AMPHIBIOUS ASSAULT SHIP</b>	8
<b>AMPHIBIOUS COMMAND SHIP</b>	2
<b>AMPHIBIOUS TRANSPORT DOCK</b>	11
	(2 under construction)
<b>DOCK LANDING SHIP</b>	12
<b>CURRENT TOTAL</b>	241

<Chart A: US Navy Fleet Power>

(Other support, auxiliary ships not included. Data from <https://www.navy.mil/>.)

With total weight of 100%, allocated each type of ship a different weight, referring to the budget and versatility. To calculate the index number for current US navy with the weight allocated above,

$$11 \times 0.4 + (22 \times 0.085 + 67 \times 0.085 + 19 \times 0.03) + (14 \times 0.15 + 57 \times 0.05 + 0.1 \times 18) + 33 \times 0.1 = 22.585$$

The US navy ship power index shows result of 22.585 in total, with 4.4 for aircraft carrier, 8.135 for surface combatant, 6.75 for submarine, 3.3 for amphibious ship. Though the index leaves out technological factors, including weapon system and capability, it does not generate error in comparing, as US, according to the China Military Report and China Naval Modernization Report, prevails in technology in most aspect. For example, comparing the major fleets, aircraft carrier and submarine, US aircraft carrier overwhelms in overall capacity for aircraft, and technology, using catapult method for flexible operation<sup>16</sup>, while Chinese navy is undergoing the upgrade in the technology

---

<sup>16</sup> Congress Research Service. (2019).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with inferior technology currently. Also, PLAN with 4 SSBN, to reach the range for attack target, needs supporting ships accompanied for operation due to the noise problem, and faces flexible response problem regarding the command control system of China, executing no deterrence patrol in the sea<sup>17</sup>, which indicates the structural challenge China is confronting. On the contrary, US, “protecting by losing” the submarines, maintains the credible and flexible deterrence with SLBM. Omitting the technological factor, therefore, does not downgrade the measurement of PLAN capability, but rather the US capability, giving more incentive to index for PLAN.

## 2.2 People’s Liberal Army Navy (PLAN)

People’s Liberal Army persistently increased the investment on navy since Taiwan Crisis, deploying its first domestically constructed aircraft carrier in trial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surface combatant, submarine, amphibious ships in total. Not only in numbers, but also in technological and structural aspect, tries to catch up the capability and flexibility. Especially, China’s third aircraft carrier expected to be Type 002 weighing 80,000~85,000 tons with catapult launch system, is found to be under construction<sup>18</sup>.

---

<sup>17</sup> David C. Logan (2017). “China’s Future SSBN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sup>18</sup> China Power. (2019). “Tracking China’s Third Aircraft Carrier.” (<https://chinapower.csis.org/china-carrier-type-002/>) (검색일: 2019.12.29)

**AIRCRAFT**

-

**CARRIER**

<b>CURRENT</b>	1 Liaoning (Type 001) under operation 1 Liaoning (Type 001A) under trial 1 Liaoning (Type 002) under construction
<b>EXPECTED</b>	4~6 more expected
<b>CURRENT TOTAL</b>	1

**SURFACE**

-

**COMBATANT**

<b>CRUISER (LARGE DESTROYER) (CG)</b>	4 of RENHAI-class (Type 055) Expected: more under construction
<b>DESTROYER (DDG)</b>	3 of LUYANG III-class (Type 052D)
<b>TOTAL DESTROYER</b>	42
<b>FRIGATE (FFG)</b>	27 JIANGKAI II-class (Type 054A) Expected: more under construction Total: 54
<b>CORVETTE (FFL)</b>	Over 40 JIANGDO-class (Type 056) with ASW Total: 42
<b>GUIDED-MISSILE</b>	60 HOUBEI-class (Type 022)

<b>PATORL BOAT</b>	Total: 60
<b>CURRENT TOTAL</b>	198

<b>SUBMARINE</b>	-
<b>NUCLEAR-POWERED BALLISTIC MISSILE SUBMARINE (SSBN)</b>	Total: 4 (JIN-class Type 094 with JL-2 SLBM)  Expected: next generation Type 096 with JL-3 SLBM
<b>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 (SSN)</b>	Total: 6 with JL-2 SLBM SHANG I-class (Type 093): 2 SHANG II-class (Type 093A): 4 Expected: SHANG-class (Type 093B) with guided-missile nuclear arm
<b>CONVENTIONAL-POWERED ATTACK SUBMARINE (SS)</b>	Total: 50 with ASCM Russian-Built KILO-class: 12 (8 capable of ASCM) SONG-class (Type 039): 13 YUAN-class (Type 039A): 17

	Expected: 3 YUAN-class (total: 20)
<b>CURRENT TOTAL</b>	60
<b>EXPECTED TOTAL</b>	65~70

<b>AMPHIBIOUS SHIP</b>	-
<b>YUZHAO-CLASS (TYPE 071)</b>	Total: 5
<b>TYPE 075</b>	New type launched in 2019
<b>CURRENT TOTAL</b>	59

<Chart B: PLAN Fleet Power<sup>19</sup>>

(Other support, auxiliary ships not included.)

Above charts show overall current data of PLAN fleet power, total number of 318 and expected number of approximate 330. The recognizable feature of PLAN is the overall build-up of fleets in every aspect, and the massive number of littoral combat ships and support ships. To calculate the index of PLAN fleet power,

---

<sup>19</sup> Office of Secretary of Defense. (2019).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 Congress Research Service. (2019).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 Defense Intelligence Agency. (2019). “China Military Power.”

$$\begin{aligned}
& 1 \times 0.4 + (42 \times 0.085 + 156 \times 0.03) \\
& \quad + (4 \times 0.15 + 6 \times 0.1 + 50 \times 0.05) + 59 \times 0.1 \\
& = 18.25
\end{aligned}$$

The PLAN index of fleet power from current data shows result of 18.25, explicitly lower than the US (22.585), even though with higher total number of fleets. The calculation assumes other conditions to be homogeneous, which indicat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dexes to be bigger than the actual outcomes, as China is still under process of technological improvement and structural reform to perform effective, credible deterrence against US.

Although China's condition to catch up US in naval power relies on technology, which is under its process, at the same time, US navy is also consistently upgrading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aircraft carrier, destroyer and submarine, focusing on the main fleets with higher weight. PLAN, however, also maintains its budget for small fleets and amphibious fleets, which presumes to be for its area denial strategy, but for other possible operations for Marine Corps<sup>20</sup>. Further, drills and experiences, structural problems still stand as obstacles after overcoming technological barriers in dynamic analysis.

---

<sup>20</sup> Congress Research Service. (2019).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Therefore, according to the analysis and also most of the recent views, do not expect PLAN to be a match against US Navy. An article by Michael Beckley, though lacking appropriate analysis of situation, even emphasizes that US allies inside the island chains have enough capability to outweigh Chinese military power without direct intervention of US, advocating the ‘active denial strategy’<sup>21</sup>. From the aspect of military power, ergo, it is likely to expect to form a balance between US and China with US dominance over the situation.

### 3. Strategic Dynamic of US-China: Entering and Solidifying the Dragon’s Lair

Despite the military analysis of naval power indicates US dominance in fire power over China even in the near future, and expects a balance in long-term, there always exists possibility for crisis to be extremely escalated when analyzing the regional confrontation in East Asia: China aiming offensive political goal with defensive balance and US aiming defensive political goal with offensive balance. As a background, in order to secure a space for such actions and ‘keep the US out’, China built the ‘dragon’s lair’ in East Asia, known to be A2/AD (Anti-Access and Area Denial), while US tries to penetrate into the lair through various routes. The crisis comes from the short-term

---

<sup>21</sup> Michael Beckley. (2017). “The Emerging Military Balance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42. No.2. pp. 78-119.



military strategic dynamic with geopolitical issue of Taiwan and other neighboring states around China, especially the US allies.

With the revision of PLA manuals of “New Generation Operations Regulations”, China emphasized the “local war under modern, high-technology conditions”, and in this sense, A2/AD capability aims the integrated denial of adversaries and overcoming the confinements of island chains<sup>22</sup>, changing from ‘continental defense’ to ‘periphery defense with maritime power projection’. US counteraction to function as “off-shore balancer” according to the active denial strategy<sup>23</sup>, however, US also tries to enter and has to enter the A2/AD of China for protection of allies if cross the redline.

Thus, the third section aims to view strategical posture and dynamic of US-China to penetrate and defend, focusing on the navy’s role in operation. In 3.1, will firstly analyze PLAN posture under A2/AD, and in 3.2, will view US navy posture against A2/AD, focusing on the technological and strategical ways to access the area.

---

<sup>22</sup> The Heritage Foundation. (2014. 7. 9). “The U.S. Needs an Integrated Approach to Counter China’s Anti-Access/Area Denial Strategy.”(<https://www.heritage.org/defense/report/the-us-needs-integrated-approach-counter-chinas-anti-accessarea-denial-strategy>). (검색일: 2019.12.29)

<sup>23</sup> RAND Corporation. (2015. 6. 8). “Why the United States Needs an Active Denial Strategy for Asia.” (<https://www.rand.org/blog/2015/06/why-the-united-states-needs-an-active-denial-strategy.html>). (검색일: 2019.12.29)

### 3.1 Solidifying the Lair: Aggressive Protection from Penetration

China, as the defender from US penetration, aims to solidify the A2/AD strategy under position of overall inferiority, with no experience of the “local war”, especially the “high-technology local war”, while US under position of overall superiority with abundant experience of local wars. Therefore, PLA faces question of how to defeat the relative superior enemy.

According to the RAND analysis of China’s approach toward relatively imbalanced warfare, PLA suggests some indirect defense methods to response against US. Importantly, with “no direct confrontation”, “aims to seize the initiative early with preemptive surprise concentrated attack with information superiority, against key points counterforce targets for distraction and shock”, which includes “command, information, weapon, logistic, link systems”. By doing this, China also aims to “raise the cost of battle” and “backdown the wills of adversary to fight” by “damaging valuable assets and generating casualties”. Ultimately, China intends to gain only “limited military victory and large political dominance” through the warfare<sup>24</sup>.

To achieve the goal, PLA firstly targets US C4ISR, computer network, satellite to blind the eyes of US by “killing the guy on the elephant”. Secondly, China targets logistics and the long support line of US, regarding the long distance and time length of forming the logistics as a vulnerable point for

---

<sup>24</sup> RAND Air Force Project. (2007). “Entering the Dragon’s Lair.”

US. Thirdly, air bases, ports sea lanes are another target for attacks. Lastly, China, perceiving aircraft carrier as the biggest target due to its range and air power, aims to put anti-access effort on aircraft carriers to hinder its effective operation<sup>25</sup>.

In total, though China as a defending state, takes relatively aggressive approach against US, viewing first effective preemptive attack as a necessary first step. To focus on the roles of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in such operations, in current situation, PLAN functions as a main actor to Anti-Access US naval powers. Due to its difficulty of directly confronting the US naval power, Chinese aircraft carriers and surface combatants cannot be expected to function as direct defense assets, but rather, indirect defense assets to deter US navy from accessing the area. Therefore, taking asymmetric posture to gain superiority over assets to support indirect defense strategy, such as submarines, littoral combat ships and destroyers, suits the ultimate goals to gain initiative for China.

To undermine the role of US navy, PLAN will take critical role to attack the support and transportation line to intercept the ships, and destroy sea lanes and ports, taking advantage over the short support line. Also, submarines will play a crucial role in forming a blockade with mines to block the access of aircraft carriers and surface combatants, which would eventually be the target.

---

<sup>25</sup> RAND Air Force Project. (2007). "Entering the Dragon's Lair."

US navy with lacking anti-submarine warfare (ASW) skills<sup>26</sup>, which China also considers as the weakness along with its size, plans to deter the access with submarines and aims to operate combined strikes along with air force and destroyers to destroy<sup>27</sup>. Plus, with recently developing supersonic ASCM, China believes its capability to effectively deter against US naval power. In sum, PLAN, with combination of air force and rocket forces, will function as a vital actor to indirectly deter the access of US naval power and destroy valuable assets to raise the cost of fighting for US with small combatant fleets and submarines. Though improbable to expect indirect approach of China after its balance of aircraft carriers and destroyers, with current imbalance in direct confrontation, China will take indirect approach to “push US away” from the area.

China, from 2019 Defense White Paper, still argues its goal of naval power for reunification of Taiwan and its dominance over neighboring states in South, East China Sea, securing the interest for China. However, at the same time, emphasizes the “peaceful rising” and “defensiveness” of its navy’s build-up of aircraft carrier and submarines. Moreover, China aims to match US

---

<sup>26</sup> The Strategist. (2017. 9. 24). “Towards China’s A2AD 2.0.” (<https://www.aspistrategist.org.au/towards-chinas-a2ad-2-0/>). (검색일: 2019.12.30)

<sup>27</sup> RAND Air Force Project. (2007). “Entering the Dragon’s Lair”

military power by 2050<sup>28</sup>, expecting 10 aircraft carriers total. Therefore, it would be improbable to expect direct confrontation between US-China, however, in short-term, it would be not be improbable to expect a regional confrontation with a third state in between inside the island chains, as two political aims collide.

### 3.2 Entering the Lair: Delicate Penetration for Protection

To best express the posture of US against current China's aggressive defense system, US is currently “knocking on the doors into the lair” and “looking for the leaks surrounding the lair”, figuring out how to enter the area with both technologically and strategically. Though as a penetrator accompanying massive offense power with 6 aircraft carriers to be deployed in Pacific, along with overall increase of the size of Indo-Pacific Command, US navy also requires defense posture to counteract against A2/AD posture, demanding more delicacy in operation.

Hence, the capabilities to counteract against Chinese A2/AD should meet before penetration. For US navy, RAND suggests “anti-submarine warfare capability” and “mine sweeping capability” without reliance upon the allies<sup>29</sup>.

---

<sup>28</sup> The Economist. (2019. 06. 27). “Xi Jinping wants China's armed forces to be “world-class” by 2050.” (<https://www.economist.com/china/2019/06/27/xi-jinping-wants-chinas-armed-forces-to-be-world-class-by-2050>). (검색일: 2019.12.30)

<sup>29</sup> RAND Air Force Project. (2007). “Entering the Dragon's Lair.”

To respond against what opponents regard as the “game-changer”, US suggests both technological and strategic answers: JOAC & ASB, Active Denial and Swarming.

JOAC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was introduced as a counter-response against A2/AD strategy US is facing in 2012, along with the notion of ASB (Air-Sea Battle)<sup>30</sup>. To preserve US power projection in East Asia against China, an integrated and more networked system of US military is seen necessary<sup>31</sup>. ASB, with “networked cross-domain operation” and “integrated air, sea, land capabilities” targets enemies with A2/AD by “attacking in depth”. Similar to China’s approach, ASB also aims C4ISR for its first target, and enemy capabilities in sequence, jointly approaching the A2/AD system by supplementing each other’s weaknesses<sup>32</sup>. Also, as China is relying heavily on its SSBNs, US continuously secures its second-strike capability (deterrence capability) through 14 SSBNs under water, and aims sea control and power projection through an overwhelming scale of aircraft carrier and surface combatants along with air strike forces, displaying rather a direct confrontation against China with more accuracy and delicacy in operation through joint

---

<sup>30</sup> Department of Defense. (2012).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 1.0.”

<sup>31</sup> CSBA. (2010). “Why Air-Sea Battle?”

<sup>32</sup> Air-Sea Battle Office. (2013). “Air-Sea Battle.”

operation<sup>33</sup>. Additionally, ‘active denial strategy’ gives critical insight of allies inside the island chains, US acting as an “offshore balancer” and supporting the capabilities of allies functioning as frontline states<sup>34</sup>. Not as a deterrence strategy, but also forming a network among the allies with similar geopolitical issues suggests evidence for US accessing the area.

Secondly, PLAN suggests technological answer toward the question of how to enter the dragon’s lair: “Swarming through Ghost Fleet”. Richard A. Bitzinger, emphasizing “unmanned system, automation, undersea warfare, complex integrated system” as a “Third Offset Strategy” to effectively counteract against A2/AD, suggests technological answer for US navy<sup>35</sup>. To integrate with the strategy, “swarming”, suggests different answer from current idea of JOAC in that it aims to directly counter A2/AD by using large, unmanned but simple weapon system. By “coordinating simple unmanned units (for example, unmanned drones, vessels or robot)”, navy aims to disperse power projection, reduce cost for conflicts and effectively breakdown enemy’s defense system. Despite its budget challenges, the expected cost-exchange

---

<sup>33</sup> Department of Defense. (2015).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up>st</sup> Century Seapower.”

<sup>34</sup> Eric Heginbotham and Jacob L. Heim. (2015). “Deterring without Dominance: Discouraging Chinese Adventurism under Austerity.”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15. 38:1. pp. 185-199.

<sup>35</sup> Richard A. Bitzinger. (2017). “Chinese A2/AD Capabilities and the US Third Offset Strategy.”

efficiency against A2/AD is found to be effective<sup>36</sup>. With total budget of \$628.8 million for 2020, US navy, along with the budget, plans to continuously increase the number of USV (Unmanned Surface Vehicle) and UUV (Unmanned Undersea Vehicle) until 2024, expecting 191 vessels in total. The UV vessels are more capable of dirty and dangerous missions with less cost than manned vessels, especially underwater operations, including mine sweeping and ASW, being a possible answer for two weaknesses of US navy without worrying about human capital<sup>37</sup>.

Below chart shows main actions of UV vehicles in operation.

<b>USV (UNMANNED SURFACE VEHICLE)</b>	<b>MAIN ACTS</b>
<b>LUSV (LARGE UNMANNED SURFACE VEHICLE)</b>	SUW+ASUW, ISR
<b>MDUSV (MEDIUM UNMANNED SURFACE VEHICLE)</b>	ASW, Mining, Armed Escort
<b>SUSV (SMALL UNMANNED SURFACE VEHICLE)</b>	Mine Sweep, Mine Neutralization

<sup>36</sup> Richard Gorrell, Alexander MacPhail, Joseph Rice. (2016). “Countering A2/AD with Swarming.” Air Command and Staff College Air University.

<sup>37</su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Navy Large Unmanned Surface and Undersea Vehicle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VERY SMALL UNMANNED  
SURFACE VEHICLE**

ISR, Armed Escort

**UUV (UNMANNED UNDERSEA  
VEHICLE)**

**MAIN ACTS**

<b>XLUUV (EXTRA LARGE UNMANNED UNDERSEA VEHICLE)</b>	Under Preparation (SUW+ASUW, ASW, ISR, etc.)
<b>LUUV (LARGE UNMANNED UNDERSEA VEHICLE)</b>	Under Preparation
<b>MDUUV (MEDIUM UNMANNED UNDERSEA VEHICLE)</b>	Buried-Volume Mine Hunting
<b>SUUV (SMALL UNMANNED UNDERSEA VEHICLE)</b>	ISR

<Chart C: US Navy UV>

(Source:

<https://www.navsea.navy.mil/Portals/103/Documents/Exhibits/SNA2019/UnmannedMaritimeSys-Small.pdf?ver=2019-01-15-165105-297>)

Though not sufficient in number for current and yet some not available currently, in near future, US navy is expected to own enough capability to swarm through ghost fleet, which signifies the continuous dynamic in naval build-up in US during China's sea power modernization plan. In short,

“Swarming” strategy could suggest an evidence to overcoming weakness of JOAC and ASB.

#### 4. Conclusion: Outcome of Dynamics, Crisis Managed or Escalated?

To mention again, despite the interdependency and cultural affinity,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brought a world with no MAD, and made states to act aggressively, enabling first perfect preemptive attack with lower cost than before if scale and accuracy holds. Additionally, Transparency Revolution created effective but vulnerable assets regarding C4ISR, becoming the first attack target for both US and China. Though it would be improbable to expect a preventive war between US-China in long term, as long as two different political aims collide in short-term, especially in specific region with a 3<sup>rd</sup> state in between, crisis management should be the main issue, since crisis could be escalated as fast as it could if there is a “slip”. The chance for the slip is increasing between US and China, as bargaining range in between is decreasing due to aggressive military dynamics in East Asia.

According to the short-term dynamic analysis from above, PLAN is following the path of US navy in a fast speed with current overall inferiority except the number of vehicles. To overcome the inferiority and taking advantage of a mainland defender, takes indirect posture to secure a free space for influence, focusing on submarine and destroyer attacks targeting sea ports,

sea lanes, support lines, logistic lines and valuable US navy assets (especially aircraft carrier) to raise the cost for conflict. And in long-term, aims to secure enough amount of naval power with modernized technologies to match US naval power, however, at the same time, US navy is also looking for strategies and technologies to enter the denied area, which puts two back to zero but with more crisis escalated. US-China, in short-term, though different in intensity, is showing a dynamic similar to India-Pakistan in South Asia.

Different from past bipolarity with Soviet when crisis was well-managed despite the competitiveness, US-China faces imbalance in military power with high technology and sustainable economy, creating a crisis escalation when two perceives each other as dangerous, which could evoke a first attack if cross the redline. Therefore, US, if China crosses the redline and intrude allies, will surely penetrate A2/AD in order to protect the allies, and both will target “the eyes” of each other, escalating the crisis. However, China with inferiority in conventional and nuclear power, and US with superiority, first counterforce attack with conventional force against China’s mainland (especially targeting inflexible command-control system, shallow communication system and inflexible weapon system) could be another option for US, which, if China perceives as dangerous, first attack would be the only option for both<sup>38</sup>. Thus, despite the fact that crisis management is necessary, if

---

<sup>38</sup> RAND. (2019). “Mainland Strikes and US Military Strategy Towards China.”

China crosses the redline, crisis escalation would be inevitable.

After a period of time, PLAN could match current US naval power, however, at the same time, US will not only figure out a way to enter the lair, but also pursue overall superiority continuously, stepping few steps ahead. It is probable to expect PLAN's counteraction against US UV technology combined with ASB in long-term, but in short-term, expecting a balance in naval strategy would be a probable prediction. Balance in this sense holds different meaning in that balance signifies US keeping its superiority over China in military power, preventing China crossing the redline. Since two states have the opposite political aims (US with defensive and China with offensive aim) and military balance (US with offensive balance and China with defensive balance), China aims to avoid direct confrontation with US by taking advantage of mainland defense, which, eventually results in indirect confrontation. On the other hand, US, aims to use overall superiority for relatively direct confrontation with more delicate methods, along with indirect approach at the same time by using unmanned technologies and making China fight ghost fleets. This further implies, it would be essential to view US-China military confrontation as asymmetric warfare between the great powers inside the strategic aspect, rather than viewing as mere great power warfare by looking at the outer surface.

Ergo, to maintain the balance, firstly, crisis management is necessary. However, if different political aims collide and no common interest exists to

'hold' the situation, crisis management would be difficult to hold. Then, as a second option, US maintaining its overall superiority in military dynamic is important for keeping the balance in Indo-Pacific. Maintaining the 'gap' and 'asymmetrical balance' with China (which also indicates decreasing the possible management range and forming an 'instable balance') could be the short-term solution for stability. Also in long term, the mechanism for keeping a balance would remain same in that total imbalance and asymmetry of military power creating relatively stable balance for US and China in East Asia. The term "asymmetric balance", to speak specifically, would be 'balance under instability and asymmetric balance of military power (imbalance of military power)', expecting a balance of total power under the condition of military power imbalance, though crisis escalates and instability increases.

참고자료 2: 이수지 보고서(영문)  
U.S EDGE Initiative Vs. China  
Belt and Road Initiative: Future of  
New Energy Alliance

이수지

연세대학교

Table of Content

I. Introduction

## II. History and Background

## III. Current Situation Analysis

- a. EDGE Initiative Interests – US, Japan, Korea Alliance
- b. Belt and Road Initiative Interests – China, Russia Alliance
- c. Korea's Stance and Role

## IV. Prospects: US Pressure, Strong US – Japan Alliance, and Korea's Complex Participation

## V. Conclusion

### **Introduction**

The use of energy is increasing alongside rise of technology,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After the World Financial Crisis in 2008, there seemed to be increasing cooperation in energy sector, but ten years after, today, not much progress or study regarding has been made. There is no doubt that American administrations and policies have a critical impact on the East Asian region. With Trump's rise to POTUS, Asian states have been curious and anxious as to what kind of changes his nationalistic administration will bring. The major policies that Trump has addressed have been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Asian EDGE Initiative. In 2017, the Trump administration began using the term Indo-Pacific as a replacement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ivot to Asia"

to describe an expanded Asia-Pacific region, seeking to articulate U.S. strategy towards an expanded Indo-Asia-Pacific region at a time when China's presence across the region is growing. With an objective of "free and open" region, it may also encompass the so-called Quad, an informal four-party grouping of regional democracies involving Australia, India, Japan, and the US. The strategy accepts and endorses "ASEAN centrality." Defense Secretary Mattis identified four main themes of Trump's Indo-Pacific Strategy: expanding attention on the maritime space by helping our partners build naval and law enforcement capabilities and capacities to improve monitoring and protection of maritime orders and interests; interoperability, to ensure that our military is able to more easily integrate with others;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civil society, and transparent governance; and private sector-led economic development with no empty promises or surrender of economic sovereignty. It implies further US engagement amidst a new context of overt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US' interest in the region seems obvious – economic and military. Nine of the world's 10 busiest seaports are in the region, and 60 percent of global maritime trade transits through Asia, with roughly one-third of global shipping passing through the South China Sea alone. America's annual two-way trade with the region is \$2.3 trillion, with U.S.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1.3 trillion in the region – more than China's, Japan's, and South Korea's combined. A quarter of U.S. exports go to the Indo-Pacific, and exports to China and India have more than doubled over the past decade. This



is made possible by free and open trade routes through the air, sea, land, space, and cyber commons that form the current global system. This paper will delve into whether Trump's Indo-Pacific Strategy and Asian EDGE Initiative will be successful or not? More specifically, what is the future of the possible "energy alliance" between US, Japan and China, Russia? Where and how do other East Asian states such as Korea fit in this equation? How will the different states react or respond differently in the energy field?

## **History and Background**

The United States has long had active foreign policies with East Asian states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With Japan, it has been especially dynamic since Japan's active participation in World War 1,2 and Cold War. During World War 1, both the US and Japan fought on the Allied side but Japan's later aggressive role in dealing with China became a continual source of tension. American public opinion strongly opposed Japan's invasion of China in 1937. At the same time, Japan depended on US, British, and Netherland for 90% of the oil. Japanese diplomats were sent to Washington in the summer 1941 to engage in high level talks but both sides realized that no compromise was possible between Japan's commitment to conquer China and America's commitment to defend China. Japan attacked Pearl Harbor in December of 1941, triggering the American declaration of war on Japan. Japan's Axis allies including Nazi Germany also declared war on the US following Pearl Harbor, officially starting World War 2. The crisis lasted until September 1, 1945 when

Japan surrendered in response to the American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Historian Akira Iriye argues that World War II and the Occupation decisively shaped bilateral relations after 1945. He presents the oil crisis of 1941 as the confrontation of two diametrically opposed concepts of Asian Pacific order. Japan was militaristic, and sought to create and control a self-sufficient economic region in Southeast Asia. Franklin D Roosevelt and his successors were internationalists seeking an open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The war reflected the interplay of military, economic, political, and ideological factors. The postwar era led to a radical change in bilateral relations from stark hostility to close friendship and political alliance. With the rise of Soviet power in the 1980's and onset of Cold War, Japan reassured United States leaders of Japan's determination against the Soviet threat, closely coordinated policies with the United States toward Asian trouble spots such as the Korean Peninsula and Southeast Asia, and worked cooperatively with the United States in developing China policy. The Japanese government welcomed the increase of American forces in Japan and the western Pacific and positioned Japan firmly on the side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threat of Soviet international expansion. By the late 1990s and beyond, the US-Japan relationship had been improved and strengthened. The major cause of friction in the relationship, e.g. trade disputes, became less problematic as China displaced Japan as the greatest perceived economic threat to the U.S. Meanwhile, though in the immediate post-Cold War period the security alliance suffered from a lack of a

defined threat, the emergence of North Korea as a belligerent rogue state and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expansion provided a purpose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In 2013 China and Russia held joint naval drills in what Chinese state media called an attempt to challenge the American-Japanese alliance.

Previous to Trump'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the Obama administration had cohered to a Pivot to Asia strategy, which represented a significant shift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US, taking the country's focus from the Middle Eastern and European sphere and began to invest heavily in East Asian countries. Also known as 'Pivot to Asia', the American military and diplomatic 'pivot,' or 'rebalance' toward Asia became a popular buzzword after Hillary Clinton, the Secretary of State coined it. Clinton'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Asia-Pacific, noting that nearly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resides there, making its development vital to American economic and strategic interests. She states that "open markets in Asia provide the United States with unprecedented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trade, and access to cutting-edge technology. Our economic recovery at home will depend on exports and the ability of American firms to tap into the vast and growing consumer base of Asia. Strategically, maintaining peace and security across the Asia-Pacific is increasingly crucial to global progress, whether through defending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countering the nuclear proliferation efforts of North Korea, or ensuring transparency in the military

activities of the region's key players." The 'pivot' strategy, according to Clinton, will proceed along six courses of action: strengthening bilateral security alliances; deepening America's relationships with rising powers, including China; engaging with regional multilateral institutions; expanding trade and investment; forging a broad-based military presence; and advanc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 **Current Situation Analysis**

### **EDGE Initiative Interests – U.S, Japan, Korea Alliance**

According to the World Energy Council, three primary policy areas, energy security, energy equity, and energy sustainability are evaluated to form a score which shows which countries have the most sustainable energy policies. United States is ranked at 15, Japan 31, South Korea 37, Russia 42, and China 72. This ranking shows us that the current energy power is more concentrated in the US alliance among US, Japan, and Korea rather than the challenging group, China and Russia. This may indicate a bigger incentive but also a bigger gamechanger.

Japan has been openly supportive of Trump'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The two are major allies in the energy field. With China's rise, the alliance has become only stronger with bigger incentive for the Japanese to thwart growing Chinese power. That is why Trump is determined with this

policy. U.S. Indo-Pacific strategy revolves around the simultaneous enhancement of America's economic engagement, security cooperation, and rule-making potential, objectives that align with key partners like Japan and Australia. Donald Trump announced on 2018 that he will allocate a down payment of 113 million dollars to fund new initiatives to bolster the digital economy, energy, and infrastructure of the Indo Pacific region. The following month, Vice President Michael Pence announced efforts to coordinate with Japan on \$10 billion in regional energy investment, establish a U.S.-ASEAN Smart Cities Partnership, and launch a five-country partnership for electrification in Papua New Guinea. The Vice President also announced the Indo-Pacific Transparency Initiative to help countries attract high-quality investment and counter corruption and coercive threats to their sovereignty, by strengthening civil society and good governance. Furthermore, 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a major bipartisan legislation, was signed into law by President Trump on December 31, 2018. This legislation enshrines a generational whole-of-government policy framework that demonstrates U.S. commitment to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and includes initiatives that promote sovereignty, rule of law, democracy, economic engagement, and regional security. Although we cannot be certain of the future prospect, we are sure that the energy competition will only elevate.

Recent positive developments in natural gas could rekindle bilateral energy trade in ways few thought possible just a few years ago. The discoveries of

large new shale gas reserves in the lower 48 states have made the United States the world's fastest growing natural gas producer.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noted that the planned expansion of the Panama Canal in 2014 would enable 80 percent of the world's liquefied natural gas (LNG) fleet to use the canal, dramatically lowering shipping costs and making LNG exports from the U.S. Gulf Coast dramatically more competitive in Asia.

The shale gas revolution i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and the abundant gas reserves in Alaska presen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ith a complementary opportunity: the United States should begin to export LNG from the lower 48 states by 2015, and Japan continues to be the world's largest LNG importer. Since 1969, Japan has imported relatively small amounts of LNG from Alaska, and interest is picking up in expanding that trade link, given Japan's need to increase and diversify its sources of LNG imports

### **Belt and Road Initiative Interests – China, Russia Alliance**

China is a growing challenger to the US global hegemony. The energy sector is one of the huge pillars which China is planning on using to realize this. China's main and open ally regarding energy is Russia. Sino-Russian relations have significantly deepened over the last decade. For one, arms sales have grown significantly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in recent years after recovering from a sizable decline in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They have also increased their level of military cooperation and the frequency of

joint exercises during this period as both countries oppose the US dominated international system and seek to challenge US influence abroad with the aim of creating a more multipolar international order. Russia is becoming increasingly dependent on China economically and has tried to address this issue by implementing new multilateral initiatives in Asia. For example, China reiterated its political support of Russia on a number of occasions, denouncing Western sanctions but stopping short of recognizing the Russian possession of Crimea. However, China did provide important technological assistance for building the so-called energy bridge between Crimea and the main Russian territory, which was necessary to stabilize Russian control over the peninsula. Another example is the bilateral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China-Russia Energy Cooperation Committee which was established in 2012 on the basis of existing bilateral energy dialogues.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is committed to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Eurasian continent. For this initiative to succeed, China needs Russia's support.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once again grown closer in recent years. This shows that whatever political blemish China and Russia have, it is being overcome by energy cooperation. At present, Chinese scholar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nergy security when discussing bilateral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cooperation. Since 2016, Russia has replaced Saudi Arabia as China's largest supplier of crude oil. Sino-Russian energy cooperation is also crucial for China's deep integration into the global energy

system through infrastructure projects under BRI. Moreover, as neighboring countries, China and Russia can achieve mutual security and reliable protection to a large extent, depending on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mutual economic relations.

### **Korea's Stance and Role**

Korea, being a middle state, with an overt security alliance with United States but also being close in proximity to China, is in a more complex situation. Energy is a key sector where ROK, US, and Japan interests meet.

On the one side, Korea is aligned with US and Japan. An area where all three nations have deep interests in defining the future rule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s nuclear energy. As China rises among the ranks of nuclear powers, it will become crucial for allies like Japan and ROK—both important actors in the global market, to ensure proper safeguards, nonproliferation practices, and high standards of transparency in the production of nuclear energy. With the United States' footprint in the nuclear energy sector receding due to policy uncertainty, unfavorable economics (mainly due to low natural gas prices), and the absence of a renewed 123 agreement with ROK, it is especially timely for Tokyo and Seoul to assume a greater role in defining the standards for global nuclear energy generation. Japan's recommitment to safe nuclear energy and ROK's commitment to the highest standards of transparency and nonproliferation as a global nuclear energy supplier will be critical to ensuring the future of this regime.



On the other hand, Korea cannot defy ties with close regional neighbor, China.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ims to connect Asia, Europe, and Africa through trade and infrastructure routes and covers more than 65 countries with a combined population of 4.4 billion. It serves as a blueprint for China's grand geoeconomic and geopolitical strategy of connecting itself to the global economy and strengthening its influenc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laid out a vision intended to be compatible with the goals and priorities of both China and the US, and with the current changing geopolitical landscap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in collaboration with Japan, is refining it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which aims to advance free markets and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Indian and Pacific Oceans. Concurrently, the Moon administration is offering a strategic vision that aims to be independent of both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China's BRI, and also to overlap with converging interests. At the 2017 Eastern Economic Forum in Vladivostok, President Moon Jae-in proposed expanding South Korea's cooperation with Russia on joint infrastructure, including ports, railways, natural gas pipelines, electric grids and Arctic shipping lanes. Cooperation with Russia is a central component of South Korea's New Northern Policy, because new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include North Korean participation can alleviate tension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over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t the same time, in 2017 the Moon administration's announcement of its New Southern Policy outlined a

set of core initiatives, including energy infrastructure, to strengthen its economic ties with ASEAN countries. In this way, South Korea has chosen to be a strategic balancer between powers by diversifying its energy partnerships.

## **Prospects**

“The relations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are on the rise,” President Putin said in a welcome message at a Russian-Chinese Energy Forum in Beijing. “An important part of these relations is energy cooperation which has lately received significant develop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is “very unlikely to deteriorate in the foreseeable future,” according to Alexander Gabuev, senior fellow and chair of the Russia in the Asia-Pacific Program at the Carnegie Moscow Center. The “two authoritarian regimes understand each other well.” “The Kremlin doesn’t fully trust China, but it knows that the national interests of both countries coincide in many areas and that China will be a predictable and pragmatic partner for years to come. By contrast, Moscow sees U.S. leaders as unpredictable and untrustworthy.” The Russian Chinese Energy Forum was a significant symbol of the future prospect of energy cooperation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Trump’s Free and Open Indo-Pacific seems to grow sweltering and increasingly steadfast in the future as well. U.S. Indo-Pacific strategy revolves around the simultaneous enhancement of America’s economic engagement, security cooperation, and rule-making potential, objectives that align with key partners like Japan and Australia. Donald Trump announced on

2018 that he will allocate a down payment of 113 million dollars to fund new initiatives to bolster the digital economy, energy, and infrastructure of the Indo Pacific region. The following month, Vice President Michael Pence announced efforts to coordinate with Japan on \$10 billion in regional energy investment, establish a U.S.-ASEAN Smart Cities Partnership, and launch a five-country partnership for electrification in Papua New Guinea. The Vice President also announced the Indo-Pacific Transparency Initiative to help countries attract high-quality investment and counter corruption and coercive threats to their sovereignty, by strengthening civil society and good governance. Furthermore, 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a major bipartisan legislation, was signed into law by President Trump on December 31, 2018. This legislation enshrines a generational whole-of-government policy framework that demonstrates U.S. commitment to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and includes initiatives that promote sovereignty, rule of law, democracy, economic engagement, and regional security. Although we cannot be certain of the future prospect, we are sure that the energy competition will only elevate.

## **Conclusion**

With Trump's rise to POTUS, Asian states have been curious and anxious as to what kind of changes his nationalistic administration will bring. The major policies that Trump has addressed have been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Asian EDGE Initiative. In 2017, the Trump administration began using the term Indo-Pacific as a replacement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ivot to Asia"

to describe an expanded Asia-Pacific region, seeking to articulate U.S. strategy towards an expanded Indo-Asia-Pacific region at a time when China's presence across the region is growing. With an objective of "free and open" region, it may also encompass the so-called Quad, an informal four-party grouping of regional democracies involving Australia, India, Japan, and the US. The strategy accepts and endorses "ASEAN centrality." Defense Secretary Mattis identified four main themes of Trump's Indo-Pacific Strategy: expanding attention on the maritime space by helping our partners build naval and law enforcement capabilities and capacities to improve monitoring and protection of maritime orders and interests; interoperability, to ensure that our military is able to more easily integrate with others;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civil society, and transparent governance; and private sector-led economic development with no empty promises or surrender of economic sovereignty. It implies further US engagement amidst a new context of overt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US' interest in the region seems obvious – economic and military. This paper has delved into the future of the energy alliance by evaluat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Trump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on one hand, and the Chinese-Russian energy alliance on the other.